



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14호

#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박성준, 김은아, 유재광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 연구진

### 내부 연구진

박성준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

김은아 부연구위원

### 외부 연구진

유재광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 발 | 간 | 사

최근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세 국가 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변화와 같은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갈등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방사능 물질 등 오염물의 국경 이동이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2019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및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듯이,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갈등요소가 결합하여 복합적인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인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동북아 분업구조를 형성했던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갈등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안보), 경제(무역),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였다. 각 장에서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다른 분야의 갈등과의 상호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적절한 이론적 틀(프레임), 빅데이터(GDELT), 텍스트 자료(언론 기사) 등 다양한 분석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준 박사, 김은아 박사, 그리고 경기대학교 유재광 교수가 참여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안보 갈등 .....	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9
1. 연구의 목적 .....	9
2. 동북아 안보에 관한 기존 연구 .....	10
3. 분석틀: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	13
제2절 중·일 안보 갈등 .....	19
1.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 .....	20
2. 남중국해 갈등 .....	24
제3절 한·중 안보 갈등 .....	27
1.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한중 갈등 .....	27
2. 샤드 갈등 .....	29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갈등 .....	32
제4절 한·일 안보 갈등 .....	37
1. 한일 간의 영토갈등-독도/다케시마 갈등 .....	37
2. 한일 레이더(RADAR) 및 지소미아(GSOMIA) 갈등 .....	41
제5절 소결 .....	45
1.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중·일 경쟁의 심화 .....	45
2. 한·중 관계의 표류 .....	46
3. 한·일 간 강요된 평화 .....	47
4.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 .....	49

**제3장 무역 갈등 ..... 5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55**

- 1. 연구의 목적 ..... 55
- 2. 무역분쟁 관련 선행연구 ..... 57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0

**제2절 GDELT ..... 62**

**제3절 동북아 지역의 무역 갈등 ..... 66**

- 1.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추이 ..... 66
- 2. 개별 사례 1: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 70
- 3. 개별 사례 2: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 83

**제4절 소결 ..... 91**

- 1.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의 양상 ..... 91
- 2.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 예측 ..... 92
- 3.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 해결 전략 ..... 94

**제4장 환경 갈등 ..... 9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97**

- 1. 연구의 목적 ..... 97
- 2. 환경 갈등 관련 선행연구 ..... 98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0

**제2절 동북아 환경 갈등의 양상 ..... 102**

- 1. 미세먼지 ..... 102

---

2. 방사성 물질 .....	108
3. 바이러스 .....	114
<b>제3절 소결 .....</b>	<b>120</b>
1. 동북아 환경 갈등의 양상 .....	120
2. 미래의 동북아 환경 갈등 예측 .....	122
3. 환경 갈등 해결 전략 .....	123
<b>제5장 결론 .....</b>	<b>125</b>
<b>참고문헌 .....</b>	<b>131</b>
<b>Abstract .....</b>	<b>143</b>

---



[표 2-1]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지 .....	31
[표 2-2]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지 .....	33
[표 3-1] CAMEO 사건 분류 .....	64
[표 3-2] 한국과 일본 간 사건 CAMEO 코드, 2019년 5월 ~ 2019년 6월 .....	75
[표 3-3] 한국과 일본 간 사건 CAMEO 코드, 2019년 7월 ~ 2019년 8월 .....	77
[표 3-4]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기사 주요 단어 .....	80
[표 3-5] 불매운동 기사 주요 단어 .....	82
[표 3-6] 한국과 중국 간 사건 CAMEO 코드, 2017년 1월 ~ 2017년 5월 .....	87
[표 3-7] 사드 관련 기사 주요 단어 .....	90
[표 4-1] 1990 ~ 2020년 기사화된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관련 이벤트 .....	103
[표 4-2] 1990 ~ 2020년 기사화된 동북아 지역 방사성 물질 관련 이벤트 .....	109
[표 4-3] 1990 ~ 2020년 기사화된 동북아 지역 바이러스 감염 관련 이벤트 .....	116

## 그림 목 차

[그림 2-1] 위협인식과 안보 갈등 .....	17
[그림 2-2] 중국의 영토 분쟁과 동중국해 갈등 .....	21
[그림 2-3]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	34
[그림 3-1] GDP 대비 수출입 비중 .....	55
[그림 3-2] 연도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	66
[그림 3-3] 연도별 사건의 수(GDELT 2.0 버전) .....	67
[그림 3-4] 동북아 국가별·연도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	68
[그림 3-5] 동북아 국가 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	69
[그림 3-6] 동북아 국가 간 사건의 수(GDELT 2.0 버전) .....	70
[그림 3-7] 한국과 일본 간 어조의 변화(GDELT 2.0 버전) .....	73
[그림 3-8]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GDELT 2.0) .....	74
[그림 3-9]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분야별 기사의 수 .....	79
[그림 3-10]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기사의 수 .....	81
[그림 3-11] 한국과 중국 간 어조의 변화(GDELT 2.0 버전) .....	85
[그림 3-12] 한국과 중국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GDELT 2.0) .....	86
[그림 3-13] 사드 관련 월별 기사의 수 .....	89
[그림 4-1]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관련 월별 총 기사 건수 변화 .....	102
[그림 4-2]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통합분류별 기여도 ..	105
[그림 4-3] 미세먼지 관련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 변화 .....	106
[그림 4-4] 중국 비판 관련 기사 분야별 건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	107
[그림 4-5] 동북아 지역 방사성 물질 관련 월별 총 기사 건수 변화 .....	108
[그림 4-6] 동북아 지역 방사성 물질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통합분류별 기여도 .....	112
[그림 4-7]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 변화 .....	112
[그림 4-8] 수산물 관련 기사 분야별 건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	113

[그림 4-9] 동북아 지역 바이러스 관련 월별 총 기사 건수 변화 .....	115
[그림 4-10] 동북아 지역 바이러스 감염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통합분류별 기여도 .....	117
[그림 4-11] 2014 ~ 2020년 바이러스 감염 관련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 변화 .....	118
[그림 4-12] 백신 관련 기사 분야별 건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	119



## 요 약

### 1 서론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세 국가는 동북아 분업구조를 형성함.
- 2010년대에 동북아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인 갈등이 크게 증가함.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등장함.
- 정치적·경제적인 갈등 외에도 미세먼지, 방사능, 감염병 등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 역시 정치적·경제적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안보, 무역, 환경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함.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체제를 모색.

### 2 안보 갈등

-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이론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분야 갈등 트렌드를 식별하고 원인을 분석함. 또한, 각 사례에 대해 유사동맹이론, 역사적 라이벌리 이론, 고전적인 동맹이론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

#### □ 중국과 일본의 갈등

- 중국과 일본 간 안보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례로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남중국해 갈등 등이 있음.
- 중국과 일본은 탈냉전과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갈등이 본격화함.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국력이 상승하고, 반면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보다 국력이 뒤처지게 됨. 이러한 상대적 힘의 분포 변화는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본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자 위협을 느낌.

- 일본과 중국 두 국가 간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 중국은 이를 내부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 고양에 이용하고 외부적으로는 팽창적인 영토 및 영해 정책에 사용함.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
-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큼.

### □ 한국과 중국의 갈등

-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 한반도 사드 배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을 두고 안보 측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음. 한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은 한국, 중국, 일본 간 안보 갈등 중 가장 낮은 수준.
- 사드 배치 관련 갈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간 위협인식이 점증하고 있는데, 한국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언제든지 북한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낌. 중국은 자국의 급격한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려 한다고 의심.
-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들 가운데 한 국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관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

### □ 한국과 일본의 갈등

-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 관련 문제, 레이더 및 지소미아 문제로 안보 갈등을 빚어왔음.
- 한국은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세적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려는 과거의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인식함. 일본은 한국이 북한 문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지나치게 포용적인 자세를 보

인다고 인식함.

-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주도하에 삼각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외부(미국)의 필요에 의한 관계이므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일 과거사 문제,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우경화와 민족주의 등과 같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다소 불완전한 관계가 될 것으로 예측됨.

### □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

- 동북아 지역에서는 안보, 무역,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갈등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
-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앞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협력이 발전할 여지는 충분함. 이를 위해서는 안보 문제와 비안보 문제의 분리, 이미 아시아 차원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다자협력 레짐과의 연계가 필요함.

## 3 무역 갈등

-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무역분쟁,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국가 간 정치적(외교적) 갈등이 무역으로 전이된 사례로,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와 일본에 대한 높은 기술 의존도가 한국에 약점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은 사례는 교역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가 자국에 정치적으로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무역 정책을 사용하는 예로 볼 수 있음. 다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제제재 등의 조치가 표적 국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 최근의 두 사례에서도 비록 한국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과 중국이 처음에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본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등장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유니클로 등 널

리 알려진 일본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중간재나 원료보다는 잘 알려진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선행연구와도 부합함.

## □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 전 세계 뉴스 기사를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 코드 체계를 사용하여 코드화한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경제보복(무역보복)의 배경이 되는 시기(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논의 및 공식화)와 무역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기에 기사에 나타난 양국(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 어조가 급격히 악화됨. 특히,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직후에는 최근 몇 년 가운데 양국 간 어조가 가장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화함.
-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주로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이 증가함.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 모두 더욱 큰 폭으로 증가.
- 한국과 중국이 갈등 끝에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룬 직후에는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이 급격히 증가.
- 한편, 국내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갈등을 전후로 관련 기사의 수가 급증하며, 무역분쟁과 관련된 주요 인물, 업체 등이 매우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데, 분야(정치, 경제, 국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남.

## □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의 예측

- 최근 무역 갈등이 주로 정치적(외교적)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무역분쟁이 재현될 수 있음.
- 다만, 상대 국가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제보복(경제제재) 조치가 일시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을 수는 있으



나, 보복 조치로 인해 자국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면 여론이 돌아서고 보복 조치를 주도한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할 수 있음. 이러한 양상은 특히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나타남. 따라서,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한 정권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및 기술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제보복 조치의 효과를 낮춘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

## 4 환경 갈등

- 동북아 지역의 국제 환경분쟁은 오염물이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환경권 침해 요소가 지배적으로 작용함. 대표적인 오염물질 문제로는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감염병 병원체 문제 등이 있음.

### □ 미세먼지

- 미세먼지는 2000년대까지 주로 황사로 인식되다가 2010년 초반에는 스모그, 미세먼지, 황사가 혼재하는 개념으로서 봄철 황사, 겨울철 스모그와 같은 계절적인 특수성과 결합하여 주기적으로 등장함. 2013년부터 연간 지속하는 현상으로서 미세먼지 개념을 사용하면서 관련 기사 건수가 급등하여 2019년에 정점을 기록함.
- 관련 기사를 ‘건강피해 저감’, ‘배출 저감’, ‘중국발’, ‘중국 비판’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중국발’ 영역 기사는 사회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상당수임. ‘중국 비판’ 영역 기사는 2019년도에 정치 영역에서 비중이 매우 커지는 등 해당 영역이 국내 정치 영역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3년 이전에는 ‘건강피해 저감’ 영역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4년부터 ‘중국발’ 영역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 ‘중국 비판’ 영역 기사는 2014년부터 2019년에 걸쳐 크게 변화함. 이는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방사성 물질

- 동북아 지역의 방사성 물질 관련 이슈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불거지고 있음.
- 2019년 이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주변 환경의 오염, 농수산물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내 피해 및 정부의 대응이 주를 이룸. 2019년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사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과 같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개입 요소가 갈등을 증폭함.
- 2015년 방사능 수산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이후에는 국제 환경분쟁 요소가 더 크게 부각됨. 이는 환경 갈등이 경제 또는 무역 부문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바이러스

- 바이러스 관련 기사는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함. 2000년대 초반 구제역과 사스 관련 기사는 바이러스 및 질병과 관련된 사실 및 위험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는 사실 전달 차원을 넘어 국내 및 국제정치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줌.
- 바이러스 관련 기사를 크게 방역체계, 입국 금지, 인종차별, 백신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국제적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인 입국 금지와 인종차별 영역 기사는 2019년도부터 크게 늘어남.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백신 관련 기사는 2020년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 환경 갈등의 해결 전략

-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갈등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중·일 세 국

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권역 내 협력 가능성은 있으나 개별 사안에서 가해국과 피해국의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음.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 사례, 일본의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된 사례가 국가 간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측면을 보여줌.

- 미세먼지, 방사능, 관련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환경 갈등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와 무역 등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제 1 장

서론

---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중요한 축이었으며, 역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방화 이후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관계는 동북아 분업구조로 불리기도 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미국과 국제적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할 만큼 국력이 성장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대립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러한 대립 상황은 전후 냉전시대부터 미국과 강한 동맹 관계를 맺고 성장하였던 한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 미국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대국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오랫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등 안보, 군사, 외교 전 영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은 양국 모두와 정치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한국에게 때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졌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가입을 둘러싼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도 정치적·경제적인 갈등이 커졌다. 2010년대 초반에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국과 일본의 갈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중국의 갈등, 2019년부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20세기 초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

결되지 않고 있으며,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를 둘러싼 분쟁 역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세 국가 간 방공식별구역,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데,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상이하여 한국과 관계가 꺾끄럽게 되는 상황도 종종 연출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인 갈등이 전통적인 국가 간 갈등이라면, 최근에는 환경을 둘러싼 갈등도 가시화되는 추세이다. 세 국가가 인접한 지역에 있으므로 한 국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 방사능 물질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바이러스나 감염병도 환경파괴 및 감염 매개체의 이동 등과 관련이 있는데,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서도 세 국가 간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적인 갈등은 과거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데, 한국이 경제성장을 충분히 이룬 만큼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2010년대에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한 분야에서의 갈등으로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외교적인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전이되고, 환경 갈등 역시 무역분쟁으로 이어진다.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시작된 중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 등이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방사능 유출에 따른 한국의 일본 일부 지역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의 분쟁으로 비화한 것이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둘러싼 세 국가 간 입국제한 조치 역시 환경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안보, 무역, 환경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한다. 2장에서는 안보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위협인식의 관점은 국가 간 상대적인 힘



이 변화, 역사적 적대감 등이 결합하여 위협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안보 경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3장에서는 정치적인 갈등이 어떻게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한다. 빅데이터의 하나인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바탕으로 갈등의 전반적인 추세가 데이터에 어떻게 정량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GDELT와 국내 언론 기사를 이용하여 개별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미세먼지, 방사능 물질, 바이러스 세 주제를 국내 언론 기사를 통해 분석한다. 이들 주제가 정치, 경제, 국제, 사회, 지역 등 국내 언론 기사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적인 갈등이 어떻게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5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복합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 체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한다.



# 제2장

## 안보 갈등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중·일 안보 갈등

제3절 한·중 안보 갈등

제4절 한·일 안보 갈등

제5절 소결



##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연구의 목적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불안정성(instability) 역시 증대하고 있다.<sup>1)</sup> 냉전 이후 국가 간 갈등(interstate conflict) 특히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국가 내 갈등(intra-state conflict)이 증대하는 흐름 속에서도 동북아시아는 중동과 더불어 항상 이 흐름에 예외적인 지역이었다. 그만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공세적 외교, 군비증강, 군사훈련, 군사적 마찰의 빈도와 정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군사적 활동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혹은 안정성의 퇴조를 이끄는 핵심 동인(major driver)은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과 주변국의 발빠른 현실정치적(realpolitik) 대응이다. 소위 말하는 ‘찬란한 90년대’—중국의 1990년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일컫는 말—를 겪으며 중국은 경제성장은 물론 기록적인 군사적 성장을 일구어낸다. 이런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은 기존의 미국이 주도하던 동북아 안보 환경을 그 근처에서 흔들고 있으며 중국과 이웃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미·일 동맹에 의존 소극적인 안보 전략을 구사하던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동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이런 흐름은 아베 수상 집권기에 본격화한다. 이 흐름은 아베 독트린(Abe Doctrine)으로 일컫는 일본의 외교·안보 적극주의로 구체화하여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심화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증대의 다른 큰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다. 소위 ‘북한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는 별개로 1993년 시작되어 여러 가지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그 양상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실

1)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의 주요국, 즉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그중에서도 동북아 주요 행위자(players)인 중국, 한반도—한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 관련 분쟁의 트렌드를 식별하고 그 트렌드를 추동하는 원인 혹은 기제(mechanism)를 찾아내고 이에 기반하여 다가오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북아 안보에 관한 기존의 연구(최근의 연구 포함)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 연구들이 놓치고 있는 점을 파악해 본다. 그다음 장에서는 현재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보 환경의 전반적 변화를 분석할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한다.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동북아 안보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가설을 도출한다. 그다음 장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간의 안보 갈등의 핵심 사례들을 선별하여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를 간단히 요약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2 동북아 안보에 관한 기존 연구

동북아 안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동북아라는 지역보다는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논의되어왔다. 특히 안보 논의의 특성상 국제 정치의 3대 안보이론에 근거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본 장에서는 이를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입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가 상당히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이 지역이 다가오는 미래 안보 환경에서 이 불안정성이 극대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동아시아 내부의 상대적 힘의 분포의 급격한 변화(radical shift in relative power distribution)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근거한 눈에 띄는 군사 성장을 이루어 영토와 영해에 대한 일방적 팽창주의적 흐름을 만들었다. 이런 일방적 행보에서 주변국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Betts, 1993; Friedberg, 1993).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는 물론이고 인도와 국경분쟁, 흥

콩 문제, 타이완 문제 등 거의 모든 문제에서 증강한 군사적 자신감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현상 유지 세력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현실주의 학자들은 분석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에 아시아 경제 및 군사 대국 자리를 내준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호주와 인도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동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안보 경쟁과 대립이 위협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Agrawal, 2020).

동북아시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가와 분쟁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이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분쟁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데 북한의 생존 강박과 여기에 기인한 핵 혹은 미사일 도발이 결국 미국의 예방 전쟁을 초래하여 한반도를 필두로 동북아시아 불안정성을 크게 증폭할 것이라는 주장(Cha and Kang, 2003)과 역사적 앙금 위에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놓고 겨루는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두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Calder, 2006)과 중국의 부상 자체가 동북아지역에서 평화롭지 않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중국 부상 회의론(Mearheimer, 2010)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주의 계열의 비관론적 연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동북아를 넘어서 동아시아로 시계를 확대해 보면 아시아는 자유주의 계열 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 레짐과 국제 레짐 혹은 국제기구들로 촘촘히 얽혀있다.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통해 협력적 관행을 이미 수십 년간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국가들 사이의 안보 협력을 증대해 오고 있다. 아·태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APEC)과 동아시아 정상회담(EAS) 등도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을 추동해 역내 안보 질서 안정화와 현상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Acharya, 2003/4; Duffield, 2003; Goldsmith, 2007; Xinbo, 2008).

아울러 무역의 평화적 효과(pacifying effect of trade)를 강조하는 일군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최근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과 역내 포괄적동반자 협정(RCEP) 타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단순히 안보 경쟁과 대립으로만 보기에선 무리가 있으며 여전히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국가 간 협력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Oba, 2020).

구성주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현실주의적 비판론과 자유주의적 낙관론의 중간지대를 연구해왔다. 이들은 특히 국가 간의 정체성(identity)에 초점을 두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이들의 결합 형태인 혼합 레짐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첨예화한다면 안보나 경제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더라도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반대로 이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 갈등을 해소하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은 일정 정도 관리된 갈등으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Nau, 2003).

구성주의 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두는 국가들은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이다. 중국과 대만은 민족적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하여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경고하는 연구가 존재한다(Berger, 2000).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 화해하지 못한 역사가 민족적 정체성의 차이 혹은 상호 배타적 민족주의로 이어지면 중·일 간 충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며(Fukuyama, 2005), 남북한 갈등도 충돌하는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구성주의 연구도 존재한다(Berger,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기존의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시아 자체보다는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연구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진행해왔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를 동남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분리해서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실체가 2차대전 후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 운명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동아시아 안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고유의 안보 동학(dynamics)을 식별해내지 못한 점, 두 번째는 지나치게 거대이론—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틀에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끼워 맞추는 이론 위주의 분석을 해온 점, 그리고 연구 당시의 안보 현황 분석에는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안보 환경 변화 예측에 대해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런 한계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그 분석 대상을 동북아 3국—한·중·일—로 좁혀 이들 국가가 벌이고 있는 안보 분야 경쟁과 갈등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분석과 전망을 위한 간략한 분석 틀—즉 위협 인식 모델—을 제시한다.

### 3 분석틀: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동북아 안보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위의 선행연구 리뷰에서 살펴본 대로 주로 현실주의적 접근법과 구성주의적 접근법이 대세를 이룬다. 전자는 동북아 국가 간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의 변화가 국가 간 안보 불안을 가져와 경쟁과 분쟁에 나서도록 만든다는 주장이다. 후자의 접근법은 역사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이 상호 배타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상호불신과 오해가 높아져 안보 분야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정치학 특히 안보이론에서 과연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나 정체성의 변화 자체가 안보 분야의 갈등과 분쟁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국가가 마지막 자위나 공격 수단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을 적이나 유사 적국으로 인식(perceive)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웃하는 국가가 군비를 위협적으로 증강하고 자국과 반대되는 민족적 혹은 역사적 정체성을 고양하더라도 이를 마주하는 국가가 이로부터 위협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안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나 갈등으로 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삼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의 안보 분야 갈등 트렌드 식별 및 원인을 분석하는 분석틀로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폭넓게 원용하는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이론을 일정하게 변형하여 차용하려 한다. 위협인식 이론은 월트(Stephen Walt)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기존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이 국가 간 분쟁의 원인으로 제시한 상대적 힘의 분포(relative power distribution)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짙다. 왈츠는 순수하게 국가들 간의 힘, 즉 군사력의 분포의 변화가 안보 딜레마를 가져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는데(Waltz, 1979), 월트가 보기에는

이런 힘의 분포 자체가 분쟁이나 갈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포의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즉 위협인식의 존재 여부를 국가 간 분쟁이나 충돌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월트는 이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균형 변화 요소들로 군사력 증가가 공격적 무기체계의 증강을 동반하는지, 군비 성장을 진행하는 국가가 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이를 진행하는지, 이 국가가 인접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Walt 1985).

본 연구는 월트의 이런 위협인식 모델에 기반하여 동북아 한·중·일 삼국의 안보 분야 경쟁과 갈등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월트의 위협인식이론에 동북아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가지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데 국가들의 안보 갈등을 추동하는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먼저 화해되지 않은 역사에서 기인한 역사적 적대감 혹은 앙금이 있다. 그다음으로 국가 간 상대적 힘의 분포를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변수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위협인식을 악화하여 이들 간의 안보 분야 경쟁과 갈등을 심화하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 앙금이란 동북아 국가들의 근대 국가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식민주의와 이에 기반한 2차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의 기억이 역사적인 집단 기억(historical collective memory)으로 구조화된 적대감을 말한다. 이것이 동북아 국가 사이의 안보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된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역사적 앙금이 이미 해소되었더라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안보와 관련한 이해가 충돌할 때, 무력 충돌이 아닌 외교를 통한 대화와 협력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동북아 한반도 중국 일본과 관련하여 이 역사적 적대감의 원천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2차세계대전이 깊게 연관한다. 특히 가해자의 단죄 불완전성과 가해자의 일관된 사과 부재이다. 주지하다시피 태평양 전쟁의 주범이자 동북아 식민지배의 가해국인 일본은 2차대전 후 같은 전범국인 독일에 비해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종전 후 곧 불어닥친 냉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주도로 반공산주의의 침병으로 활동하였다. 많은 전범 정치인이 숙청되지 않은 채 전후 일본의 정치에서 도리어 요직을 차지하며 냉전의 이름으로 역사적 사과와 배상을 미루게 된다. 이 지연된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delayed apologies)는 이후 동북아 국가들이 안보 관련 이슈로 충돌할 때마다 소환되어 불필요한 군사적 움직임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 역사적 경험은 냉전으로 이어지면서 완전 해소할 기회를 빼앗기고 동북아 국가 간에 두 번째 적대감의 증위를 만들었다. 이것이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이다. 냉전 초기 2차대전의 종전과 본격적인 근대 국가 형성을 경험한 동북아 국가들은 역사적 화해를 시도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았고 또 스스로 실천하였다. 중국은 1949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 중국 전 대륙의 통치권을 확립했으며 북한도 이 흐름에 합류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 주도의 유사동맹(quasi alliance) 체제에 편입하면서 중국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 따라서 냉전 시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 간 이데올로기적 냉전이 고착화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냉전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동북아에서 역시 그 갈등의 원인으로서 역할을 멈추고 이 빈 공간은 다시 과거 화해되지 않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민족주의적 대립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보통 냉전 해체 후 동북아 삼국을 지배한 일명 '신민족주의'는 과거의 역사적 적대감을 그 기반으로 하되 냉전 이후 급격히 발전된 동북아 상대적 힘의 균형(relative distribution of power)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기반으로 인위적으로 고양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이 신민족주의의 핵심이다. 일본은 이런 중국의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에 대응하려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이다. 반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중국과 일본의 대외지향적 공세적 민족주의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방어형 민족주의 성격을 지녔다.

이상에서 식별한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적 변수가 비물질적(nonmaterialistic) 변수라면 당연 동북아 안보 갈등에서 중요한 변수인 물질적 변수 역시 조명해야 한다. 실제 국가 간 안보 갈등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신)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간 안보 영역에서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힘의 차이이다. 주로 군사력(military power)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의 증감—특히 증가—여부가 이웃 국가에 안보상 불안감을 일으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도록 만들며 이런 상호 간의 안보 증가 행위는 서로의 안보 기반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 간 군사적 능력 혹은 힘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국가 간 안보 딜레마는 안보를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렇게 노골적인 물질적 변수(materialistic variable)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동북아 안보 갈등의 빈도와 정도는 동북아 주요 국가 간의 상대적 힘의 분포(relative power distribution)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신)현실주의 시각에서 특히 주목하는 변화는 당연 중국의 군사적 부상(China's military rise)이다. 1990~2000년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중국은 이런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부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거 덩샤오핑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성장에 기반한 본격적인 군사굴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동북아 힘의 상대적 분포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이 지역 안보 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일본의 기만한 움직임이다. 중국은 이미 2010년 일본을 GDP 총량 면에서 가뿐히 밀어내고 아시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중국은 일본과의 군사력 격차—군비의 총지출—도 본격적으로 벌리기 시작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군사 강대국으로 올라섰으며 그 차이는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졌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일차적 위협을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 갈등의 불뚱이 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안보 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불거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극심한 외교적 갈등은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의 영향력에서 예외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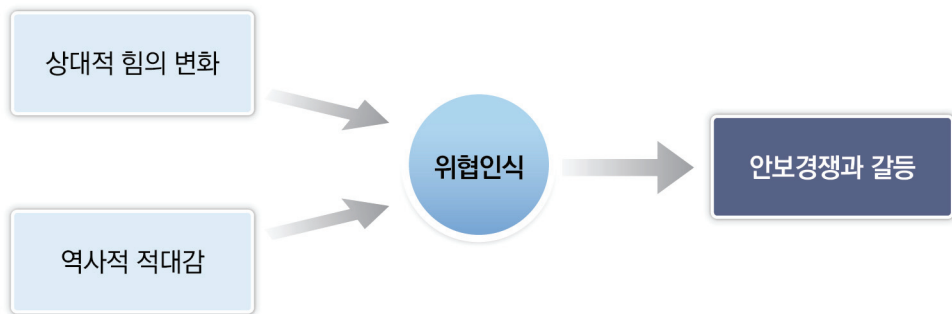
여기서 질문은 이상에서 일별한 비물질적 변수—역사적·이데올로기적 적대감과 민족주의적 앙금—와 물질적 변수—군사력—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동북아 국가 간 안보를 둘러싼 갈등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이다. 이 세 개의 변수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안보 갈등의 빈도 및 정도 증가와 연결할 수 있는 핵심 매개변수는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이다.

실제 많은 수의 안보 및 군사적 갈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적대감, 민족주의, 물질적인 힘의 균형의 변화 등이 이웃하는 국가들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매개로 각국에 퍼져나가 실질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를 동북아 삼국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비물질적 물질적 변수 모두 삼국 상호 간 위협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 화해하지 않은 역사적 앙금과 중국의 관 주도의 배타적 민족주의, 군사적 팽창은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반중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은 대중국 군사적 견제의 노골화는 중국의 대일본 위협인식을 악화시킨다.

한국은 이러한 대립각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먼저 중국과 관련 직접적인 안보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및 대북한 견제 움직임에 편승하면서 발생하는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 대한 위협인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공세적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중화사상에 기반한 한(漢) 민족주의라는 점도 한국의 대중국 위협인식 악화에 한몫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이를 배경으로 한 최근 중국의 한국 항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같은 일련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한국의 위협인식 역시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역시 일본만큼의 위협인식을 한국에 대해 느끼지는 않는다. 일본처럼 화해하지 않은 역사의 앙금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배타적 민족주의로 양국이 갈등하는 상태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빌미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사드를 배치한 것을 명백한 도발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높이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재 한·중·일 안보 갈등의 정도 즉 그 빈도와 강도는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위협인식과 안보 갈등

주의할 점은 이상에서 논의한 위협인식이라는 분석틀이 한중일간의 동북아 안보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때 상당한 설명력(explanatory power)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자 관계의 설명에는 부족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들 양자 관계가 역사적으로 독특하게 발전되어 온 경로 종속성(path dependency)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협인식이론을 근간 이론(baseline theory)로 삼되 이 이론의 가정을 크게 흔들지 않는 한 여러 보완 이론들을 사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한일 양국 간 안보 갈등을 다룰 때 삼각 혹은 유사 동맹이론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며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강대국 라이벌리(great power rivalry) 이론을 사용하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동아시아 내 체제경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반드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동맹이론(alliance theory) 역시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 제2절 중·일 안보 갈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일인자 자리를 두고 수십 년을 경쟁해 왔다. 근대화 이후 중국의 아성에 맞서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통해 아시아를 제패한다. 중국은 이후 1949년 현대 중국 수립과 함께 공산화하면서 미·일 동맹과 대립하며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냉전 시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각은 아시아에서도 미·소 양극체제를 가져와 중국과 일본의 대입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은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으로 그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찬란한 1990년대’를 지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고 2010년에는 결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아시아 최고—GDP 규모 면에서—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 군사력도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을 추월한 중국은 이후 격차를 더욱 벌려 이제는 일본이 아닌 미국을 상대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힘의 분포 변화는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제 일본이 상대해야 하는 중국은 과거 쇠락한 청조(淸朝)도 아니고 외부와 고립된 공산 중국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 대국에 가까운 중국이다. 중국은 특히 경제적 군사적 자신감에 근거하여 과거 일본이 화해하지 못한 역사를 재소환하여 내부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팽창적인 영토 및 영해 정책에 사용하면서 일본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이른다.

중국이 보기에는 일본이 이러한 중국의 팽창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군사력의 동북아 침투에서 최전선에 나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 정당한 영토 주장을 일본은 아직도 과거 식민지 시절에 근거하여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군사전략인 아시아 재

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항시 핵심 주축국으로 참여해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당연히 중국의 대일본 위협인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 동북아 내에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이미 넘어서 버렸고 군사적 영향력마저 일본을 크게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의 부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은 영토 문제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주권까지 위협받는 상황까지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위협인식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흐름을 이끈다. 특히 보수 정치세력인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일본은 적극적 평화를 기치로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 양국 간 나빠진 위협인식이 어떻게 안보 영역의 경쟁과 심지어 갈등으로 비화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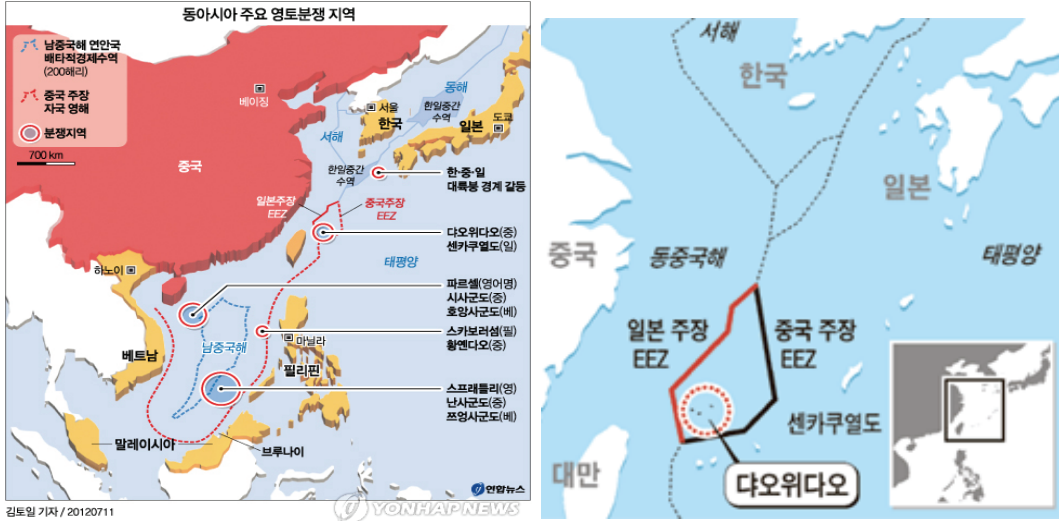
## 1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

현재 동북아 안보 분야 갈등의 핵심은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기 전 거의 반세기 아시아의 최고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이었던 일본은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두 자리를 모두 내어주게 된다. 순수하게 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면 일본은 이때부터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견제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순수하게 힘(power)의 균형을 둘러싼 갈등 그 이상이다. 그만큼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선 잠재된 갈등이 있었고 이는 화해되지 않은 역사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영토 문제와 연관한다. 일명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갈등은 2차 세계대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고 이 과정에서 센카쿠/다오위다오를 강제 병합한다. 이후 2차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으나 전승국 미국이 이 섬에 관한 소유권을 상당히 모호하게 처리했으며 이어진 냉전 시기 중국과 일본은 양국의 필요에 따라 이 무인도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수면 아래로 묻어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자신의 영토적 이익을 팽창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센카쿠/다오위다오 관할권 및 소유권 문제를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대결하게 된다. 이후 이 갈등은 양국 간 갈등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출처: 연합뉴스(2012. 7. 11.), <동아시아 영토분쟁> ① 中 팽창에 '끓는' 아시아, <https://www.yna.co.kr/view/AKR20120710110700083>; 연합뉴스(2012. 6. 16.), <그래픽> 中日 동중국해 갈등 격화,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6000600044>

### [그림 2-2] 중국의 영토 분쟁과 동중국해 갈등

현재까지 센카쿠/다오위다오 섬에 대한 양국의 주장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이 무인도를 중국이 가장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적 지배를 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거칠게 도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명나라 시대에 대만 어부들이 센카쿠/다오위다오 섬을 조업에 이용했고, 중국 사신들이 오키나와를 왕래하면서 센카쿠/다오위다오를 거쳤다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1893 서태후가 센카쿠/다오위다오 약초꾼에게 섬을 하사하였다는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 섬을 일본 제국주의가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895년 청·일 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이 이 섬을 일방적으로 강탈했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으므로 일본이 식민지배 종식을 알리는 2차대전 패배 이후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의거하여 센카쿠는

당연히 중국에 반환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의 패전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 제국주의 유산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한 측면이 강하므로 이 조약을 근거로 본 섬의 처리를 논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역사적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센카쿠/다오위다오 관할권에 관련한 기존의 국제법이나 조약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이 중시하는 것은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미국과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 일본은 이 패전조약에서도 센카쿠/다오위다오 섬의 영유권을 미국으로부터 그대로 인정받았으므로 중국의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소유권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후 미국이 센카쿠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다 1971년 일본에 반환하기까지 했으므로 일본의 소유권은 자동 재생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이 1960년 체결한 미·일 방위조약을 통해 미일 방위동맹 적용 지역으로 센카쿠열도를 포함한다고 언급했으므로 센카쿠/다오위다오 섬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이고 이런 해석에 기반한 2012년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의 일본 국유화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무인도 소유권에 관한 양국의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와 냉전 붕괴 후 적어도 1990년대에는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주요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냉전 시기 중국과 일본은 1973년 외교 관계 정상화를 맺으면서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와 기술지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일본은 중국 시장에의 진출이라는 경제적 이득과 당시 최고의 적인 소련으로부터의 안보 위협견제라는 안보적 이득을 챙긴 바 있다. 따라서 당시 양국은 센카쿠/다오위다오 섬 문제를 관계 정상화의 의제로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런 양국의 태도는 냉전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양국 모두 이 섬 주변에 내재된 경제적 이해—천연자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다오위다오 인근 해역의 어업과 에너지 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로 인한 해양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에너지 관련 양국 공동개발 및 협력 약속으로 갈등이 봉합한다.

하지만 양국의 센카쿠/다오위다오 관할권 및 소유권 문제는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 전략적 갈등으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자신감에 근거 동중국해 갈등 상태를 이용하여 자국의 영토적 이해관계를 팽창적으로 정의하는 교두보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묻어두었던 과거 역사적 양

금을 소환하고 내부적으로 발흥한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에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중국의 이런 동중국해에서의 공세적 움직임은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매우 악화시켰고 적극적이고 심지어 과잉적 대응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미 2010년 GDP 규모 면에서 아시아 1위 경제 대국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도발을 일본은 강화된 군사력에 기반한 영토적 팽창의 신호로 읽었고 따라서 일본은 이를 중국이 동북아에서 현상 유지를 깨뜨리려는 시도로 읽고 미국과 연대를 더욱 굳혔다.

이 와중에 2010년 9월 동중국해 위기가 발생한다. 위기의 원인은 센카쿠/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트롤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것이다. 이 사건의 와중에 일본 순시선이 중국 트롤어선 선장을 나포하였고 중국 정부는 일본 순시선이 나포한 중국인 선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일본 경제제재에 나선다. 특히 미사일, 하이브리드자동차, 풍력발전기의 필수 자원으로 알려진 희토류(중국이 93% 생산)의 대일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이에 일본이 한발 후퇴하면서 구금 중인 중국인 선장을 2주 만에 석방한다.

하지만 기존의 악화된 대중국 위협인식에 더하여 동중국해 위기까지 겪은 일본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중국과 전면 대치하게 된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다오위다오를 국유화한다. 아울러 섬 인근 해역에 일본 순시선 순찰을 대폭 강화했으며 여러 차례 미국을 설득하여 센카쿠/다오위다오가 미일 군사동맹의 보호 대상임을 공표하였다.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던 미국은 이런 일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중국을 견제한다. 미국은 만약 동중국해가 외부세력(중국을 잠재적으로 지칭)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일본과 협력하여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장 강한 수준의 외교적 성명을 발표한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단순히 동중국해에서의 미·일 동맹의 신뢰성(credibility) 확보 차원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불어나는 중국의 영토적 확장을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시도로 풀이한다. 따라서 동중국해 문제는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동북아 내 대표적인 안보 갈등으로 격화된다.

## 2 남중국해 갈등

비록 중국과 일본이 직접 대면하고 있는 해양은 아니지만 남중국해 도서 및 해양 경계선 문제 역시 두 아시아 강대국이 갈등을 보이는 핵심 안보 관련 이슈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원래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해양영토 팽창과 관련 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은 중국 지도부의 팽창적 국익 정의로 이어졌고 이런 자신감에 근거하여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며 남중국해에 중국의 일방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의 주요 군도—즉 동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군도,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가 모두 중국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남중국해 갈등은 역사적으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이의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귀속권 주장이자 해양 경계선 분쟁이다. 이 분쟁은 냉전 붕괴 이후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이루어낸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국력이 약소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차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 명목상 미국은 국제 규범(international norm)으로서의 항행의 자유를 근거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 규범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권국가의 국기를 달고 항행하는 국적이 확인되는 선박은 타국으로부터 항행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항행은 선박 운행의 자유, 항구 접근의 자유, 그리고 화물 선적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이를 인용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화는 다른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슬로건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소유권 및 영해권 주장, 그리고 경제적 자원에 대한 관할권 요구를 최전선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일방주의를 중국의 전형적인

패권 추구이며 일본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은 일본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상보급로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중국에게 태평양으로 출구를 제공하여 서태평양 제해권을 근간으로 하는 미·일 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서승원, 2017). 또한 일본 지도부가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남중국해 일방주의 움직임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처럼 중국 일방주의와 궤를 같이하며 중국 내부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대어 진행되는 패권 추구의 한 현상이라는 점이다(Hughes, 2016). 이러한 중국과 일본 간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대립각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설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2016년 항저우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비판하였다(연합뉴스 2016.09.05).<sup>2)</sup>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남중국해 중국 견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남중국해 도서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강력하게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남중국해 지원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대하며 이곳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싱크 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2년 8월 내놓은 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지금보다 “책임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임무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남중국해 공동감시 등 2가지를 꼽은 바 있다(Armitage and Nye, 2012). 실제로 아베 정권은 2016년 남중국해에 준항모 이세를 파견하고, 대잠 초계기 P-3C를 띄우는 등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한겨레 신문, 2016. 7. 13.).<sup>3)</sup>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다. 중국은 일본의 남중국해 관여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은 남중국해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2) 연합뉴스(2016. 9. 5.), 「아베 “남중국해 국제법따라야” vs 시진핑 “日 언행신중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5178452073>, (검색일: 2021. 2. 5.).

3) 한겨레신문(2016. 7. 13.), 「일본 왜 남중국해에 목매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2129.html> (검색일: 2020. 12. 29.).

이밖에도 일본은 중국을 공산당 일당 독재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대외팽창을 꾀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중국 견제용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에 미국, 인도, 호주와 함께 참여하여 대중국 견제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정구현 외, 2018).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경제 분야의 ASEAN+3(아세안+한·중·일)를 저지하였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에 불참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제3절 한·중 안보 갈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중·일 3개국의 관계 중에서 안보 경쟁 혹은 갈등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근대 국가 수립 이후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처럼 역사적 비극이나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양금이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며 상호 배타적으로 형성된 민족주의적 감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상대적 힘의 차원에서 이미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데다 서로 소유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영토 혹은 도서 갈등 역시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시기 중국과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안보와 관련한 갈등이 전무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두 이웃한 국가는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하고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려는 이슈는 북한 도발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 차와 이로 인한 갈등,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한 갈등, 그리고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방공식별구역(KADIZ) 갈등이다. 이 세 개의 갈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1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한중 갈등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중국 부상 자체가 강대국으로의 지위 상승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 혹은 중견국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평화롭던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후반기, 한국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이다.<sup>4)</sup>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은 중국 자체의 가파른 군비증가

가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군비 증가를 이루었고 이런 흐름은 2005년 이후 가속화한다. 결국 2008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국가가 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의 적극적 외교·안보 정책에 기회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로 재정적 위기를 겪은 미국이나 NATO 동맹국들과 달리 중국은 위기를 면할 수 있었고 이를 배경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 적극적인 군사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적극적인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외교·안보 행보는 결국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중국 견제정책인 아시아 피벗(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in Asia)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중국의 군사적 성장은 한국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대북 봉쇄정책의 흐름과 충돌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도화선은 이명박 정부가 외교정책 기조에서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천명한 데 있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빌려 “한미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이라 일갈했으며 “냉전 시기 군사동맹을 가지고 당면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MBC, 2008.05.30.).<sup>5)</sup>

한국이 중국을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된 데는 북한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이 그 핵심에 위치한다. 먼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의 조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기까지 한다.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이 명백함에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포격 이후 한·미 군사훈련에 각을 세우며 훈련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저의에서 기획·실행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에 이른다(조영남, 2012).

중국과 한국의 안보 갈등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공세적 반응이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

4) 조영남(2012), 「한중관계 20년의 안보 쟁점 분석」, 『국제·지역연구』, 21(4), p. 3.

5) MBC(2008. 5. 30.), 「이 대통령 방중 결산.. '무거운 귀국길」, [https://imnews.imbc.com/news/2008/politics/article/2171709\\_30836.html](https://imnews.imbc.com/news/2008/politics/article/2171709_30836.html), (검색일: 2020. 12. 27.).



한 대응 성격이 강한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 옌타이 부근 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VOA, 2010. 07. 20.).<sup>6)</sup> 물론 이것이 한미 서해훈련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띤 것이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당장은 직접적이지 않아도 북한의 도발과 맞물리면 언제든지 한국에 위협을 가해질 것이라는 한국의 우려를 자아내기에는 충분했다.

북한과 관련 한국이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또 하나의 움직임은 북한 붕괴에 대비한 신속대응군 편성과 운용이다. 중국은 주지했다시피 북한을 미국의 중국 동북지역 국경으로 진군을 막아주는 완충국(buffer state)으로 보고 그 전략적 가치를 두어왔다. 이러한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 미국 및 중국도 참가한 UN 주도 고강도 경제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대비해왔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자국의 국경만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직접 개입 친중 정권을 세울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지역에서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해온 것은 사실이다. 「미 국방부(펜타곤) 2018 연례 보고서」 특별주제(special topic)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하면 인민해방군(PLA)에게 북한발 난민 유입을 막고자 북·중 국경을 통제하는 것부터 대북 군사개입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파악했다(중앙일보, 2018. 8. 19.).<sup>7)</sup> 유사시를 상정한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2 사드 갈등

한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의 최정점에 있는 문제는 바로 사드(THAAD) 문제이다. 사드는 최종(혹은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미국이 개발한 대(對)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미사일의 최종단계(하강 혹은 재진입 단계)에서 히트-투-킬(hit-to-kill) 형식으로 파괴하는 형태를 지닌다. 1991년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스킨드 미사일 공

6) VOA(2010. 7. 20.), 「중국 인민해방군, 미-한 연합훈련에 맞서 서해 군사훈련」, <https://www.voakorea.com/archive/china-us-korea-98829689>, (검색일: 2020. 12. 31.).

7) 중앙일보(2018. 8. 19.), 「미 국방부 “한반도 관할 중국군, 유사시 대비훈련 급증”」, <https://news.joins.com/article/22896359>, (검색일: 2020. 4. 18.).

격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하였으며 실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issile Defense System)의 주요 구성단위로 현재 괌, 아랍 에미리트, 이스라엘, 루마니아, 그리고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박근재, 2016).

사드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자국의 안보 문제로 격돌하기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불가피하게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사드 도입 전반부에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드 한중 사드 갈등을 시작하였고 여전히 사드의 철거를 요청하며 한국과 대립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자 중국은 군사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를 동원해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맞서는 한국과 정면충돌한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지속적으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이를 억지하지 못하므로 신형 사드 체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이러한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혼란을 가중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위협적인 어조로 경고하며 미국이 한반도 간장 정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 7. 8.).<sup>8)</sup>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사드의 핵심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인데 사드의 중요 구성품인 이 레이더의 식별기능이 지나치게 고도화된 레이더로 탐지범위가 1,000~2,000km나 되며 이를 한국에 전개하면 중국의 동부 연안 미사일 기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의 동북 연안 미사일 기지가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박근재, 2016). 중국은 북한 미사일 대비용이라는 한국의 주장 역시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반발한다. 북한의 대(對)남한 미사일 사거리가 주로 40~150km이고 이런 단거리 미사일의 종말 단계를 방어하려는 사드는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고 한국은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Missiles)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

8) 연합뉴스(2016. 7. 8.), 「〈사드 배치 결정〉중·러 반발, 갈등 고조...동북아 정세 '흔들'」, <https://www.yna.co.kr/view/AKR20160708066351014> (검색일: 2020. 12. 27.).

은 대북한 억지력이 아닌 대중국 견제라고 주장한다(이기현, 2018). 아울러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억지하기보다는 북한의 극렬한 반발과 군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했다. 또한 사드 레이더를 통해 미국이 실시간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켜 동북아 내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러시아와 함께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입장과 정반대이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목적이므로 한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급격히 늘어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대응으로 국익—안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2016년 전후부터 미사일 도발 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새롭게 대응해야 하는 안보 위협임에는 틀림없다. 다음 표는 2016년에 이루어진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그 유효 사거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시

일자	도발 내용	사거리
1월 6일	4차 핵실험	해당사항 없음
3월 10일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동해 발사	약 300~1,500km
3월 18일	노동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동해 발사	약 3,000km 이상
4월 15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1발 발사	약 1,200km 이상
4월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해상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발 발사	약 3,000km 이상
4월 28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발사	약 3,000km 이상
5월 31일	무수단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발사	약 3,000km 이상
6월 22일	함경남도 신포 동해상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발 발사	약 1,200km 이상
7월 9일	노동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3발 동해상 발사	약 300~1,000km
8월 3일	노동 계열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 발사	약 1,200~1,500km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동해상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발 발사	약 1,200km
9월 5일	황해북도 동해상 노동계열 탄도미사일 3발 발사	약 1,200~1,500km

\*사거리 추정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CSIS, 2020,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을 숙명적인 위협으로 안고 사는 한국은 당연히 방어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여 탄도 미사일류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전환하면 한국은 더 고도화된 사드가 필요해질 것이며 이 미래의 사드들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미룬 것은 아니다. 한·중 양국은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통하여 사드 갈등을 일단락 짓고자 시도하였고 뒤이어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노력을 시도했지만 사드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한석희, 2019). 이런 외교적 노력의 실패에는 양국 간 점증하는 위협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명확한 대남도발에 대해 북한 편을 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언제든지 다시금 북한 편을 들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다. 반면 중국은 자신의 급격한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그리고 사드를 핑계로 부분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높아진 양국의 위협인식 때문에 양국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 이상 사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사드 철수의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급격한 중단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은 당분간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한 안보 갈등을 지속할 것이다.

### 3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갈등

앞의 두 사례에 비해 좀 더 직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안보 갈등 문제로 비화한 문제가 중국의 점증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문제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한 주권국가가 안보 목적상 외국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자국의 영토 주변에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반길주, 2020). 한국은 이를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이라 칭하고 운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과 일본 역시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중국(CADIZ)와 일본(JADIZ)-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니기에 침범할 때 주권국가의 군사력 사용을 자위권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구역으로 진입하려면 사전에 비행 목적과 비행경로 등을 해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이주은, 2016).

최근 들어 중국이 이런 관례를 어기며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횡수를 늘리고 있으며 그 침범 양태도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 중국의 최근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 매우 대범하게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종단하는 점과 러시아 군용기와 공동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범은 양국 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높인다. 아래는 2018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사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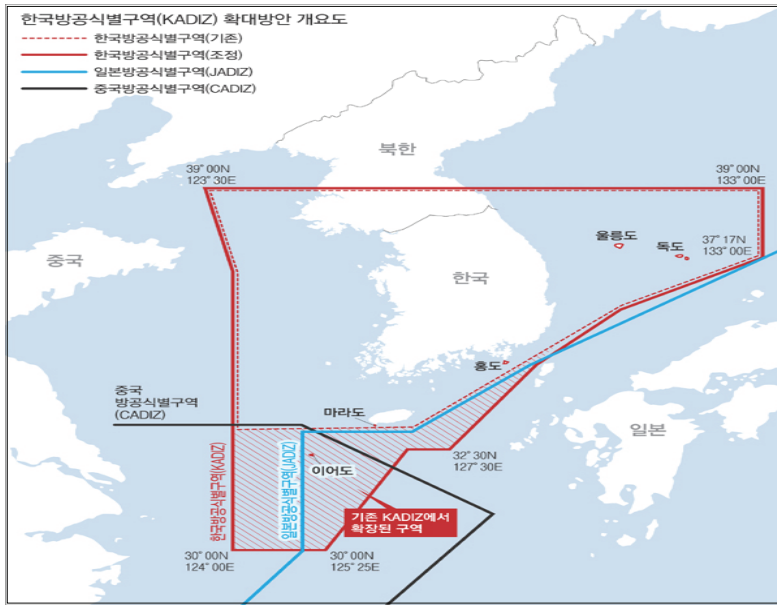
[표 2-2]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지

년도	일자	침범국
2020년	12월 22일	중국·러시아
2019년	7월 23일	중국·러시아
	1월 23일	중국
2018년	12월 27일	중국
	11월 26일	중국
	10월 29일	중국
	8월 29일	중국
	7월 27일	중국
	4월 28일	중국
	2월 27일	중국
1월 29일	중국	

출처: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

그럼 왜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횡수가 늘어나는 것일까? 이 원인으로서는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태생적으로 일부 겹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장으로 이어도 상공 일부가 우리 상공과 일부 겹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였다. 1951년 미군이

설정한 지 62년 만에 처음 확장한 것이고다. 이에 따라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상공까지 확대하였다. 다음은 한국이 2013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이후 한·중·일 간의 방공식별구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출처: 경향신문(2013. 12. 8.).

[그림 2-3]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하지만 지난 2018~2019년 집중적으로 발생한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입은 이런 식별구역의 중첩을 훨씬 넘어서는 도발적 침입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의 반발에 상식을 넘어서는 반응을 내놓는다. 2019년 7월 중국은 러시아 폭격기들과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강변했으며 러시아는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등 판소리를 했다(동아일보 2019. 7. 24.).<sup>9)</sup>

문제는 공중 방공구역이라는 특성상 사소한 착오가 군사적 충돌으로 이어질 수 있는

9) 동아일보(2019. 7. 24.), 「中-러 '합동 도발'... 영공 처음 침범당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724/96664717/1>, (검색일: 2021. 1. 30.).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의 늘어나는 침범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전투기를 출격하고 있다. 2019년 7월 침범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추정)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재진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아주경제 2019. 7. 23.).<sup>10)</sup> 2020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대규모 방공구역 침입 때도 한국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긴급 출격한 F-15K 및 KF-16 전투기가 침입한 군용기를 향해 방공구역 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 통신을 보냈다(조선일보 2020. 12. 22.).<sup>11)</sup>

주목할 점은 중국의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운용 행태가 점점 일방주의적 방식으로 선 회하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지난 1월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자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 당신의 국적과 비행 목적을 밝혀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으로 내보낸 바 있다. 중국은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에 대해 비행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증가는 당연히 한국군의 대응 강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은 외국 군용기가 방공구역에 진입하면 경고 통신을 먼저하고 침범이 영공 침범으로 이어지면 경고사격으로 대응한다.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해 즉각 퇴각하지 않으면 전투기에서 실제 화기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격파 사격 등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순수히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머무르면 영공이 아니므로 무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언제든지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높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이 자칫 주변국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군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19. 7. 23.).<sup>12)</sup> 실제 2019년 독도 인근 영공까지 침범

10) 아주경제(2019. 7. 23.), 「러시아·중국 군용기, 공군 F-15K 경고사격에도 '카디즈' 재진입」, <https://www.ajunews.com/view/20190723113256973>, (검색일: 2020. 12. 27.).

11) 조선일보(2020. 12. 22.), 「軍 “중·러 군용기 19대 동해 카디즈 진입」,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2/G2OPEYMYUNC5DPQNYN2RDJXUSU/>, (검색일: 2020. 12. 28.).

12) YTN(2019. 7. 23.),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軍, 경고사격」,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31636436987](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31636436987)

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한국군은 사상 처음 경고사격까지 가한다(한겨레신문, 2019. 7. 23.).<sup>13)</sup>

2020년에도 중국의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A-50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데 이어 A-50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은 전투기 20대를 출격시켰다. KF-16 8대와 F-15K 12대가 떴다. 일본도 F-15J와 F-2 등 전투기 10여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히 방공식별구역이 중첩해서 생긴 기술적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위협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와 견제의 한 축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미 일본은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 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지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 역시 이 전략에 참여할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발생한 점은 이런 해석에 더 무게를 실어준다.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증가는 한국의 대중국 위협 인식도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주요 언론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가 한국의 반중 정서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대법한 카디즈 진입은 한국의 대중국 위협인식을 악화시키며 대중국 견제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성격상 국가들이 이 구역을 두고 마찰을 벌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나빠진 위협인식은 양국의 방공식별구역 내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13) 한겨레 신문(2019. 7. 23.), 「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군, 전투기 띄워 경고사격」,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3065.html>, (검색일: 2020. 12. 28.).



## 제4절 한·일 안보 갈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제 한일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단순한 과거 역사에 대한 분쟁을 넘어서 독도 문제, 이를 넘어서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 대국 문제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악화일로만 남은 듯하다. 하지만 한일 갈등을 순수하게 상대적 힘의 분포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전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역사적 양급, 도덕과 윤리, 민족주의 등의 비물질적 요소들이 물질적 요소—즉 군사력—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미국이라는 동맹의 문제도 개입하여 양국 간 갈등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악화의 핵심에는 양국의 악화된 위협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보기에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거부와 수정으로 무장하고 한발 더 나아가 다시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고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 공세적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려는 과거의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한국의 압박은 일본의 대한국 위협인식 역시 악화시킨다. 일본은 한국이 지나치게 공동의 적(敵)인 북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졌다고 본다. 아울러 점차 그 발톱을 드러내며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게는 한국이 지나치게 포용적이고 때로는 눈치 보기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악화된 위협인식이 안보 갈등으로 구체화한 세 가지의 사례—즉 한일 간 영토갈등, 레이더 갈등, 그리고 지소미아 갈등—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 1 한일 간의 영토갈등-독도/다케시마 갈등

한일 안보 분야 갈등에서 영토갈등은 항상 핵심에 위치한다. 그 중심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관한 소유권 문제가 위치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일부였고 이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게다가 한국이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라고 여긴다. 반면 일본은 독도는 1905년에 국제법상 정당하게 일

본의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으며 2차대전 패전 후 전승국 미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이 자국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 주장한다.

이러한 영토갈등은 점차 한일 간 안보 갈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토갈등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소유권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토갈등이 민족적 상징(symbol) 혹은 정체성(identity)에 연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국제분쟁 연구에서는 나눌 수 없는 파이(indivisible pie) 문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문제와 인도와 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Vasquez, 1993).

핵심 요지는 아무리 조그마한 영토의 일부라도 민족의 수난이나 민족의 영웅적 행위가 일어난 장소 혹은 이를 대체하는 등기물로 여기는 장소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양국 모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국내적 합의가 생기며 이런 강경한 자세는 소유권 분쟁에서 양국의 외교적 해결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군사적 충돌을 언제든지 가능케 하므로 심각한 안보 문제를 초래한다.

실제로 한일 간 독도/다케시마 소유권 문제는 이 나눌 수 없는 파이 문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원래 독도 문제는 한일 간 식민지배의 청산과 관련한 문제였다. 과거 식민지였던 조선의 영토가 식민종주국 일본의 패전 후에 당연히 한국에 귀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승전국인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에게 독도 소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다행히 한국이 일본의 패전 후 실효적 지배를 통해 독도를 소유했으나 1965년 한일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도 경제개발이라는 당시의 시급성 때문에 독도 문제 논의를 미루어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를 남긴다. 이후 독도 문제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일본의 주기적 소유권 주장으로 이어져왔지만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제경쟁 속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안보 아키텍처 속에 잠재한 갈등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놓고 단순히 역사적 해석 차에 근거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 안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일본이 주

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외교적 루트를 통해 제기하면 한국이 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이것이 확산하여 외교전쟁으로 비화한다. 이는 양국 국내에서 상대국에 반대하는 시위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외교적 마찰은 급기야 구체적인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대결로 이어진다. 1996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자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도에 접안시설 및 부두 건설을 시작했고 일본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해상 자위대 전력을 보강한 것이다.

이후 일본의 독도 관련 대 한국 위협인식은 크게 나빠졌다. 물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화해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그후 등장한 고이즈미 내각부터 역사 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 경향이 나타나자 이에 대해 한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이것이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주권 강화 움직임이 한국의 독도 주권 강화 움직임과 충돌한 것이 2005년 한·일 외교전쟁이다. 2005년,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과 관련 조례를 선포하고 일본의 중앙정부 인사가 여기에 참여하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일본 외교전쟁을 선포하고 독도를 향해 다가오는 일본 연구 선박을 들이받는 방식으로라도 몰아내라는 초강경 지시를 한 것이다(Rozman and Lee, 2006).

이 사건은 독도 갈등이 역사적 영토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 양국의 안보 갈등으로 전화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한·미·일 삼각동맹의 주축국인 미국이 발 빠르게 개입하여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한일 간 역사적 앙금과 군사적 경쟁이 양국의 위협인식을 악화시켜 안보 영역에서 갈등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갈등은 동해상에서의 치열한 안보 경쟁으로 이어진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약 440여 회 순시선을 독도 근해에 파견하였으며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은 2008년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해군 1함대 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통제하며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해군의 3,8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2,700t급 신형 호위함, 1,900t급 구형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고 공군도 F-15K 전투기를 지원한다(조선일보,

2019. 8. 18.).<sup>14)</sup>

일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동적 방위력 개념을 통해 해상 자위대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가시키고 이지스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증강하는 한편 해상 자위대의 각종 사태에 대비한 즉응성, 기동성, 지속성, 다목적성 기능을 강화한다(박영준, 2010). 이와 아울러 해양영토와 관련 일본이 한국, 중국,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세적 상황에 몰린다는 국내적 비판에 대비하여 보통 혹은 정상 국가로의 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안보 적극주의를 채택한다(고봉준, 2013). 하지만 이러한 경쟁적인 군사훈련은 미국의 적절한 조율로 군사적 대치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한일 양국은 2012년 8월, 다시 한번 독도 문제로 충돌의 위기에 몰린다. 당시 국내정치적 문제로 코너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해방 이후 처음 독도를 단독 방문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대한국 위협인식을 자극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 위협론과 도발론을 크게 자극하여 한국에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촉발하기도 하였다(You and Kim, 2020).

이러한 일본의 ‘정상국가화’ 움직임은 아베 2기 내각(2013~2020년)이 들어선 이후 더욱 강경화한다. 아베는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란 슬로건 하에 강한 일본 만들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그 핵심 엔진에 아베노믹스가 위치한다.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와 팽창적 재정정책을 통한 일본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로 일컫는 아베노믹스 추진 후 일본은 주가 상승과 경기 활황 그리고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증대와 내수경기 증진을 경험했다. 이는 일본 국내 고용 사정의 개선으로 이어진다(이승주, 2018).

이러한 경제적 호조에 자신감을 얻은 아베 내각은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본격적으로 강한 일본 이미지를 투사하기 시작한다. 아베는 일본의 그 어느 수상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는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상하는 중국에 대비해 호주와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군사적 연대를 형성했다.<sup>15)</sup> 내부적으로는 군의

14) 조선일보(2019. 8. 18.), 「한·일 독도 대전 벌어지면 승자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2797.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2797.html), (검색일: 2020. 12. 30.).

15) Foreign Policy (2020. 9. 4.), S. Nathan Park, “Abe Ruined the Most Important Democratic Relationship in Asia: The outgoing Japanese prime minister’s ultranationalism destroyed ties with South Korea.”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후 최초로 자국 동맹국의 안위를 자국의 안위로 간주하여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목적에 따라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오직 방어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를 보유한 반쪽짜리 국가에서 일본의 안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로 한 발 더 나서게 되었다 (Akimoto, 2018).

아베의 안보 적극주의로 인해 한국의 대일본 위협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사실상 일본이 전후 요시다 독트린 하에서 지켜왔던 정경분리와 평화주의적 전통은 이미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이를 통한 독도의 군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영준, 2014).

## 2 한일 레이더(RADAR) 및 지소미아(GSOMIA) 갈등

한일 간 악화된 위협인식 때문에 과거에는 드물었던 안보 분야의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8년 발생한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다. 한국과 일본은 2018년 12월 한국 함정의 레이더 가동 문제로 최악의 갈등을 겪는다. 당시 동해에서 북한 조난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던 한국 광개토대왕함정에서 발생한 레이더가 과연 일본 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는지가 갈등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당시 한국군 당국은 북한 선박 구조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이 충돌한다(연합뉴스, 2020. 1. 9.).<sup>16)</sup>

이 갈등은 본질적으로 한국 함정의 레이더 운용에서 생긴 기술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사활을 걸고 외교적 공방을 벌인 끝에 대표적 안보 갈등으로 비화한 경우다. 일본은 한국 함정이 조난된 북한 선박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가동한 레이더가 사격 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대함·대공 레이더였으며 이 레이더가 인근 상공에서 경계 비행 중이던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했으므로 군사적 도발이라고 격하게 항의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레이더 사용이 북한 어선의 신속한 추적을 위한 것이지 일본 초계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목표가 북한 조난선박 구호로 명확히 정해진 해군 조난 업무 진

16) 연합뉴스(2020. 1. 9.), 「‘레이더-저공위협’ 한일갈등, 탐지음 공방으로 번질 듯」,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0034000503>, (검색일: 2020. 12. 23.).

행 중에 일본 초계기가 함정 위로 비행한 것을 오히려 군사적 도발로 볼 수 있다고 맞붙을 놓았다(오마이뉴스, 2019. 1. 5.).<sup>17)</sup> 이후 양측의 주장은 평행하게 달리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일본이 이미 외교적인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안보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점이다. 이미 한일 양국은 과거와 다르게 서로를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안보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로 적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양국은 이미 서로에 대한 위협인식이 노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서로의 외교·안보적 행보가 자신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위협인식이 악화하기 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유사 동맹(quasi alliance)의 문제라는 틀 안에서 조용히 해결되곤 했다(Cha, 2000).<sup>18)</sup> 설령 조난 구조 도중에 대함·대공 레이더가 가동하여 상대국의 초계기를 겨냥하더라도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절대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 동맹의 일원으로서 레이더가 상대방을 겨냥한들 이를 실수나 오작동으로 인식할 뿐, 도발이나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동맹국 간의 협력을 기치로 개입하여 갈등의 조용한 외교적 해결을 주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한 이후에선 상황이 달라진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친구나 동맹의 모습이 아니라 잠재적 적(敵)의 형태로 읽게 된다. 이번에는 미국도 레이더 갈등 중재에 실패하고 만다. 한일간의 갈등이 위협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증거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분야 갈등의 최정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관련 갈등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혹은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협정이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

17) 오마이뉴스(2019. 1. 5.), 「한일 '레이더 갈등'이 충격적인 세 가지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13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1138), (검색일: 2021. 2. 4.).

18) 유사동맹(quasi alliance)이란 국가 A가 국가 B와 C와는 개별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나 국가 B와 C는 따로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주로 한·미·일의 상황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하지만 B와 C의 관계가 A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는 의미에서 유사동맹이라고 칭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Victor Cha(2000)의 “Alignment Despite Antagonism”을 참고할 것.

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수집을 위한 이지스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20. 5. 24.).<sup>19)</sup> 지소미아는 양국이 이런 최첨단 정보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하면서 상대방에서 받은 군사비밀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 후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왔다. 하지만 이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한국의 입장 전환으로 2020년 8월 공식종료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정이 종료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이유로 유사동맹의 두 국가는 서로를 비난하며 일종의 안보 협력을 종료하고 만다. 그 배후에는 한일 간 악화한 위협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소미아 갱신 여부라는 안보 갈등의 시작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들이 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및 압류결정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된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한겨레신문, 2018. 10. 30.).<sup>20)</sup> 이 결정은 일본 내부에서 한국이 또다시 이미 사과와 배상이 끝난 과거사를 끄집어내 이슈로 만든다며 혐한론을 부추겼고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로 이어진다. 즉 일본이 핵심적 전략물자 수출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본식 경제 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의 경제제재가 가져온 한국 내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일본이 진정한 과거사 사과나 배상을 한 적이 없다는 원칙론적 비판부터 이제는 이를 과거사를 부정하기 위해

19) 연합뉴스(2020. 5. 24.), 「지소미아 종료 보류 반년…日 여전히 수출규제에 대응 고심」,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3026300504>, (검색일: 2021. 2. 1.).

20) 한겨레 신문(2018. 10. 3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확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81.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81.html), (검색일: 2020. 12. 29.).

수출 제재라는 경제제재 카드까지 쓴다는 비난까지 엄청난 반일 동향이 한국 내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과 한국 내의 반일 움직임은 한국 정치인들의 대일본 위협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당시 아베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에서 이를 해석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일본이 이제 역사적 도발을 넘어 경제적 도발을 한다고 비판하며 일본에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와중에 한국이 대응 카드로 쓴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연장 카드였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압박을 받으며 지소미아 협정 유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유지해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9. 8. 26.).<sup>21)</sup> 그동안 한일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미국 역시 지소미아 갈등이 안보 전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방한 중 정경두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지지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의 대전략 즉 중국 둘러싸기(encircling China)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안보적 논리, 심지어 강대국 미국의 개입도 한일 양국 간에 악화된 위협인식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경제 보복 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최대로 민감한 군사정보가 오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sup>22)</sup> 당시 한국의 대일본 위협인식의 악화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결 결정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sup>23)</sup>

21) 조선일보(2019. 8. 26.), 「덧새전 “지소미아 전략적 가치 충분하다”던 정경두, 이번엔 “효용 가치 높지 않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244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2444.html), (검색일: 2021. 2. 5.)

22) 연합뉴스(2019. 8. 22.), 「[지소미아 종료] 체결에서 종료까지 2년 9개월 일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0800504>, (검색일: 2020. 12. 28.)

23) 연합뉴스(2019. 8. 22.), 「[지소미아 종료] 우여곡절 끝 탄생...한일갈등에 결국 역사 속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173400504>



## 제5절

## 소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의 안보 분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 갈등의 양상은 다양해지며 그 정도도 더 심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핵심 원인으로 동북아 3국 간 악화된 위협인식을 지목했다. 위협인식은 1차적으로 동북아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힘의 균형 변화에 기인하지만 이에 더해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역사적 앙금 혹은 적대감이 여전히 한몫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밝혔다. 이런 분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관한 예측을 세 가지 차원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 1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중·일 경쟁의 심화

본 연구에서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이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한 것은 중국이 단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즉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국 지위를 놓고 경제와 안보라는 주요 두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성격 하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가진다는 국제정치학의 상식적 가정만 받아들여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안보 이익의 극대화를 팽창을 통해 찾으려 할 것이고 이는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 패권국들이 주로 패권 경쟁의 종착점에서 벌이던 전쟁을 21세기에 반복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군사적, 경제적, 도덕적 비용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패권 경쟁은 곧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 지출

이 비슷해지거나 중국이 미국의 그것을 넘어서는 2040~2045년경으로 '추론'할 뿐이다.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 의탁해온 일본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이다. 따라서 중국의 견제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 미국과 일본은 안보협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일 동맹에서 일본의 군사적 자율성 증대와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단순히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쿼드 문제 등 안보 갈등은 물론 첨단 산업과 이에 필요한 전략물자 그리고 역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주도권 경쟁 및 정보 및 우주개발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중국과 대결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동중국해 문제이다. 앞서 본 연구가 지적한 대로 현재 중·일간의 위협인식 악화는 순수한 힘의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역사적 앙금 혹은 적대감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영토갈등 문제를 떠나 중국 대 미·일 동맹의 대결 문제이며 동북아에서 화해하지 못한 역사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앞으로 중·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동중국해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 번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면전이 아닌 작은 규모의 해전을 포함한 군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중국과 일본의 서로에 대한 위협인식을 악화시켜 중·일 관계를 점점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2 한·중 관계의 표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이로 인한 아시아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힘의 변화는 한국과 중국의 안보 관계의 미래에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유보된 수용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사드 갈등이나 방공 식별구역 갈등은 점차 양국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북한이라는 변수에 관한 언급 없이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가 한·중·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북한은 도발하는 북한이라고 상수로 취급한다고 볼 때 향후 한·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현재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그리고 그물같이 얽혀있는 양국의 교류망을 고려할 때 이런 전망이 좀 생경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 예측이란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해야만 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위시로 한 대중국 포위망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인식하여 적극 포용하려고, 심지어 포섭하려고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북한 문제와 경제적 의존도를 지렛대로 사용하려 들 것이다. 반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관을 강조하며 미국편에 서라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을 경사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한국은 중국의 숨은 의도를 아직 모른다.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이 시진핑이 말하는 평화 굴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서양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이 예측하는 나쁜 패권국(malignant hegemon)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 모른다. 두 번째,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 신화—중국이 중립적이며 북한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곧 깨어날 것이다. 세 번째, 현재 중국의 패권국 부상의 추세와 양태를 볼 때 중국은 더욱 일방주의적 흐름을 더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하는데 한국이 이를 쉽게 감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 중국이 부상할수록 한국에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넘어서는 그 이외의 안보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미·중 사이 선택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유보하다가 최종적으로 미국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한·중 관계가 과거처럼 원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벌써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 의존도 줄이기와 외교 다각화 주장들은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 3 한·일 간 강요된 평화

한일 관계는 본 연구가 지적하는바 현재 양국 관계의 최저점을 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이상 나쁜 선택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럼 이런 한·일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보면 어떨까? 한일 관계의 중장기적 미래는 한국과 일본이 결정하기보다는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배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우경화와 민족주의 문제만을 놓고 보면 한일관계가 다시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한일간의 경쟁도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한일간의 양자 관계 미래 예측은 비교적 손쉬워진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심지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라는 4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군사적 협력 강화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방주의, 그리고 주변국과의 국경 갈등 등 여러 가지 팽창주의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한국 역시 사드와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갈등을 통해 중국의 일방주의적 압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삼각 동맹으로의 복귀 및 삼각동맹 강화라는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은 이 냉전 시기 동맹으로의 복귀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자 간의 마찰, 즉 지난 한 과거사 및 영토 문제를 수면 아래로 다시 묻어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양자 관계 복원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의 의지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제 체제 수준의 전략적 경쟁이 만들어 낸 동북아시아 내 중국 견제 흐름을 위해 한일 두 역사적 라이벌이 갈등을 일시 봉합하고 협력이라는 질서를 미국의 리더십 하에 다시 재창출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맥락에서 향후 한국과 일본은 강요된 협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강요된 협력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일본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에 따라 미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의 복원을 시도하더라도 일본의 역할 증대를 일부 허용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의 군사력의 일부분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로 보완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한 축으로 하면서 끊임없는 위협인식을 상대방에게 느끼는 동맹 속의 안보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 4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

### 가. 동북아 다자협력의 역사

동북아에서 이기적 국가 간에 상호 경쟁적이고 때로는 상호 갈등적인 행동을 다스리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비교적 최근이다. 이렇게 동북아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목소리가 늦게 등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과거 혹은 역사의 부담(burden of the past)이다. 청일전쟁, 식민지배,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냉전으로 이어진 역사적 적대관계와 상호불신은 한·중·일 삼국의 화해(reconciliation) 라는 기본적인 과정 없이 냉전 붕괴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으며 아직도 동북아 삼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남아 이들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경험을 했으나 과거를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청산하고 화해라는 의도적 과정을 거친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자주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Friedberg, 1993).

두 번째는 2차 대전 이후 냉전을 거쳐 들어선 전후 질서가 유럽은 집단 안전보장에 의한 다자 안보협력체제였던 것에 반해 동북아에서는 양자 안보체제였다(Hemmer and Katzenstein, 2002). 이렇게 상이한 협력체제는 이후 국가들 간 협력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자는 다자간 협력과 조정 그리고 컨센서스를, 후자는 양자간 지난한 이해관계 조정의 반복이라는 협력 메커니즘 등장을 가져왔다. 특히 양자주의가 지배적인 동북아는 같은 기존의 화해되지 않은 역사를 배경으로 경제협력은 물론 안보 분야 협력도 일정의 전진을 이루어 내고도 역사적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때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의 부재이다. 보통 무정부적인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공공재로 보고 이를 공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선한 강대국(benign power)이 필요한 것이 국제정치학의 상식인데 동북아에서는 이 공공재 공급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전후 미국이 이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견제 때문에, 냉전 붕괴 이후에는 중국의 도전 때문에 협력이라는 공공재 공급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네 번째는 경제적 통합의 부재이다. 모든 국제관계 이론이 강조하는 점은 국제관계에

서 협력이 가장 잘 일어나는 영역은 비(非)안보영역(non-security areas)이며 협력이 가장 잘 일어나지 않는 영역은 안보영역(security areas)이다. 비안보영역에서 경제영역은 모든 다자협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으로 대부분 다자협력은 경제적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유럽통합 역시 경제통합이 어떻게 정치사회 통합 그리고 나아가 외교안보 통합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동북아 국가들은 이런 경제적 통합이 일어나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일본은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한국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으로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형 산업국가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중국은 그다음 주자로서 개혁 개방을 1978년에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이 1960~70년대 성취하였던 추격형 고도성장기에 들어선다. 이렇게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은 경제적 통합유인의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런 불리한 상황은 점점 변하고 있다. 이 상황 변화의 핵심에는 동북아 삼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즉 공공성이 강한 문제들이 위치하여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안보, 경제, 환경 모두 국제관계에서 공공재(public goods) 역할을 한다. 즉 이 세계의 이슈 영역에서 3국 중 한 국가만 나머지 두 국가의 희생하에 자국의 이익을 영원히 늘릴 수 없다는 얘기이다. 나의 안보 강화는 주변과의 군비경쟁과 이로 인한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여 전쟁이라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변국에 경제보복을 통해 취득한 자국의 경제적 이득 역시 피해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져와 근린 궁핍화(Beggary neighbour)라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이며 환경 역시 자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주변국으로의 전가하면 주변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동북아 삼국의 삶의 질을 기반부터 위협할 것이다. 동북아 삼국이 이 3개의 공공재에 대한 다자협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 다자협력의 핵심에는 '레짐(regime)'이 존재한다.

## 나.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창한 레짐 이론은 크래스너(Stephen Krasner), 코헤인(Robert Keohane), 러기(John Ruggie) 등이 제안하였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레짐은 국제관계의 주어진 문제 영역에서 행위자들—본 연구에선 동북아 삼국들—의 공통의 기대에 근거해 형성되는 일련의 공식적, 비공식적 원칙과 규범들 규칙들, 의사

결정 과정들을 일컫는다(Ruggie, 1975; Krasner, 1983; Keohane, 1989). 따라서 이 레짐은 공식적 원칙과 규범들 그리고 제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존재하는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보다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삼국이 위에서 제기한 안보와 경제, 환경 영역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 레짐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레짐이 한중일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과 이후 협력의 제도화를 가장 잘 실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이 동북아 삼국의 안보, 경제, 환경 협력을 위해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포럼(forum) 기능이다. 포럼 기능 혹은 컨퍼런스 효과(conference effect)는 동북아 삼국이 공통의 관심사 혹은 문제를 레짐으로 가져와서 함께 토론하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 문제가 삼국 모두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 것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기능을 레짐이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재(mediation)의 기능이다. 보통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은 이해 당사자가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 경우 국가들이 권위를 이전해 만든 제3의 독립적인 패널이나 기구가 중재를 해서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이 중재이다. 이 중재는 국가들이 합의하여 형성한 독립적인 중재 기구의 창설이 핵심이다. 최근에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패널(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r Panel)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중재기구를 설치해 포럼을 통해 해결 불가능한 이해 충돌이나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세 번째는 집행(compliance)의 역할이다.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을 만들어서 중재를 위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형성하면 이후 이 메커니즘 혹은 패널의 결정을 회원국—즉 한중일—이 받아들여야 한다. 즉 동북아 협력 레짐의 중재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르는 구속력은 레짐의 순기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한·중·일 삼국이 레짐을 만들고 중재를 위한 패널 기구를 제도화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네 번째는 사회화(socialization) 기능이다. 많은 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기적인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화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동북아 협력 레짐에 적용하면 거의 반세기 동안 역사적 앙금과 불

신으로 반목하던 한국, 중국, 일본이 레짐에 참여하여 삼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이타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3국 모두 레짐에 참여하여 포럼을 통해 경제 안보 환경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3국 모두의 문제인지를 인지하고 자국의 이기적인 정책이 결국은 다른 국가들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국에게도 어떤 피해를 주는지 깨달을 것이다. 아울러 이해 충돌의 문제를 중재를 통해 해결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문제해결을 직접 경험하고 이 문제해결이 자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도 경험해 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 삼국이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사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북아 레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보 문제와 비(非)안보 문제의 분리다. 국제정치학의 상식 중의 상식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들이 초지일관 이기적이며 협상이나 타협을 매우 꺼려한다는 점이다(Baldwin, 1993).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갈등이나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 중국과 한국의 사드 문제를 처음부터 동북아 레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동북아 다자 레짐에서는 협력을 위한 시계(視界)를 비(非)안보 이슈에서 안보 이슈 순서로 구분하여 비(非)안보 이슈에서 협력적 관행을 안보 이슈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서 한·중·일 미세먼지 방지 공동 협약을 실천한 후 경제통합, 즉 한·중·일 FTA를 실현한 후 그다음으로 전통 안보 이슈—영토 분쟁과 군비경쟁—에 관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실현하는 식이다.

두 번째, 레짐 간 연계(inter-regime linkage)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동북아만 넘어서면 아시아 차원에서는 무수히 많은 레짐들이 존재한다. 아세안(ASEAN)을 비롯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3(ASEAN + 3) 등이 그것인데 이런 레짐들과 동북아 레짐이 연계하는 것도 동북아 레짐의 내구성(durability) 강화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이다. 물론 이들 레짐과 중복(overlapping)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나 동북아 고유의 역사성을 반영한 동북아만의 레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왔다(Fukuyama, 2005). 따라서 이런 기타 아시아 지역 레짐과의 연계를 통해 동북아의 공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



# 제3장

## 무역 갈등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GDELT

제3절 동북아 지역의 무역 갈등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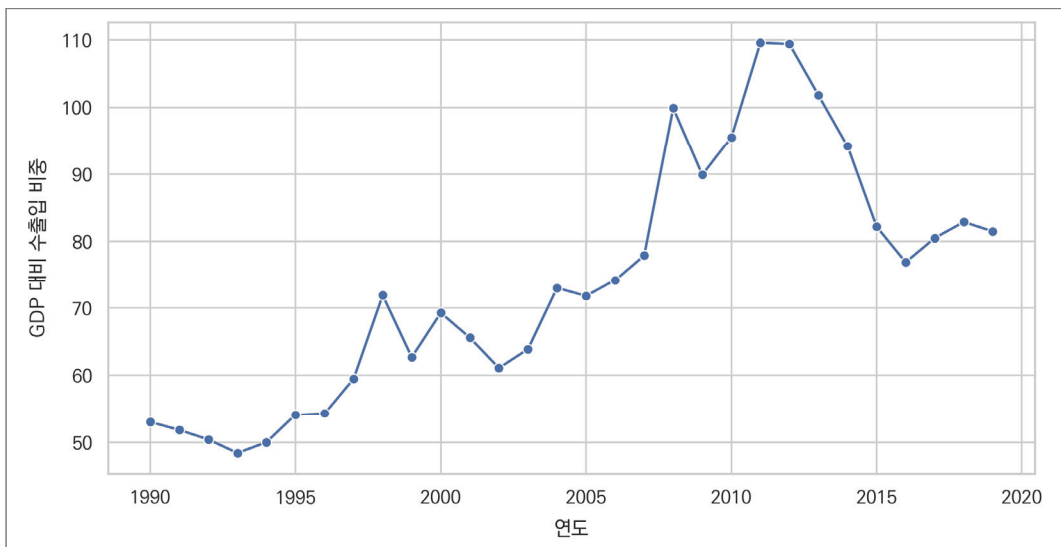
##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연구의 목적

무역은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 역시 감소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강두용, 2019), 여전히 무역은 한국 경제의 주요 요소이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으므로 한국의 경제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3-1] GDP 대비 수출입 비중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동북아 분업구조를 형성할 만큼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정인교 외, 2003; 이재호 외, 2010).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중·일 세 국가 간 정치적인 갈등이 커지고,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지면서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2016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였는데,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1일에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무역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이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2010년에는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2019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자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인 갈등 외에 환경과 관련된 갈등이 경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본 정부가 적절히 수습하지 못하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자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의 8개 현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해당 조치에 대해 제소하였다. 이 상황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2018년 2월 1차 패널에서는 한국 정부가 패소하였으나, 2019년 4월 2차 패널(상소심)에서는 한국 정부가 승소함으로써 최종 승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외교적인 갈등의 결과로 무역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일 세 국가가 미·중 갈등,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갈등이 미래에도 앞의 사례들과 같이 경제적인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 경제적인 보복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의 무역분쟁을 분석한다. 먼저, 동

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갈등과 경제보복(무역분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통해 이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빅데이터의 하나인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와 언론 기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조치, 그리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이 관련된 동북아 지역의 무역분쟁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무역분쟁 관련 선행연구

무역과 국제관계는 다양한 측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 간 관계를 한 측면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역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국제관계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측면은 국제관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며, 이 중에서도 국가 간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무역 정책은 국제 정책의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Heilmann, 2016). 한 국가는 교역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가 자국에 정치적으로 순응하게 할 목적으로 무역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Fuchs and Klann(2013)는 달라이 라마의 공식적인 방문 또는 달라이 라마와 고위급 관계자와의 회담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달라이 라마와 고위 정치인과의 회담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단, 표본 기간인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하던 시기에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달라이 라마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불거지고 있는 국제적인 갈등의 일면을 보여주며, 교역국과의 국제적인 갈등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Aidt and Gassebner(2010)는 전제정치체제(autocracy)를 가진 국가의 정부가 민주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보다 무역에 더 크게 관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전제정치체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하나 이상의 국가가 다른 국가나 단체 등에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역시 무역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제재의 수단 및 범위는 무역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 등 더욱 넓은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7월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주요 핵심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조치 역시 경제제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제재는 표적이 되는 국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해당 국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외교적 입장에서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다. 가령,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저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김원중(2019)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에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작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제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한국 경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경제제재가 언제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제제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표적이 된 국가가 국제사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정치적으로 순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Kim and Lee, 2020). 경제제재가 표적 국가의 무역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Afesorgbor, 2019), 무역량의 감소가 반드시 정치적·외교적 입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재를 받는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성과 정치적인 갈등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요소가 우선한다는 견해와 경제적인 요소가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Davis and Meunier, 2011). 정치적인 요소(우호관계 또는 적대관계)가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논거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의 위험(risk) 관리 필요성, 우호적인 관계 또는 적대적인 관계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이 거론된다(Pollins, 1989a; Pollins, 1989b). 또한, Guiso, Sapienza, and Zingales(2009)에 따르면, 국가 간의 신뢰가 강할수록 무역과 같은 경제적인 교류가 증가한다. 반면, Maoz(2009)는 국가 간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갈등이 줄어든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경제적인 요소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Davis and Meunier(2011)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외교 관계의 악화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자국 정부를 통해 외교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을 꾀했다.

한편, 국가 간 갈등 상황은 상대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매운동(boycott)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매운동은 전쟁이나 외교 관계 단절과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Heilmann, 2016). 이와 관련하여 불매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대중의 참여가 중요한데, 개인이 불매운동에 참여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와(John and Klein, 2003) 인터넷의 발달로 불매운동을 조직하기 더욱 수월해졌다는 견해가 있다(Heilmann, 2016). 또한, 일부 실증분석에서는 국가 간 갈등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음을 보고한 반면(Pandya and Venkatesan, 2013; Li and Liu, 2019), 일부 실증분석에서는 국가 간 갈등과 불매운동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Ashenfelter et al, 2007; Davis and Meunier, 2011). Heilmann(2016)은 이와 관련하여 월별 자료와 같은 고빈도(high-frequency) 자료와 제품 단위(product-level) 자료를 통해 국가 간 갈등과 불매운동과의 관계 및 불매운동의 효과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네 가지의 불매운동 사례를 분석한 Heilmann(2016)은 불매운동으로 인한 상대국의 수출 감소가 전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고, 불매운동이 널리 알려진(highly-branded) 소비재(consumer goods)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간 무역량의 변화를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Li and Liu(2019) 역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감소는 소비재에 국한되었으며, 원료(raw materials)나 중간재(intermediate goods)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Li and Liu(2019)는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때 기업의 반응과 소비자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경제 주체들이 정치와 경제를 연결하여 행동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Davis and Meunier(2011)의 견해와 차이가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기업과 소비자가 다르게 행동할 유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장에서는 2010년대에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난 무역 갈등을 한국이 포함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무역 갈등,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과거사 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무역 갈등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하고,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경제보복 및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다. 아래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sup>24)</sup>가 제공하는 자료이다. GDELT는 전 세계의 뉴스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사건의 행위자, 행위의 상대방, 사건의 내용 등으로 코드화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GDELT를 활용하여 두 국가 간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자 시도하였다. GDELT의 활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국내에서 GDELT를 활용한 연구로는 손정욱(2019), 이성우(2020) 등이 있다. 손정욱(2019)은 GDELT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여 년 간의 한일관계를 분석하였고, 이성우(2020)는 2000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남북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BIGKinds)<sup>25)</sup>에서 수집한 뉴스 데이터이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언론의 기사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GDELT가 기사의 내용을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반면, 빅카인즈는 언론사, 제목, 내용 분류 등 기사의 메타정보를 제공한다. 기사 본문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뉴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는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신, 기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제공하고, 키워드 중에서도 가중치를 기준으로 상위 50개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또한, 기사에 등장한 인물, 위치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기사 본문을 별도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키워드 또는 상위 50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키워드, 인물, 위치 등의 정보를

24) <https://www.gdelproject.org/>

25) <https://www.bigkinds.or.kr/>



살펴보면 형태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도 눈에 띄는데, 교착어라는 한글의 특성상 형태소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의 오류는 기사 본문을 직접 활용하여 분석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텍스트 분석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직접 형태소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수정해나가야 한다.

아래에서는 선행연구 및 위의 두 가지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경제보복을 통해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 양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제2절

## GDELT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제관계의 변화는 수치화하기 매우 어렵다. 국제관계와 관련된 발표, 인터뷰, 신문 기사 등의 원자료는 수치화된 자료가 아닌 텍스트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언론 기사가 매일 추가되므로, 개별 연구자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것조차 매우 버겁다. 또한, 원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국제관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에서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국제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텍스트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양적 자료로 변환하여 숫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면 같은 사안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GDELT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하여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 국제관계의 변화를 숫자로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GDELT는 전 세계의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각각의 기사에 포함된 인물, 국가, 단체, 주제 등의 정보를 추출한 후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단, 기사 원문은 링크를 제공하고 본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GDELT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GDELT가 수집하는 언론 기사에는 100가지가 넘는 언어가 포함된다. GDELT의 핵심적인 기능은 전 세계의 기사를 수집하고 이들 기사에 포함된 내용을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GDELT 원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구글(Google)의 빅쿼리(BigQuery)<sup>26)</sup>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Google)의 빅쿼리(BigQuery)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GDELT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하나인 Event Database를 사용하였다. Event Database에는 1.0 버전과 2.0 버전이 있는데, 1.0 버전은 1979년부터 시작하고, 2.0 버전은 2015년 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1.0 버전은 일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2.0버전은 15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다만, 해당 시기

26) <https://cloud.google.com/bigquery/>

부터의 기사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기사에 이전 시기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2.0 버전이 1.0 버전보다 높은 빈도로 업데이트되므로, 2.0 버전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2.0 버전은 시계열의 길이가 1.0 버전보다 짧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GDELT는 사건을 코드화하여 제공하는데, Event Database에서는 이를 위해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 코드 체계를 사용한다. CAMEO 코드 체계는 국가 간의 다양한 사건들을 분류하는 체계로서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sup>27)</sup>의 분류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WEIS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탈냉전 시대의 다양한 사건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손정욱, 2019). CAMEO 체계는 2000년대부터 개발되었는데, GDELT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Schrodtt(2012)의 버전이다. CAMEO 코드 분류 체계는 행위자(actor)와 사건(event)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sup>28)</sup> 행위자와 관련하여 국가, 민족, 종교, 국제기구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또한, 관련된 행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actor1과 actor2로 표기되는데, actor1은 행위를 한 개인(단체)이고, actor2는 행위를 받는 상대방이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actor1을 행위자, actor2를 상대방으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간 갈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자를 식별하였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행위자를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3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충분히 많은 수의 자료가 존재하므로, GDELT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한편, CAMEO 코드 분류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의상 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자면, 대분류는 2 자릿수, 중분류는 3 자릿수, 소분류는 4 자릿수로 되어있으며, 대분류의 수는 20개이다. 또한, 모든 대분류 항목은 중분류 항목을 포함하지만, 모든 중분류 항목이 소분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분류 번호 02는 “요청하다(Appeal)”라는 행위를 의미하고, 분류 번호 02의 하위 항목인 021은 “실질적 협력을 요청하다(Appeal for material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를 의미하며, 분류 번호 021의 하위 항목인 0211은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다(Appeal for economic cooperation)”를 의미한다. 반면, 분류 번호 02의 하위 항목

27) McClelland(1976)

28) Schrodtt(2012)에 표기된 명칭은 각각 actor codebook과 verb codebook이다.

인 022는 “정책지원과 같은 외교적 협력을 요청하다(Appeal for diplomatic cooperation, such as policy support)”를 의미하는데, 022는 별도의 하위 항목이 없다. 아래의 [표 3-1]에서는 CAMEO에 명시된 사건 유형 중 20개의 대분류를 정리하였다.<sup>29)</sup>

[표 3-1] CAMEO 사건 분류

분류	설명(원문)	설명(번역)
01	Make Public Statement	공식 발표하다
02	Appeal	요청하다
03	Express Intent To Cooperate	협력할 의사를 표하다
04	Consult	상의하다
05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외교적으로 협력하다
06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실질적으로 협력하다
07	Provide Aid	원조를 제공하다
08	Yield	양보하다
09	Investigate	조사하다
10	Demand	요구하다
11	Disapprove	불만을 나타내다
12	Reject	거부하다
13	Threaten	위협하다
14	Protest	항의하다
15	Exhibit Force Posture	군사력(경찰력)을 과시하다
16	Reduce Relations	관계를 축소하다
17	Coerce	강제하다
18	Assault	공격하다(비정규전)
19	Fight	전투하다(정규전)
20	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	대량 살상을 저지르다

주: Schrodtt(2012)의 내용을 번역하였으며, 하위 항목들의 내용을 번역에 반영하였다.

GDELT Event Database는 사건과 관련하여 CAMEO 코드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지표 역시 제공한다. [표 3-1]에 나타난 20개의 대주제 중 01부터 05까지는 수사적

29) 중분류 및 소분류에 해당하는 사건 유형의 번역은 손정욱(2019)을 참조할 수 있다.

협력(Verbal Cooperation), 06부터 09까지는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10부터 14까지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15부터 20까지는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로 분류된다.<sup>30)</sup> 이러한 분류는 CAMEO 코드에 기반한 사건(event) 유형을 보다 집합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GDELT Event Database가 제공하는 흥미로운 자료 중 하나는 어조(Tone)이다. GDELT Event Database에서는 사건(event)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의 평균적인 어조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어조는 -10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나 대개 -10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다. 값이 0보다 작으면 어조가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값이 0보다 크면 어조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즉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어조가 긍정적이고,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어조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

30) Verbal Cooperation, Material Cooperation, Verbal Conflict, Material Conflict와 같은 용어에 대한 한글 번역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내용을 고려하여 임의로 번역하였다.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번역 용어와 원래의 용어를 함께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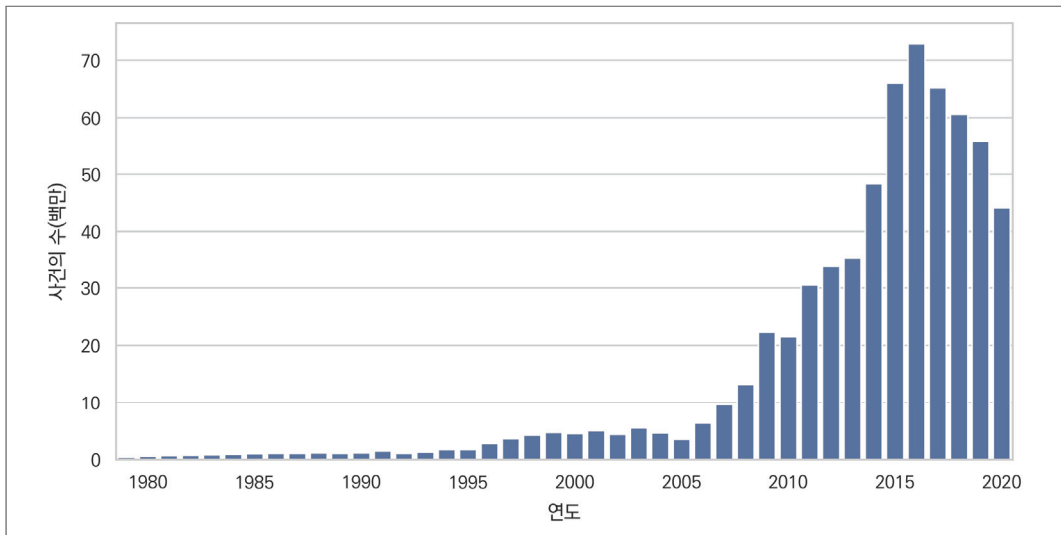
### 제3절

## 동북아 지역의 무역 갈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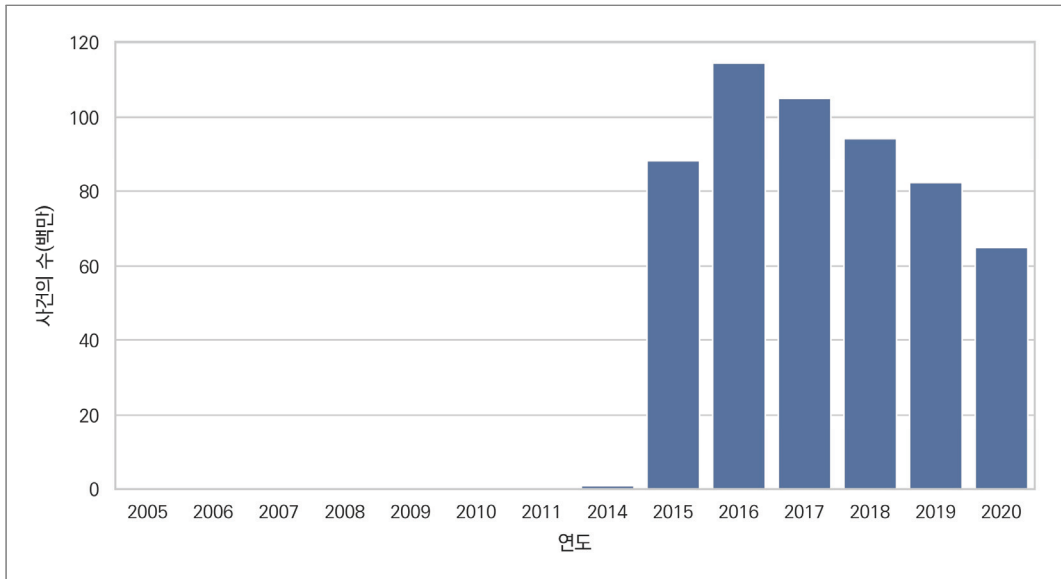
### 1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추이

[그림 3-2]와 [그림 3-3]은 각각 GDELT 버전 1.0과 2.0에 기록된 연도별 사건의 수를 나타낸다.<sup>31)</sup>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GDELT 버전 2.0은 2015년 초부터 시작하였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사건 역시 2.0 버전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다. GDELT 버전 1.0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이 시기에 실제 사건의 수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GDELT가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기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두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사건의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기록된 사건의 수는 2.0 버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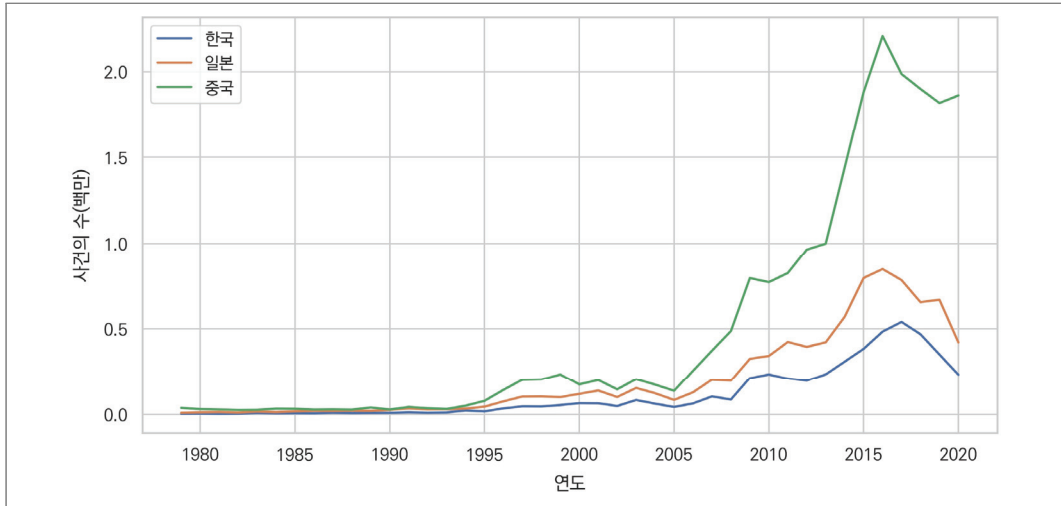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31) 본문에서는 GDELT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중 Event Database를 사용하고 있으나, 표기의 편의상 Event Database를 생략하였다.



[그림 3-3] 연도별 사건의 수(GDELТ 2.0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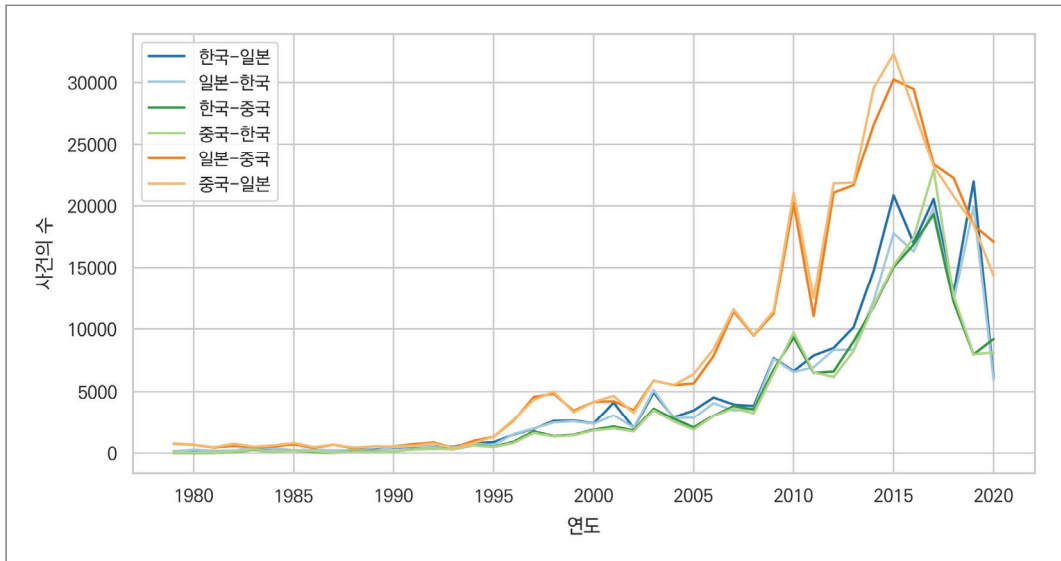
[그림 3-4]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별, 연도별로 GDELТ에 수록된 사건의 수를 나타낸다. 자료는 [그림 3-2]와 마찬가지로 GDELТ Event 데이터베이스 버전 1.0을 사용하였으며, 행위자의 국적이나 상대방의 국적에 한국, 일본 또는 중국이 포함된 사건을 집계하였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같은 국가에 속한 경우도 포함된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 관련된 사건의 수가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사건의 수가 감소하는 부분 역시 [그림 3-2]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림 3-4] 동북아 국가별·연도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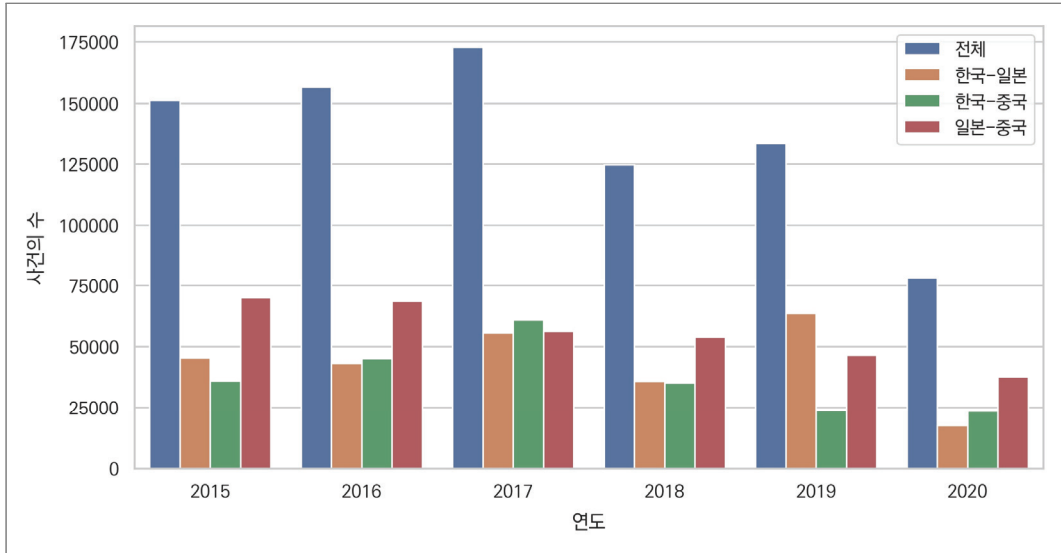
[그림 3-5]는 GDELT에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 기록된 사건(event)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자료의 출처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GDELT Event 데이터베이스 버전 1.0이다. 국가의 조합은 총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국가의 쌍에서 첫 번째 국가는 행위자가 속한 국가를 나타내고, 두 번째 국가는 행위의 상대방이 속한 국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은 행위자가 한국에 속하고, 행위의 상대방이 일본에 속한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2000년대 중후반부터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일본과 중국이 관련된 사건(“일본-중국”과 “중국-일본”)의 수가 다른 국가들의 조합보다 많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관련된 사건의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한국과 중국이 관련된 사건의 수는 2017년에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사드(THAAD)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한국과 일본이 관련된 사건의 수는 2019년에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와 [그림 3-3]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건의 수가 2016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한다. 반면, 한국-중국 간 사건의 수와 한국-일본 간 사건의 수는 전체적인 사건의 수가 줄어드는 2017년과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이들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 한국-일본 간 사건의 수는 앞선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데, [그림 3-2]와 [그림 3-3]에 나타난 전체 사건 수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한국과 일본 간 무역분쟁이 얼마나 첨예한 문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5] 동북아 국가 간 사건의 수(GDELT 1.0 버전)

[그림 3-6]에서는 GDELT 2.0 버전을 사용하여 동북아 국가 간 사건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와는 달리 행위자와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그림 3-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건의 수가 행위자 및 상대방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림 3-5]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사건의 수가 더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2]와 [그림 3-3]의 관계와 같다. 그 외에 [그림 3-5]와 특별히 다른 점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두 개별 사례는 모두 GDELT Event Database 2.0이 시작된 2015년 2월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의 분석은 GDELT Event Database 2.0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5분마다 업데이트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수도 더 많은 2.0 버전이 더욱 상세하게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6] 동북아 국가 간 사건의 수(GDELT 2.0 버전)

## 2 개별 사례 1: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 가. 무역 갈등의 원인과 전개

2019년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작용하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전이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로 인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정부는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부품이 한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 대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경엽(2019)에 따르면, 수출규제 대상인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는 일본산 제품이 각각 93.2%, 84.5%, 41.9%의 점유율(수입액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 외에도 이들 부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협상력의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우위에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조경엽(2019)에 따르면 일본의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에칭가스 수출액 중 한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5%, 20.7%, 89.3%였다. 낮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역시 상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체로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국제 무역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성춘 외, 2019). 그러나, 일본 내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중요한 고객을 잃는 것이고,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일본 국내에서도 적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한·일 무역분쟁이 정치적인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무역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문이 중요하게 포함된다. 이재영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고위 각료들 간의 회담, 비공식적인 교섭 등 외교적인 노력이 무역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아울러 2020년 9월에 예정된 일본의 선거 역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sup>32)</sup> 김완중(2019) 역시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주목한 바 있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분쟁으로 이어진 것은 한국의 주요 산업의 높은 일본 의존도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sup>33)</sup>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 역시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가 추진한 주요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 8. 5.,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2019. 8. 27., 과기정통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2020. 1. 22., 산업부) 등이 있다.<sup>34)</sup>

일본의 수출 제한 규제가 양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정성춘 외(2019)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약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국내 기업들의 재고 확보,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오히려 일본이 소비자 불매운동, 여행 자제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양국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소재·부품·재료 산업의 육성 및 공급

32)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하반기 기자간담회(2019. 11. 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60291>

33) 이는 김완중(2019)이 지적한 양국 간 경제력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2020. 3. 1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60&pWise=nb4>

선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면우(2020)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이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반도체 수출도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 및 공급선 다변화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성춘 외(2019)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정성춘 외(2019)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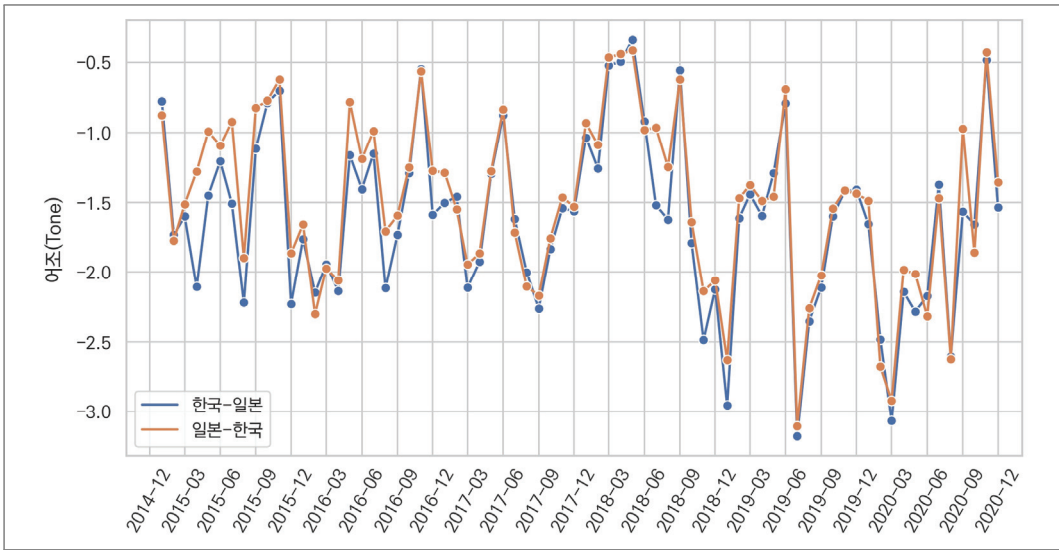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한·일 무역 갈등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끌고 있으나,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아직 진행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 8. 5., 관계부처 합동)은 핵심 부품 100가지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이 가운데 20개 품목은 1년 내 공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급 안정화가 무조건적인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급선 안정화 역시 포함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일 무역분쟁을 국내 산업 기반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유니클로 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Heilmann(2016)과 Li and Liu(2019)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Heilmann(2016)은 과거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났던 불매운동을 분석하였는데, 불매운동은 소비재(consumer goods), 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진 (highly-branded) 재화에 효과적이지만,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해서는 효과가 일시적임을 지적하였다.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교역을 분석한 Li and Liu(2019) 역시 소비재와는 달리 원재료나 중간재의 교역은 정치적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인 바 있다.

## 나. GDELT에 반영된 무역 갈등의 양상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GDELT 데이터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림 3-7]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GDELT에 기록된 한국과 일본 간 어조(Tone)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GDELT Event Database 2.0 버전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사건(event)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각 사건에 기록된 어조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한국-일본은 행위자의 국적이 한국, 상대방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를 나타내고, 일본-한국은 행위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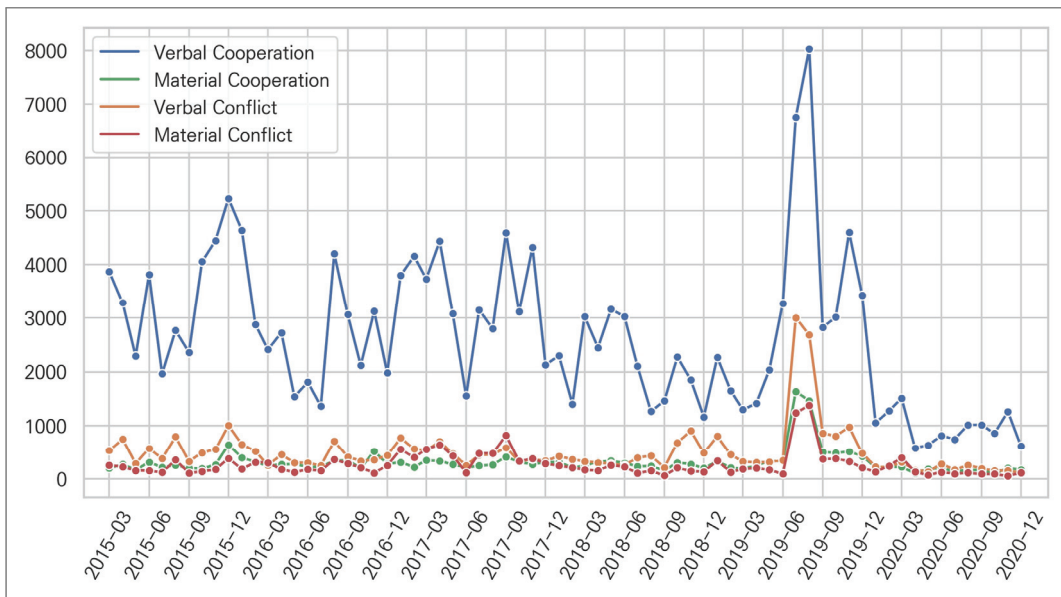
국적이 일본, 상대방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3-7]을 살펴보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부터 양국 간 어조의 톤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일본의 경우, 2018년 9월 -0.56에서 -1.79로, 그리고 11월에는 -2.49로 하락하였다. 일본-한국의 경우, 2018년 9월 -0.62에서 -1.64로, 그리고 11월에는 -2.14로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작된 2019년 7월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어조가 가장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일본의 경우, 평균 어조가 약 -0.79에서 -3.18로 하락하였다. 일본-한국의 경우, 평균 어조는 약 -0.69에서 -3.11로 하락하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의 어조는 이전 시기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림 3-7] 한국과 일본 간 어조의 변화(GDELT 2.0 버전)

[그림 3-8]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를 나타낸다. 협력 및 분쟁은 앞서 언급한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로 나타내었다. 데이터는 [그림 3-7]과 마찬가지로 GDELT Event Database 2.0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벤트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각 분류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다만, 행위자와 상대방은 구분하지 않았다.

[그림 3-8]을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 걸쳐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는 갈등이 커지는 시기에도 사회 각층에서 양국 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정부 등 다양한 주체 간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양국의 관계 변화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반면,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다가 양국 간 갈등이 커지는 시기에 빈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의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직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뿐만 아니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 역시 급격히 상승한다.<sup>35)</sup> 이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로 인해 양국이 본격적인 분쟁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한국과 일본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GDELT 2.0)

35) 본문에서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2015년 12월에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이 증가하는데, 이는 2015년 12월 말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의 여파로 보인다.

[표 3-2]와 [표 3-3]은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발표(2019년 7월 1일)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에 나타난 CAMEO 코드를 비교한 것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국적은 (한국, 일본) 또는 (일본, 한국)이다. 데이터는 [그림 3-13]과 마찬가지로 GDELT 2.0 Even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해당 기간에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코드 및 코드의 내용, 비중, 그리고 해당 코드가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4가지 분류 중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였다. 두 개의 표를 비교해보면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비중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코드 040 “상의하다”의 비중은 15.7%에서 8.1%로 감소하는 반면, 코드 114 “공식적으로 항의하다”는 2.0%에서 3.8%로 증가한다. 7월 이전에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에 해당하는 항목은 18개 중 4개였으나, 7월 이후에는 25개 중 8개로 증가하며,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은 7월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7월 이후에는 4개가 등장한다.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코드 163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가하다”, 코드 160 “관계를 축소하다”, 코드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 코드 190 “군사력을 사용하다” 등이 있다.

[표 3-2] 한국과 일본 간 사건 CAMEO 코드, 2019년 5월 ~ 2019년 6월

코드	내용	비중	비고
040	상의하다 (Consult, not specified below)	15.7%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36	회담 또는 협상할 의사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meet or negotiate)	12.5%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6	협상하다 (Engage in negotiation)	9.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2	방문하다 (Make a visit)	8.2%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코드	내용	비중	비고
043	회담을 주최하다 (Host a visit)	7.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20	요청하다 (Appeal, not specified below)	5.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50	외교적으로 협력하다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4.5%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 (Cooperate economically)	2.9%	실제적 협력 (Material Cooperation)
010	공식 발표하다 (Make statement, not specified below)	2.8%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51	칭찬 또는 지지하다 (Praise or endorse)	2.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14	공식적으로 항의하다 (Complain officially)	2.0%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30	협력할 의사를 내비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not specified below)	1.7%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20	거부하다 (Reject, not specified below)	1.7%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90	조사하다 (Investigate, not specified below)	1.2%	실제적 협력 (Material Cooperation)
111	비판 또는 비난하다 (Criticize or denounce)	1.1%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043	권리를 요구하다 (Demand rights)	1.0%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57	공식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다 (Sign formal agreement)	1.0%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4	제 3의 장소에서 만나다 (Meet at a "third" location)	1.0%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표 3-3] 한국과 일본 간 사건 CAMEO 코드, 2019년 7월 ~ 2019년 8월

코드	내용	비중	비고
040	상의하다 (Consult, not specified below)	8.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 (Cooperate economically)	7.1%	실제적 협력 (Material Cooperation)
020	요청하다 (Appeal, not specified below)	5.7%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10	공식 발표하다 (Make statement, not specified below)	5.3%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2	방문하다 (Make a visit)	5.2%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6	협상하다 (Engage in negotiation)	5.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3	회담을 주최하다 (Host a visit)	4.9%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36	회담 또는 협상할 의사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meet or negotiate)	4.2%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14	공식적으로 항의하다 (Complain officially)	3.8%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50	외교적으로 협력하다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3.7%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11	비판 또는 비난하다 (Criticize or denounce)	3.5%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10	불만을 나타내다 (Disapprove, not specified below)	3.2%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63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가하다 (Impose embargo, boycott, or sanctions)	2.7%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120	거부하다 (Reject, not specified below)	2.6%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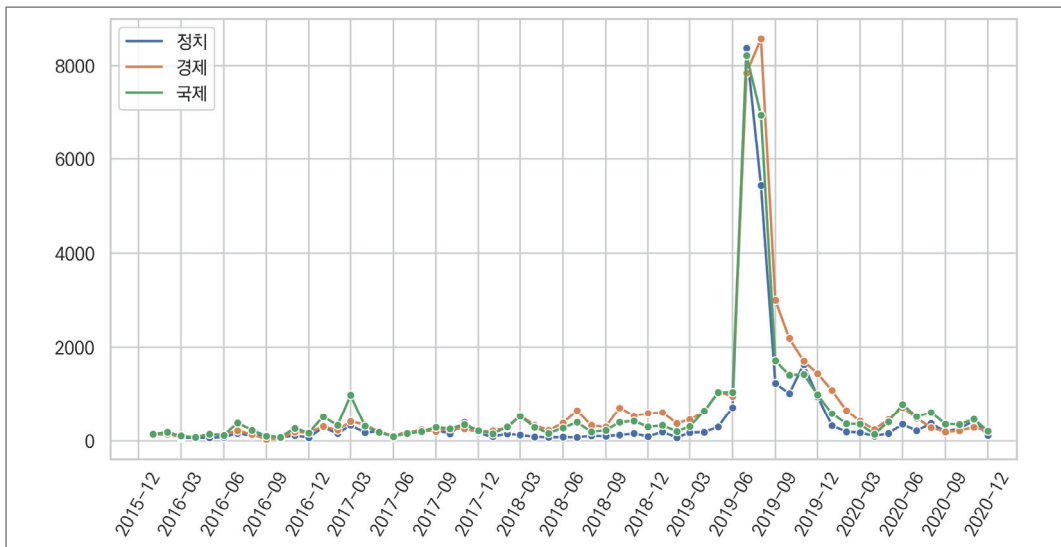
코드	내용	비중	비고
112	비난하다 (Accuse, not specified below)	2.1%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12	비관적으로 언급하다 (Make pessimistic comment)	2.0%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57	공식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다 (Sign formal agreement)	1.8%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51	칭찬 또는 지지하다 (Praise or endorse)	1.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30	협력할 의도를 내비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not specified below)	1.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60	관계를 축소하다 (Reduce relations, not specified below)	1.5%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190	군사력을 사용하다 (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not specified below)	1.4%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141	시위를 벌이다 (Demonstrate or rally)	1.3%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043	권리를 요구하다 (Demand rights)	1.2%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30	위협하다 (Threaten, not specified below)	1.1%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	1.0%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 다. 언론 기사에 반영된 무역 갈등의 양상

한편, GDELT는 코드화된 자료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사건을 동일한 틀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그림 3-9]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된 언론의 기사를 검색한 후 정치, 경제, 국제 분야별로 기사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무역, 교역, 수출, 수입, 수출입 중 한 단어, 갈등, 분쟁, 보복 중 한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고,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이 모두 포함되거나 ‘한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기사를 검색하였다.<sup>36)</sup> 언론사는 중앙지, 경제지, 그리고 방송사로 한정하였다. 키워드는 특성추출 항목을 사용하였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다.

한편, 빅카인즈에서는 기사의 분야를 최대 3개까지 제공하는데, 하나의 기사가 복수의 분야에 연결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기사가 분류 1에서는 정치, 분류 2에서는 경제, 분류 3에서도 경제로 표시된 경우, 정치 분야의 기사가 1개, 경제 분야의 기사가 2개인 것으로 간주하였다.<sup>37)</sup>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기사의 수를 살펴보면, 2019년 초반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상당히 작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19년 7월부터 기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9년 9월에 급격히 감소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제 분야의 기사가 다른 두 분야의 기사에 비해 조금 더 오랫동안 이어진다.



[그림 3-9]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분야별 기사의 수

36) 빅카인즈에서의 검색식은 “(무역 OR 교역 OR 수출 OR 수입 OR 수출입) AND (갈등 OR 분쟁 OR 보복) AND ((한국 AND 일본) OR 한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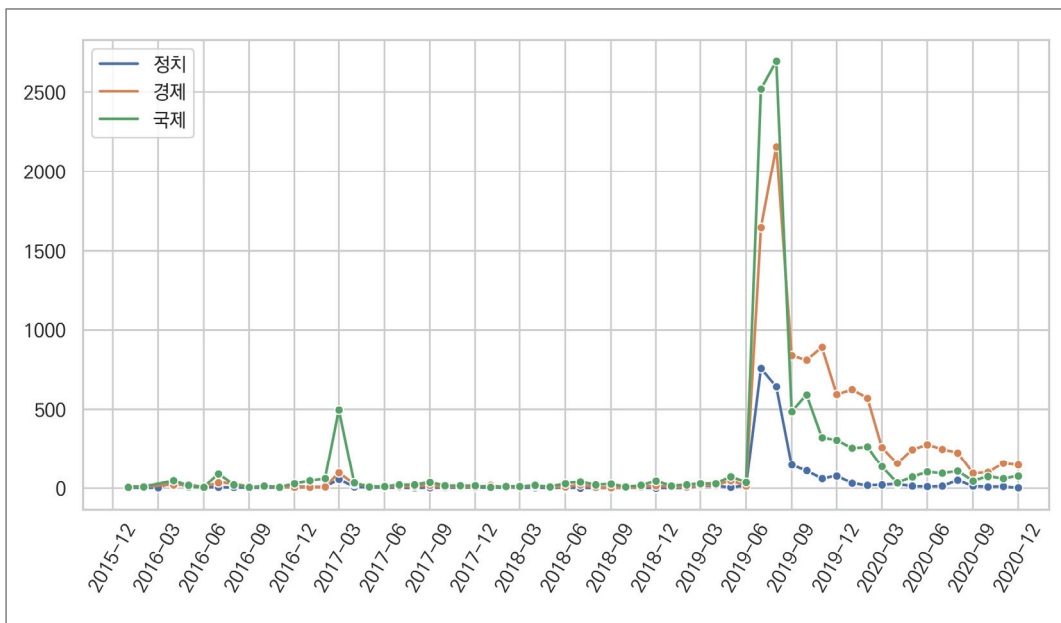
37) 통합 분류는 국제>일본, 경제>무역과 같이 세부 분류로 표기한다. 따라서, 하나의 대분류가 반복하여 등장할 수 있다.

분야별 기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단어는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검색 방법은 위와 같으며, 다만 기간은 [그림 3-9]를 참고하여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단어는 분야별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 순으로 약 30개를 나열하였다. 다만,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명, 관계자, 위원회 등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들은 생략하였다. [표 3-4]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주요 단어 및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등 무역분쟁과 관련이 있는 핵심 단어는 세 분야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제 분야의 기사에서는 반도체, 수출규제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였고, 이는 국제 분야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경제 및 국제 분야에서만큼 높은 빈도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정치인과 청와대, 외교부와 같은 정부 부처, 그리고 정당의 이름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 경제와 관련된 단어들(코스피, 무역분쟁, 한국은행, 의존도 등), 기업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삼성전자, 하이닉스, 국산화, 불화수소, 제조업, 중소기업 등)이 주로 등장한다. 국제 분야에서는 강제징용, 위안부, 과거사와 같이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관련된 단어들(아베, 위안부, 강제징용, 위안부, 과거사)이 등장하고, 이와 더불어 불매운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정치와 국제 분야에서는 지소미아, 강제징용과 같은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이들 단어가 빈도 순서로 선정한 30개 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3-4]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기사 주요 단어

분야	주요 단어
정치	청와대, 한국당, 문재인, 아베, 지소미아, 더불어민주당, 강경화,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원내대표, 반도체, 경제보복, 외교부, 자유한국당, 고노, 황교안, 나경원, 피해자, 바른미래당, 대변인, 대한민국, 아세안, 세계무역기구, 정상회담, 국방부, 외무상, 북미, 결의안, 강제징용
경제	반도체, 수출규제, 삼성전자, 연구원, 세계무역기구, 화이트리스트, 자동차, 경쟁력, 코스피, 무역분쟁, 한국은행, 외국인, 상반기, 성장률, 제조업, 투자자, 중소기업, 코스닥, 전문가, 흥남기, 기준금리, 국산화, 하이닉스, 불화수소, 소비자, 장기화, 경제보복, 아베, 의존도
국제	아베, 반도체,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청와대, 피해자, 문재인, 경제보복, 강경화, 고노, 강제징용, 참의원, 백색국가, 불매운동, 위안부, 전문가, 외교부, 아시아, 과거사, 자민당, 외무상, 아세안, 수출, 이낙연, 우대국, 정상회담, 한일관계, 대법원

[그림 3-10]은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검색한 기사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사는 빅카인즈에서 검색하였고, 언론사는 중앙지, 경제지, 방송사로 한정하였다. 불매운동과 불매 중 한 단어, 일본과 한일 중 한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하였다.<sup>38)</sup>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이전에는 불매운동과 관련된 기사가 매우 적고, 2019년 7월과 8월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어느 정도 감소한 후 숫자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과 관련된 불매운동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소재 부품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제 분야 기사의 수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제 분야 기사의 수가 더 꾸준히 유지되는데, 이는 불매운동의 여파와 관련된 분석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는 다른 두 분야에서만큼 불매운동을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기사의 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분야별 기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요 단어는 [표 3-5]와 같다. 검색 방법은 위와 같으나, 기간은 [그림 3-10]을 참고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단어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 순으로 약

38) 검색식은 "(불매운동 OR 불매) AND (일본 OR 한일)"이다.

30개를 나열하였다. [표 3-5]를 살펴보면, 경제와 국제 분야의 단어가 어느 정도 유사한 반면, 정치 분야의 단어는 이들과 동떨어져 있다. [그림 3-10]에서 불매운동으로 검색한 정치 분야의 기사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 분야에서는 경제나 국제 분야에 비해 불매운동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유니클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사 및 관련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매운동의 품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 중국과 일본의 분쟁 당시에도 불매운동의 대상, 또는 방화 등 소요사태의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유니클로와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대상이 된 것은 불매운동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재화에 효과적이라는 Heilmann(2016)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국제 분야에서 경제 분야와 어느 정도 유사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제 분야와 비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일본의 규제조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한다.

[표 3-5] 불매운동 기사 주요 단어

분야	주요 단어
정치	아베, 문재인, 한국당, 청와대, 불매운동,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들, 자유한국당, 지소미아, 대한민국, 페이스북, 나경원, 화이트리스트, 피해자, 위안부, 수출규제, 원내대표, 반도체, 황교안, 경제보복, 지지율, 대변인, 강제징용, 광복절, 정치인, 친일파, 한일관계, 이해찬, 세계무역기구
경제	유니클로, 판매량, 소비자, 반도체, 자동차, 일본산, 일본차, 편의점, 상반기, 온라인, 영업이익, 매출액, 항공사, 렉서스, 닛산, 수입액, 수출규제, 연구원, 벤츠, 수입차, 혼다, 점유율, 도요타, 소비자들, 승용차, 불매, 아사히, 화장품, 인피니티,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주항공, 롯데, 관세청, 아시아나항공
국제	아베, 유니클로, 한국인, 반도체, 관광객, 운동, 불매, 수출규제, 소비자, 일본산, 피해자, 일본인, 경제보복, 위안부, 항공사, 온라인, 여행객, 제품, 화이트리스트, 자동차, 재팬, 홍콩, 외국인, 편의점, 청와대, 문재인, 부산, 판매량, 시민들, 화장품, 사람들, 험한

### 3 개별 사례 2: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 가. 무역 갈등의 원인과 전개

한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의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사드의 배치를 2016년 7월에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에 중국의 동부 연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중국의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2017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사드의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 쇼핑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인데, 이는 롯데 쇼핑이 사드의 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급감하였으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연예인들 역시 피해를 경험하였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여러 언론 보도는 중국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Kim and Lee, 2020).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고, 북한과의 관계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영향에 관해 여러 연구에서 분석하였는데, 신현수(2017)는 대중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경제보복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주로 관광, 문화(한류), 유통(롯데마트 등)을 중심으로 가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 산업이 아닌 중국 현지에 진출한 롯데마트와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신현수(2017)는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품목 중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서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행위가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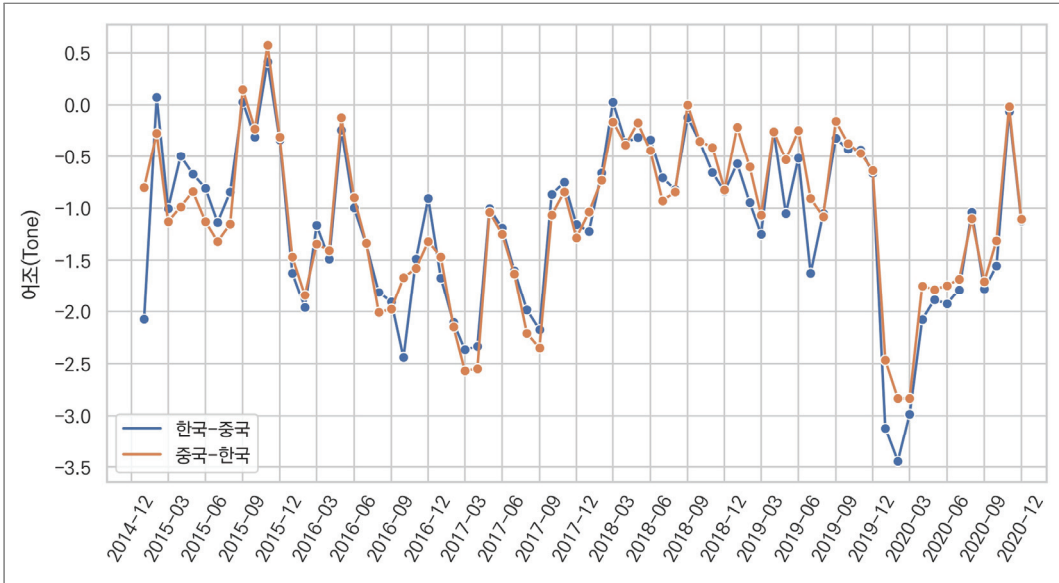
Kim and Lee(2020)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와 중국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보복 조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수의 감소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관광 수입이 약 3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과 관련된 주요 산업(여행, 화장품)의 주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Kim and Lee(2020)은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연구하였는데, 개별 기업 단위로 연구를 진행한 권용현·이지상(2018)은 중국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권용현·이지상(2018) 역시 산업 단위에서는 연관성이 작다고 보았다.

한편, 신현수(2017)와 Kim and Lee(2020)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 방안으로 특정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Kim and Lee(2020)는 이러한 보복 조치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특정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무역 의존도 감소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나. GDELTE에 반영된 무역 갈등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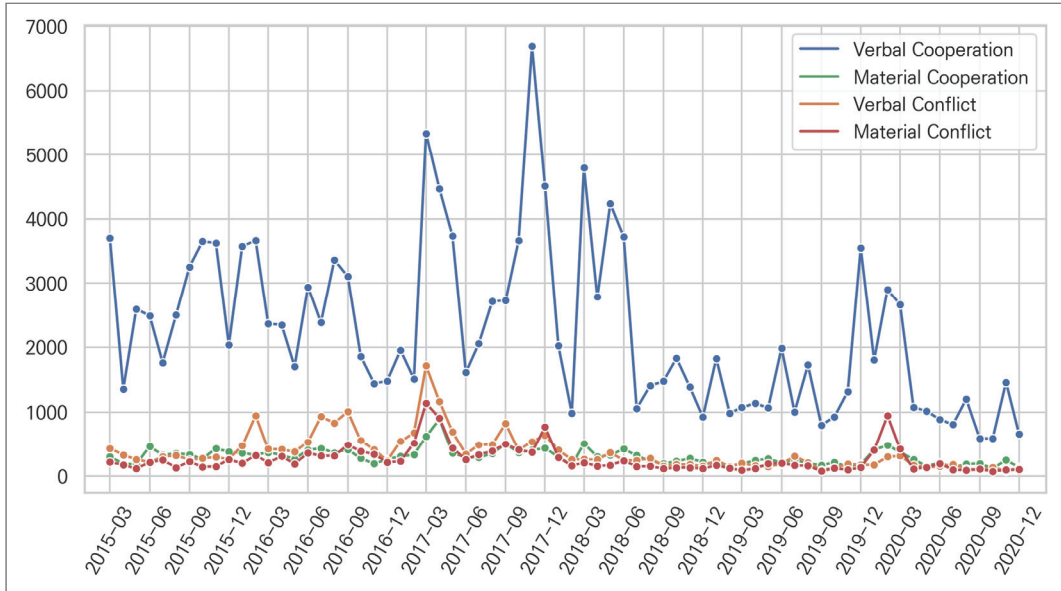
이와 같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역시 GDELTE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3-11]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 간 어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는 GDELTE Event Database 2.0 버전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사건(event)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림 3-11]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논의가 본격화하던 2016년 초중반부터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상은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2016년 7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회복되지만,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된다. 이후, 양국 간 어조는 한동안 변동하다가 2017년 10월 말에 있었던 양국 간의 협의를 계기로 이전보다 긍정적인 수준에서 약 2년 가까이 유지된다.





[그림 3-11] 한국과 중국 간 어조의 변화(GDELT 2.0 버전)

[그림 3-12]는 한국과 중국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를 나타낸다. [그림 3-11]과 마찬가지로 GDELT Event Database 2.0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벤트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각 분류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3-12]를 살펴보면, [그림 3-8]과 마찬가지로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이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한편,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은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2016년 7월에 급격히 상승하여 한동안 유지되는데,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은 같은 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의 빈도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2017년 3월인데, 이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이 전면 금지되다시피 하였고,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절반 이상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17년 10월과 11월에는 4가지 분류 중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의 빈도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10월 31일에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이룬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한국과 중국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GDELT 2.0)

[표 3-6]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GDELT 2.0 Event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한국과 중국 간 사건의 CAMEO 코드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국적은 (한국, 중국) 또는 (중국, 한국)이며, 해당 기간에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코드 및 코드의 내용, 비중, 그리고 해당 코드가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 실제적 협력(Material Cooperation),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4 가지 분류 중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였다. 앞서 [그림 3-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사적 협력(Verbal Cooperation)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 중에는 코드 163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가하다”, 코드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외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상대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 유형과 협상을 시도하는 행위 유형이 모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갈등 시기에도 양국 간 외교적인 노력 또는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여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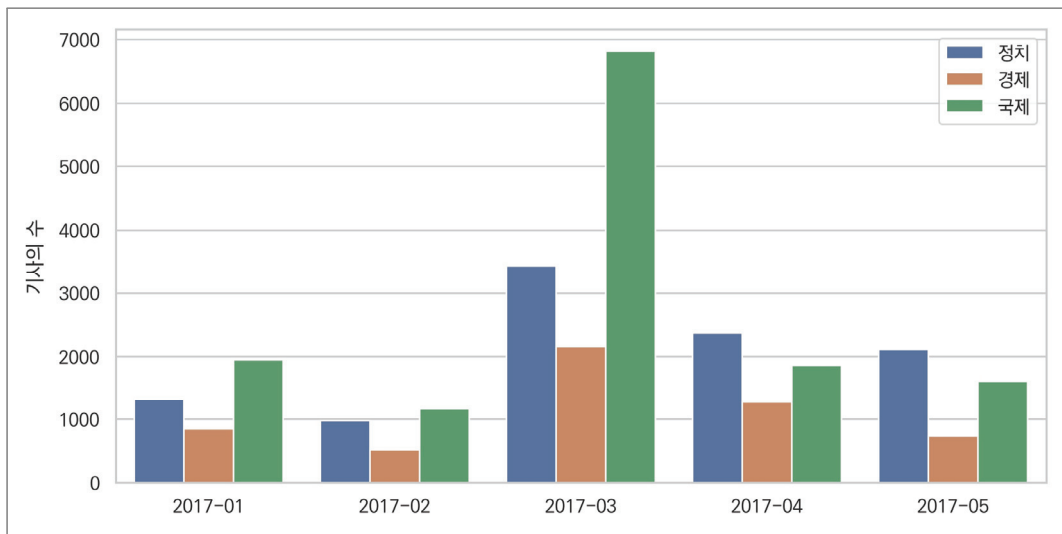
[표 3-6] 한국과 중국 간 사건 CAMEO 코드, 2017년 1월 ~ 2017년 5월

코드	내용	비중	비고
042	방문하다 (Make a visit)	9.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3	회담을 주최하다 (Host a visit)	8.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0	상의하다 (Consult, not specified below)	8.2%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46	협상하다 (Engage in negotiation)	5.4%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20	요청하다 (Appeal, not specified below)	5.3%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10	공식 발표하다 (Make statement, not specified below)	5.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36	회담 또는 협상할 의사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meet or negotiate)	4.4%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20	거부하다 (Reject, not specified below)	3.4%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11	비판 또는 비난하다 (Criticize or denounce)	3.1%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90	군사력을 사용하다 (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not specified below)	3.1%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061	경제적으로 협력하다 (Cooperate economically)	2.7%	실제적 협력 (Material Cooperation)
051	칭찬 또는 지지하다 (Praise or endorse)	2.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12	비관적으로 언급하다 (Make pessimistic comment)	2.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코드	내용	비중	비고
110	불만을 나타내다 (Disapprove, not specified below)	2.5%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30	위협하다 (Threaten, not specified below)	2.1%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30	협력할 의도를 내비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not specified below)	2.1%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63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가하다 (Impose embargo, boycott, or sanctions)	1.9%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112	비난하다 (Accuse, not specified below)	1.6%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50	외교적으로 협력하다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1.6%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172	행정적 제재를 가하다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	1.5%	실제적 충돌 (Material Conflict)
013	낙관적으로 언급하다 (Make optimistic comment)	1.4%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090	조사하다 (Investigate, not specified below)	1.2%	실제적 협력 (Material Cooperation)
100	요구하다 (Demand, not specified below)	1.1%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114	공식적으로 항의하다 (Complain officially)	1.0%	수사적 충돌 (Verbal Conflict)
057	공식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다 (Sign formal agreement)	1.0%	수사적 협력 (Verbal Cooperation)

## 다. 언론 기사에 반영된 무역 갈등의 양상

아래에서는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사드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한다. 사드, 한국, 중국 세 단어가 모두 포함되는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언론사는 중앙지, 경제지, 그리고 방송사로 한정하였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사가 복수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그림 3-13]에 표시된 기사의 수는 실제 기사의 수보다 많다. [그림 3-13]을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사드와 관련해서 국제 분야의 기사가 가장 많이 검색되며, 다음으로는 정치, 경제 분야 순서로 기사가 검색된다. 또한, 기사 중 상당수가 3월에 발행되었다.



[그림 3-13] 사드 관련 월별 기사의 수

[표 3-7]은 사드 관련 기사에 수록된 주요 단어를 빈도순으로 30여 개 표시하였다. 다만, 국가명이나 사드와 직접 관련된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정치 분야의 경우, 대부분 정치인, 정당, 행정부와 관련된 단어의 빈도가 높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주요 외국 인사들(렉스 틸러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눈에 띈다. 반면, 정치 분야에는 경제와 관련된 단어의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분야의 경우,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롯데 등 당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

타난 산업 분야 및 기업이 등장한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면세점과 같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단어 역시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그리고 코스피, 수출액, 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과 관련된 단어들 역시 나타난다. 국제 분야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외국의 주요 인물, 화장품, 롯데마트, 관광객, 면세점 등과 같은 경제 분야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7] 사드 관련 기사 주요 단어

분야	주요 단어
정치	문재인, 시진핑, 미군, 틸러슨, 행정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상회담, 청와대, 황교안, 백악관, 베이징, 민주당, 국방부, 김정은, 위안부, 대한민국, 대변인, 윤병세, 동북아, 외교부, 워싱턴, 안철수, 한중, 한미동맹, 매티스, 유승민, 전문가, 아베, 홍준표, 핵무기
경제	화장품,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연구원, 면세점, 자동차, 반도체, 코스피, 롯데,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선착순, 중소기업, 투자자, 현대차, 영업이익, 기대감, 수출액, 소비자, 매출액, 회복세, 제조업, 증가세, 경쟁력, 한국은행, 기아차, 유일호, 베이징, 성장률, 신흥국, 부총리
국제	중국인, 롯데, 베이징, 관광객, 시진핑, 화장품, 롯데마트, 미군, 여행사, 틸러슨, 배치, 행정부, 대변인, 한국행, 문재인, 롯데그룹, 면세점, 한국인, 정상회담, 국방부, 한중, 보복, 백악관, 전문가, 박근혜, 소비자, 상주, 워싱턴, 중국인들, 동북아, 연구원

## 제4절

## 소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장에서는 무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2010년대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무역분쟁,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하였고, 국가 간 정치적·외교적인 갈등이 어떻게 경제보복 조치와 경제 갈등으로 전이되는지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함께 GDELT 자료와 빅카인즈의 언론 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GDELT 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해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언론 기사 자료를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 1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의 양상

본 장에서는 GDELT의 자료 중 어조와 CAMEO 사건 코드(4가지 분류)를 시계열로 구성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직관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는 GDELT Event Database 2.0 버전을 통해 수집하였고, 2015년 이후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시계열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최근 한국이 경험한 위의 두 가지 무역분쟁 사례가 GDELT 데이터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어조 및 CAMEO 사건 코드를 통해 살펴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 양국 간 어조(tone)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국 간 어조는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 악화되고 이후 잠시 회복되기도 하지만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본격적으로 무역분쟁이 시작되면 다시 악화되었다. 둘째, 일본과의 무역분쟁 사례의 경우,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가장 급격하게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증가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두 사례의 경우,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만

증가한 반면, 본격적으로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의 빈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본 장에서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시계열로 구성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무역분쟁 사례는 무역 정책이 국제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중국이 한국 정부의 정치적·외교적 입장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김완중(20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의 영향과 함께 양국 경제력 규모의 차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제를 통제하려는 의도도 나타난다. 이러한 두 국가의 경제보복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사드 배치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경제제재가 제재를 가하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발하여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니클로와 같은 널리 알려진 일본의 소비재가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Heilmann(2016), Li and Liu(2019)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 2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 예측

본 장에서 살펴본 동북아 지역의 무역 갈등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주로 정치적·외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무역 갈등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외교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무역분쟁이 재현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제재를 시행하면 표적이 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국가 역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피해가 크면 경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시행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로 나누어 이를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영향에서 파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이 패권국



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미국과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므로, 이러한 점이 한국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지도부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지 않으며, 경제 체제 역시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무역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수월하다(Aidt and Gassebner, 2010).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계속하는 한 사드 사태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이는 전면적인 무역 보복 조치가 시행된다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갈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김완중(201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이 깊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국민감정은 여러 해 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므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과는 달리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제재 조치의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거나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하는 데에 성공하여 경제제재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한국 기업에 주요 부품을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 이외의 다른 해외 거래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인 타격을 받거나,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에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면 이는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지는 한국이 산업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본의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지 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3 동북아 지역 무역 갈등 해결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무역 갈등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요인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국제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한국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서는 이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맞게 외교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양국 국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역시 해결이 쉽지는 않다. 한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일본 사회가 점차 우경화함에 따라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양자 외교를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소 부분적인 해결책이지만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및 기술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역 정책을 국제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양국 간 경제력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의 무역, 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핵심 소재의 조달에 있어 일본에 크게 의존하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무역의 다변화를 통해 무역 및 기술 의존도를 낮춘다면, 경제제재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제재를 시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제재는 표적이 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국가에도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으면 해당 국가로부터 소비자 불매 운동과 같은 경제제재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Heilmann, 2016). 따라서 2019년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및 기술 의존도 완화가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제4장

## 환경 갈등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절 동북아 환경 갈등의 양상

제3절 소결



##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연구의 목적

국가 간의 환경분쟁은 크게 희소자원의 고갈, 또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오염에 의한 가용자원 고갈 및 환경권 침해 때문에 일어난다.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은 대기나 해수와 같이 국경 구분이 없는 환경 요인을 매개로 삼는 이동과 인위적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폐기물 및 위험 물질의 이동 등으로 구분된다. 오염물질의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 환경분쟁을 초래하여 당사국 간에 직접적인 협약, 지역협의체 또는 유엔을 통한 다자협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동북아 지역 국가(북한 제외)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으나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국가 간의 환경분쟁 중 오염물의 국경 이동에 의한 환경권 침해 요소가 가장 지배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을 이동하는 오염물질 문제의 대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이태동·정혜윤, 2019) 등 대기오염물질과 해수를 통해 이동하는 방사성 물질(김기순, 2011) 또는 사람이나 동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 병원체 등이 있고,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 따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오염물질 이동의 위험도 존재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에 중국과 일본 해안에 위치한 유해 물질 사용 시설이 고장나거나 파괴되면 오염물 이동 위험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감염(pandemic)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중국발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해수를 타고 이동하는 플라스틱(Jang et al., 2012), 중금속 물질 등 다양한 유해 물질(서창호, 2001)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한-중-일 간의 환경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장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에 따른 환경 갈등은 국제·정치·경제·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복합갈등 상황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환경 갈등이 발생→진행→해결되는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영향을 다방면에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갈등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환경 갈등의 필수요소로 정의하였는데, 동북아 지역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오염물질 중 최근 특히 크게 이슈화되었던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에 집중하여 그와 관련한 국내·외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가 간 환경분쟁은 이와 관련한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직접적인 분쟁 사례를 다룬 외교문서 등 정형화된 문헌을 분석하여 각각의 사례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으나, 분쟁 요소를 대하는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읽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국제 환경분쟁의 경우 국민의 안전 또는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대중의 인식이나 여론이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갈등의 역동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원으로 신문 기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복합갈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 등 국제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에서 갈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여기서 수행한 환경 갈등 분석은 이러한 통합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환경 갈등과 관련한 기사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환경 갈등 이벤트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것이 국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과거 환경 갈등 이벤트 트렌드와 주변 변수와의 상관관계 정보를 토대로 미래 환경 갈등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 2 환경 갈등 관련 선행연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은 두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안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여전히 전쟁과 같은 분쟁상황은 국가 간의 갈등에서 갈등의 수준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국제분쟁의 위험도를 데이터 및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정량화하는 기존의 연구 중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Heidelber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이하 HIIK)가 개발한 정치적 갈등

모델이 대표적이다. HIIK에서 개발한 Heidelberg Conflict Model ((HIIK, 2020)의 경우 정치적 갈등을 (1) 갈등에 개입하는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 (2) 이해당사자들이 연고자 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대상물, (3) 대상물을 취하기 위한 협력 또는 대립 전략으로 구성된 모델로 일반화하였고, 전 세계 정치적 갈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갈등의 강도를 정량화하였다.

유럽의 Global Conflict Risk Index(GCRI) 방법(De Groeve et al., 2014)은 Heidelberg의 갈등모델과 정량화 방법론 측면에서 유사하며, 좀 더 다양한 변수(정치적, 사회적, 안보적, 지리·환경적, 경제적 요인)를 도입하여 갈등으로 인한 미래 위험도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한다. GCRI는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지는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갈등 위험도를 정의하였다. 여기서 정치적, 사회적, 안보적, 지리·환경적, 경제적 분야는 하부에 4~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표 값은 세계은행(World Bank), HIIK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한다.

위와 같은 정량화 모델은 폭넓은 환경변수 및 지표를 토대로 폭력적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을 수치화한 점에서 다양한 국제분쟁 사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틀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 틀을 그대로 국제 환경분쟁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환경 갈등을 종속변수로 정의하는 경우 모델을 구성하는 정량 지표들의 종류 및 적절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환경 갈등은 HIIK(2020)에서 정의한 정치적 갈등의 구성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나 폭력적인 사태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분쟁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경제적, 환경적, 인종적 요소 간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Scheffran(1989)은 군사 갈등 맥락에서 사용하는 SCX 모델을 국제 환경분쟁 상황에 적용하여 자연자원의 분배와 관련한 환경 갈등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의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최적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유용성(utility)을 나타내는 목적함수  $S$ 는 분쟁 과정  $X(t)$ 에 영향을 주는 actor들의 노력(efforts) 또는 일종의 비용  $C$ 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Scheffran, 1996).

Colvin 외(2015)는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ENRM: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주체로 정부, 이해관계자, 시민을 포함하였으며, 환경분쟁을 의사결정 주체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치·사회적인 요

소로 분쟁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갈등 조정 그래프모델(Kilgour et al., 1987)이 의사결정권자를 중심으로 분쟁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 간 의사결정권자의 상대적인 선호도로 전체 시스템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위에 서술한 고전적인 환경분쟁 모델은 공통적으로 의사결정자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오염물질 국경 이동과 관련된 환경분쟁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시대적 사회적 발생 배경이 다양한 환경분쟁에 공통적으로 개입하는 정량변수를 특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변수값 또는 분쟁 결과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30년간(1990~2020년)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 환경 갈등으로 꼽히는 미세먼지, 방사성 오염, 감염병 문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환경 갈등 유발자 오염물질(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을 환경 갈등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정의하고, '주요 사건'을 그러한 오염 이벤트 자체(예: 미세먼지 오염) 또는 오염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는 사건·사고·재해(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보았다. '동반 사건'은 주요 사건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사건 또는 주요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국내·외 여건을 뜻하며, 오염 발생에 추가적으로 결합된 국제·정치·경제·사회적 갈등 요소로 구성된다. 전체 환경 갈등의 수준은 '주요 사건'과 복수 개의 '동반 사건'의 결합의 결과로 나타나며, 주요 사건과 동반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럽의 GCRI 모델과 같이 각각의 사건들과 관련한 기사 건수의 선형결합을 전체 환경 갈등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대신에 특정 시점 이슈화된 '이벤트'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이벤트'는 주요 사건과 동반 사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환경 갈등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갈등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개념적으로 정의한 '이벤트'를 정량화에 적합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갈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국내 신문기사에 환경 갈등 이슈가 등장하는 건수를 사용하였고, 월 단위 분석 결과 급격하게 신문기사 건수가 증가하는 시기마다 '이



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기사 건수의 시계열 분석에서 국부 최댓값(local maxima)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유사한 종류의 이벤트는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사에 한 개 이상의 이벤트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벤트 간의 결합을 새로운 이벤트로 정의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한 국내 신문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신문기사 포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검색을 통하여 추출하였으며, 검색식은 "(중국 or 일본 or 동북아) and (오염물질) not (협력)"을 사용하였다.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방사성, 바이러스 각각을 사용하였고, 검색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이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54개 전체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사 통합분류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역에 해당하는 기사만 추출하였다. 기사 검색대상은 제목과 본문 전체이며, 검색어는 형태소 분석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적으로 정제된 기사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이벤트 시기에 발간된 기사 내용을 토대로 환경 갈등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이벤트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요 사건'과 '동반 사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추출하기 위하여 2차 정제를 하였다. 이렇게 정제된 결과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주요 키워드별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동북아 지역 국제 환경 갈등 수준을 정량화하는 것 자체보다 기사 건수로 정량화한 정보를 통하여 환경 갈등 이슈와 상호작용을 하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왔으며, 환경 갈등별로 두드러지는 패턴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 복합갈등의 구성요소로서 환경 갈등이 어떠한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과거 추세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 환경 갈등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예측을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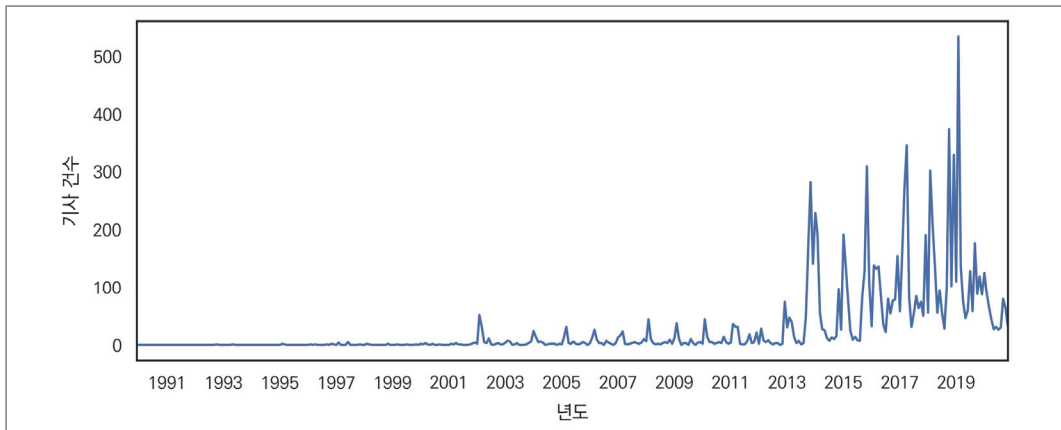
## 제2절

# 동북아 환경 갈등의 양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미세먼지

2019년 3월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하는 등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 결과(장경수·여준호, 2015)에 따르면 중국 실질 GDP 1% 증가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3.32%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등, 중국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 대기질 악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실질 GDP와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석탄 화력에 기반한 중국의 경제성장 현상에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트렌드 지속 및 변화 여부는 중국의 미래 에너지 인프라 전환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에너지 인프라 전환이 일부 이루어지더라도 2019년 7월 기준 중국 동부 지역 중심으로 중국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약 20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을 다하여 가동을 멈추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므로, 현재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4-1]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관련 월별 총 기사 건수 변화

[그림 4-1]은 빅카인즈에서 “(중국 or 일본 or 동북아) and (미세먼지) not (협력)”을 검색식으로 사용하여 추출한 총 10,173개 기사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사건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북아 미세먼지 관련 기사는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 다시 약간의 소강상태이다. 2002~2020년 사이에는 약 연간 1회 주기로 기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에서 국부 최댓값(local maxima)에 해당하는 시점(월 단위)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표 4-1]과 같이 관련 이벤트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요 사건’은 미세먼지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이슈는 2000년대까지 주로 황사로 인식되다가 2010년 초반에 스모그, 미세먼지, 황사가 혼재하는 개념으로 존재하였고, 2013년부터 연간 지속하는 현상으로서 미세먼지 개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황사와 스모그는 봄철 황사, 겨울철 스모그와 같이 계절적인 특수성과 결합되어 주기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혼재 및 용어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사건’은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단어 그대로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를 사용하였다.

동반 사건은 주요 사건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사건 또는 주요 사건의 기사를 촉진하는 국내외 여건을 뜻한다. 국부 최댓값이 발생한 시점의 기사 내용이 동북아 환경 갈등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4-1]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건강피해는 모든 주요 사건과 동반하여 나타났으나 [표 4-1]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표 4-1] 1990 ~ 2020년 기사화된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관련 이벤트

년	월	주요 사건	동반 사건
2002	3	황사	-
2004	2	황사	-
2005	4	황사	-
2006	4	황사	-
2007	4	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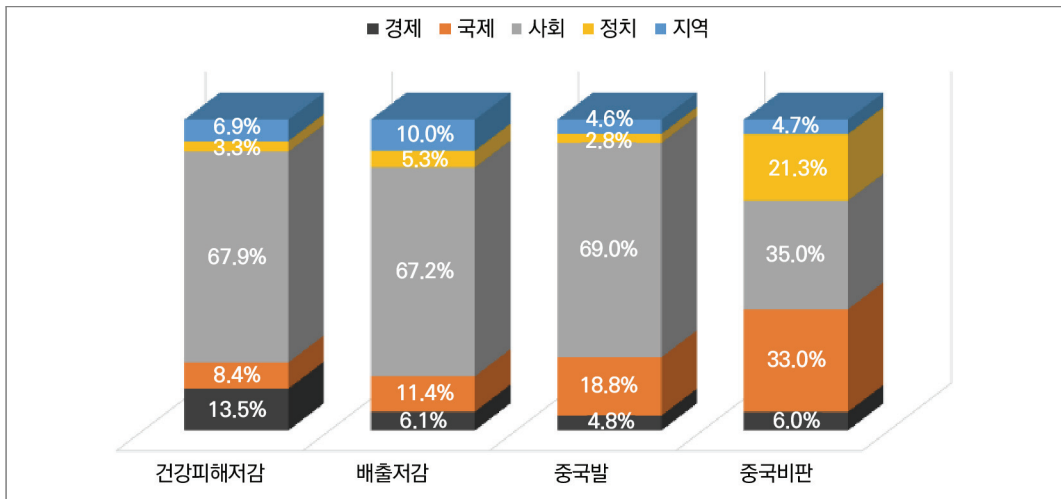
년	월	주요 사건	동반 사건
2008	3	황사	휴업, 휴교
2009	3	황사	황사 적응(마스크 사용 권장)
2010	3	황사	황사 적응(건강 관리)
2011	3	황사	황사 가전
2012	1	베이징 스모그	중국발 미세먼지
2012	3	황사	황사 가전
2013	1	베이징 스모그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
2013	12	미세먼지	중국발 스모그, 중국발 미세먼지, 미세먼지 가전
2014	2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
2015	2	황사 경보	미세먼지
2015	12	중국 스모그	미세먼지, 중국발 스모그
2016	3	황사	미세먼지
2017	1	미세먼지	중국발 스모그, 중국발 미세먼지
2017	5	미세먼지	황사, 중국발 스모그, 오존
2018	1	미세먼지	서울 미세먼지 대책, 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 화력발전 가동중단
2018	3	미세먼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 저감조치,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2018	11	미세먼지	중국 모래폭풍, 중국 스모그,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저감조치
2019	1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책임 부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2019	3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책임 부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2019	10	미세먼지	황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전체 기사 중 동북아 환경 갈등과 거리가 있는 기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 4-1]의 주요 사건과 동반 사건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재정제 하였다. 이때 국제 환경 갈등 요소 및 그와 관련된 국내 갈등 요소와 관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제하였으며, 정제 결과 총 4,185개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기사를 동북아 미세먼지 환경 갈등과 관련한 기사로 정의하고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검색 키워드〉

(황사 or 미세먼지 or 스모그) and ((건강 and (마스크 or 가전)) or (배출 and 저감) or 중국발 or ((중국 and 책임) or (중국 and 항의) or (중국 and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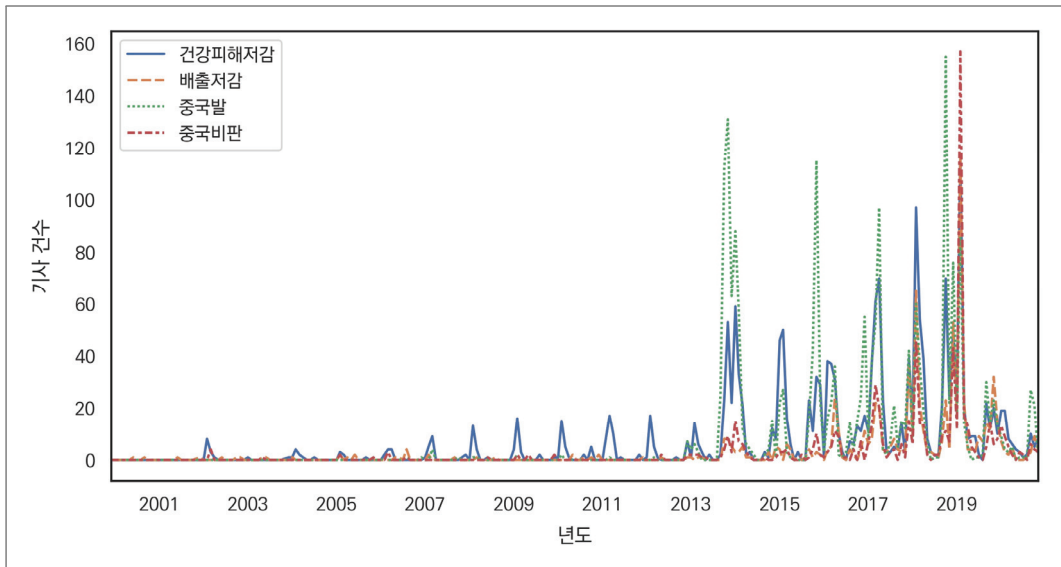
여기서 키워드에 ‘주요 사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포함하면서 (건강 and (마스크 or 가전)) 조건을 만족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해당 기사를 ‘건강피해 저감’ 관련 기사로 정의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배출 저감’ 관련 기사는 ‘주요 사건’ and (배출 and 저감) 조건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중국발’ 관련 기사는 ‘주요 사건’ and (중국발) 조건을 사용하였다. ‘중국 비판’ 관련 기사는 ‘주요 사건’ and ((중국 and 책임) or (중국 and 항의) or (중국 and 부인)) 조건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그림 4-2]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통합분류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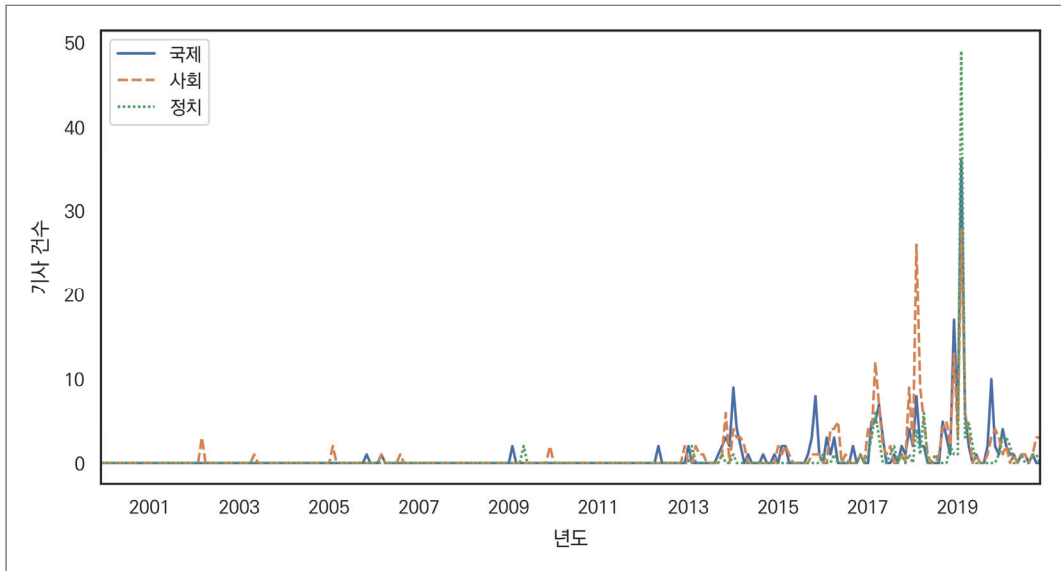
[그림 4-2]는 기사를 경제, 국제, 사회, 정치, 지역으로 분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분야가 ‘건강피해 저감’, ‘배출 저감’, ‘중국발’, ‘중국 비판’과 관련한 기사에 기여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국내 대응 대책에 해당하는 ‘건강피해 저감’ 또는 ‘배출 저감’ 관련 기사는 분야의 구성이 유사하며, 국외 이슈에 가까운 ‘중국발’ 또는 ‘중국 비판’ 관련 기사는 국제 분야 기사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해외(중국) 미세먼지 이슈를 다루는 ‘중국발’

기사를 사회 영역에서 주로 다룬 것과 중국 비판과 같은 국제관계 이슈에 국내정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비판 관련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을 향한 비난만큼 우리나라 정부와 행정부를 향한 비난을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 환경분쟁 요소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가 될 수 있다.



[그림 4-3] 미세먼지 관련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 변화

[그림 4-3]은 미세먼지가 주요 사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기사 건수가 모든 분야에 걸쳐 2014년부터 급증하였고, ‘건강피해 저감’은 2013년까지 미세먼지 관련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부터 ‘중국발’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였다. 특히 ‘중국 비판’ 관련 기사가 다른 키워드 관련 기사보다 2014~2019년에 걸쳐 변화의 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출 저감과 관련한 기사의 중요도 또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응 중심의 미세먼지 대응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배출감축 또는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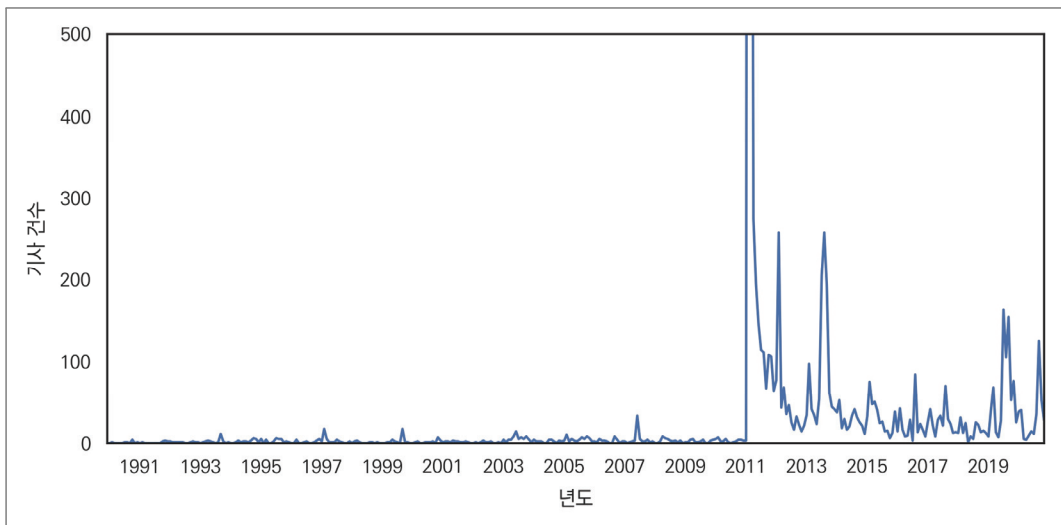
[그림 4-4] 중국 비판 관련 기사 분야별 건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미세먼지 관련 동북아 환경분쟁과 가장 관련이 깊은 ‘중국 비판’ 기사를 대상으로 국제, 사회, 정치 분야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4-4]와 같이 분석하였다. 경제, 지역 분야 기사의 경우 전체에 기여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며([그림 4-2] 참조), 전체 기간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 비판 관련 기사에 국내 정치 분야의 기사가 21.3%로 다른 키워드 관련 기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최근 2년간의 변화가 반영된 바가 크다. 특히 2019년도에는 정치 분야 기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찰 결과는 국제 환경분쟁 요소가 독립적인 이벤트로서 이를 상수로 인식 하던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 영역에 관련 사건이 동반하는 변수로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미래에는 국내 정치 요소와 국제환경 분쟁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정책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 2 방사성 물질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부터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사고 당시 일본발 방사성 물질의 직접적인 이동으로 방사능비와 해수오염 문제에서 시작하여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오염 해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의한 간접 노출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김기순, 2011),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한 오염수의 해양배출 강행 논란이 잇따르면서 해수를 통해 방사능이 국내에 유입이 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 타국발 방사성 물질의 피해사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이거나 그 밖에도 몇몇 사례들이 존재하며, 여기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다룬 기사 건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4-5]는 빅카인즈에서 “(중국 or 일본 or 동북아) and (방사성) not (협력)”을 검색식으로 사용하여 1차 정제된 총 10,347개 기사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방사성 관련 기사 건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로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 2010년까지는 수년에 한 번씩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여 기사화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슈화되지 않던 것에 반하여 2011년 이후에는 정도의 변화는 있으나 방사성 관련 이슈가 지속해서 기사화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4-5] 동북아 지역 방사성 물질 관련 월별 총 기사 건수 변화



[그림 4-5]에서 국부 최댓값(local maxima)에 해당하는 시점(월 단위)에는 그 전과 후에 이슈화되지 않은 특징적인 이벤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시점에 발행된 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표 4-2]와 같이 관련 이벤트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요 사건’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는 사건·사고·재해를 뜻하며, ‘동반 사건’은 주요 사건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주요 사건의 기사화를 촉진하는 국내·외 여건을 뜻한다. 국부 최댓값이 발생한 시점의 기사 내용이 동북아 환경 갈등과 무관하면 [표 4-2]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4-2] 1990 ~ 2020년 기사화된 동북아 지역 방사성 물질 관련 이벤트

년	월	주요 사건	동반 사건
1997	3	도카이 공장 폭발사고	-
1999	10	도카이무라 방사능 누출사고	-
2007	7	가시와자키시 지진 원전사고	-
2011	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국내 유입
2011	4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
2011	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세슘 쌀, 국내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2011	12	후쿠시마 원전사고	세슘 수산물, 세슘 분유, 오염수 유출
2012	3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수산물, 수입식품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 사고 1주년
2013	3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쿠시마 정전 냉각시스템 정지, 오염수 유출, 사고 2주년
2013	9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산물 오염, 오염수 유출
2015	3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 사고 4주년
2016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산물 오염, 원전 폐기물 문제, 사고 5주년
2016	7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 국내 지진
2016	9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쿠시마 댐 오염,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
2017	3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 사고 6주년
2017	9	후쿠시마 원전사고	북 6차 핵실험, 함몰지진

년	월	주요 사건	동반 사건
2019	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2019	8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일본 여행 금지
2019	1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방사성 폐기물 유실, 태풍 하기비스
2020	10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1990~201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사건은 동반 사건이 없이 사건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환경 피해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사화되었다.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발생 직후 방사성 물질이 공기와 해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문제가 기사화되었고, 최근까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농수산물의 국내 유입(수입) 문제와 오염수의 유출·방류 문제가 비교적 꾸준히 기사화되었다. 여기에 기사화를 촉진한 여건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n주년(10주년)이 있으며 그 시기에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가 기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밖에 국내 지진 발생에 따른 국내 원전 안전성 이슈화, 북한 핵실험이 동반 사건으로 등장하였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환경 갈등 양상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이전의 기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따라 피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의 오염 및 그로 인한 농수산물 안전성 문제로 인한 국내 피해 및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한일 국가 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반면, 이후에는 양국 국가의 개입 요소가 갈등에 더해진 양상으로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오염수 ‘유출’ 사건이 2019년부터 일본 국가의 의지가 더해져 ‘방류’ 사건으로 전환이 된 사례가 있다. 또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농수산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하여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고 한국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갈등이 가시화되었고, 환경 갈등이 정치·외교적 갈등 또는 경제적 갈등으로 전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최근의 환경 갈등 양상은 더 이상 환경요소만이만을 반영하는 독립적인 환경 갈등이 아닌 복합갈등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외부요인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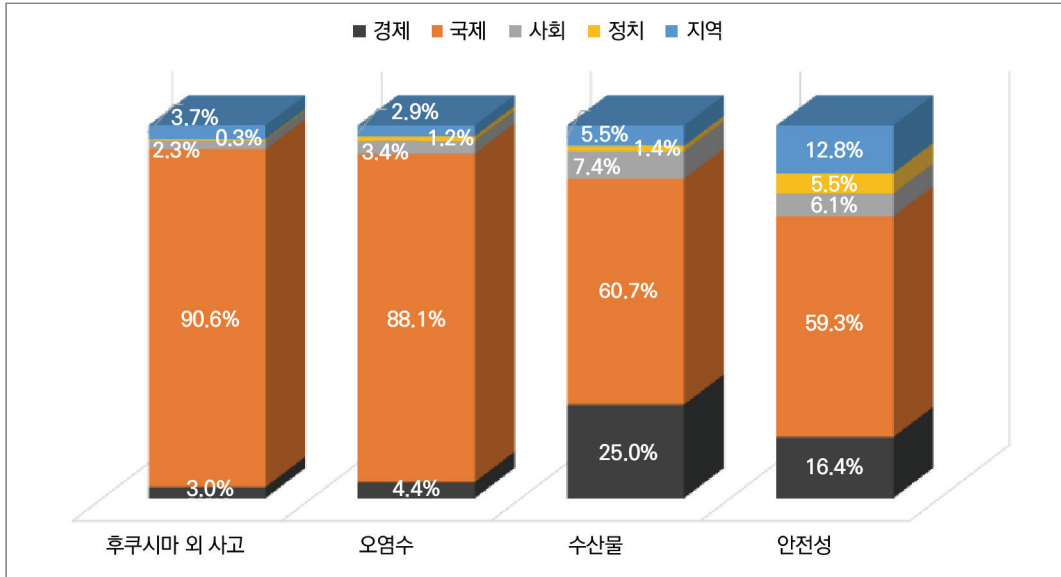
[그림 4-5]에서 보여주는 기사는 단순한 검색식으로 추출된 기사 전체를 포함하여 동북아 환경 갈등과 거리가 있는 기사들도 다수 포함하므로 [표 4-2]의 주요 사건과 동반 사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재정제하여 총 6,798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주요 사건인 도카이 공장 폭발사고, 도카이무라 방사능 누출사고, 가와사키 지진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포함하면서 국제 환경 갈등 요소 및 그와 관련된 국내 갈등 요소를 반영한 동반 사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제하였다.

〈검색 키워드〉

(도카이 or 도카이무라 or 가시와자키 or 후쿠시마)  
and (세슘 or 오염수 or 수산물 or 분유 or 식품 or 폐기물, 지진 or 핵실험 or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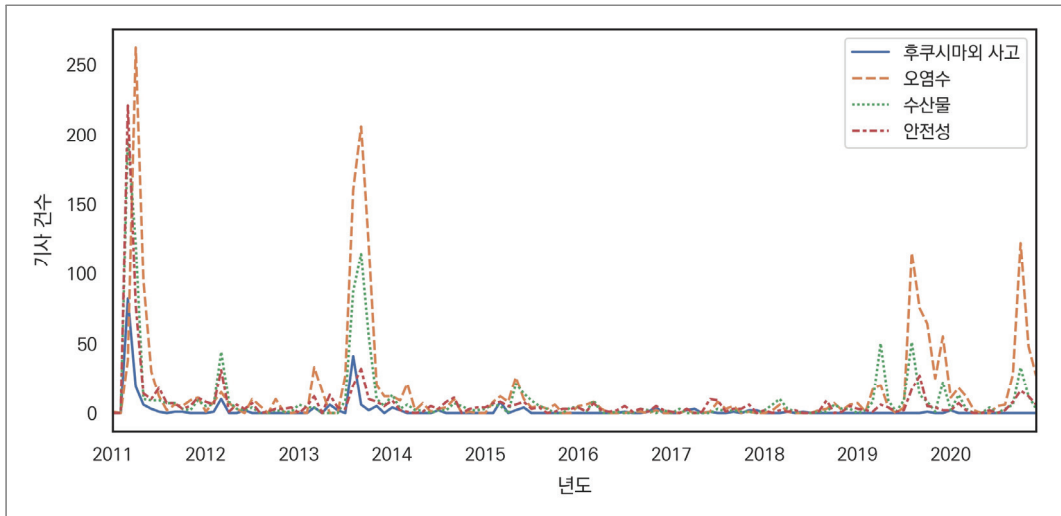
동반 사건에 해당하는 키워드 중 오염수, 수산물이 국가 간 갈등 요소를 포함하고, 안전성이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 요소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이슈라고 보고 해당 기사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동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주요 사건들에 해당하는 키워드 조합(도카이 or 도카이무라 or 가시와자키)을 사용하여 기사를 추출하였고, 이 기사들은 2011년 전·후의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인한 갈등 양상 비교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2차 정제한 기사를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 갈등과 관련한 기사로 정의하고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4-6]은 기사를 경제, 국제, 사회, 정치, 지역으로 분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분야가 후쿠시마 외 사고, 오염수,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기사에 기여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국내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기사는 국제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내 지역 이슈가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며, 경제와 정치 분야의 내용 기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수산물’은 최근 일본과의 WTO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와 경제 분야 이슈가 크게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후쿠시마 외 사고는 1997, 1999, 2007년도에 발생했던 방사능 사고와 관련한 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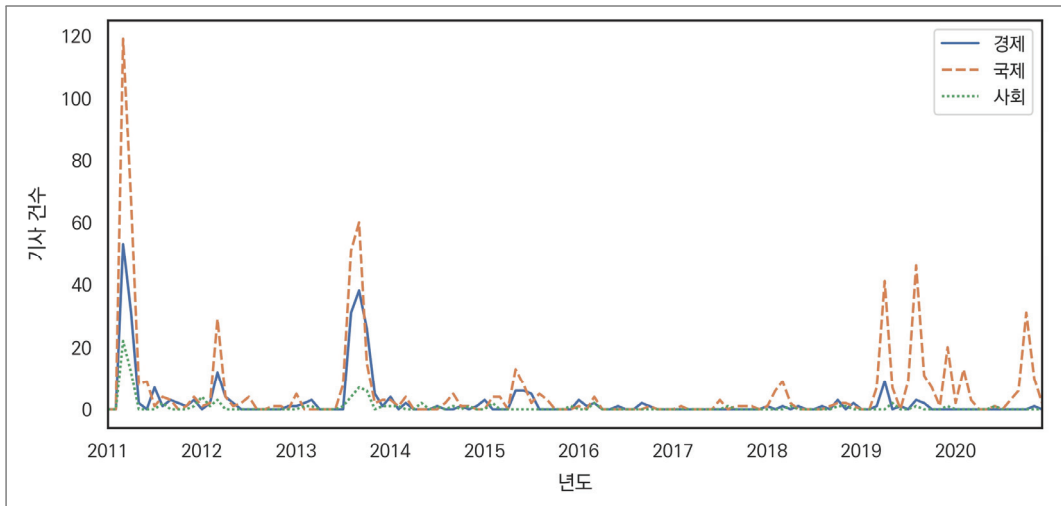
[그림 4-6] 동북아 지역 방사성 물질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통합분류별 기여도



[그림 4-7]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 변화

[그림 4-7]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고 직후에는 모든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 빈도가 높아졌으나 그 이후 점차

독립적으로 이슈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기사가 각기 다른 패턴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산물’ 이슈는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갈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내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기사는 나머지 세 개의 키워드가 이슈화될 때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8] 수산물 관련 기사 분야별 건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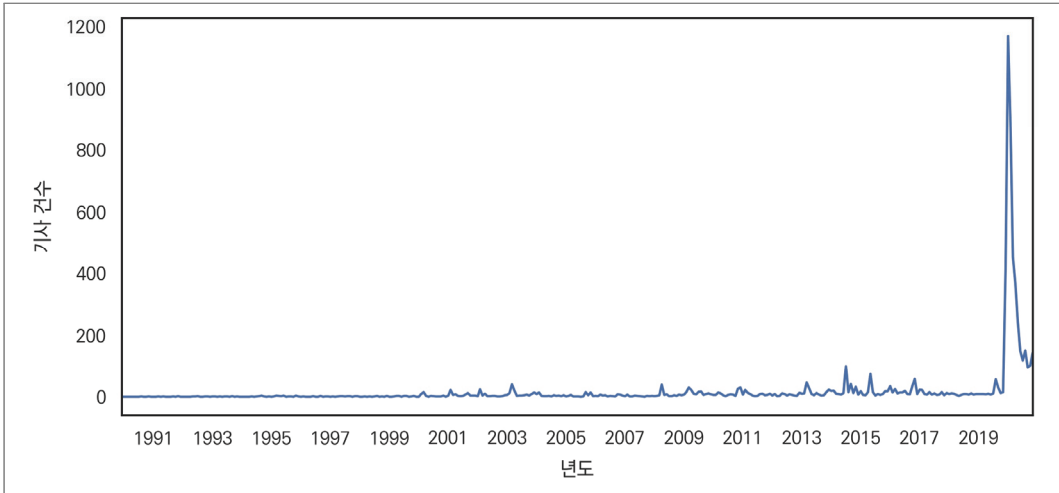
방사성 물질 관련 동북아 환경분쟁과 관련이 깊은 기사 중 국내 경제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수산물’ 기사를 대상으로 경제, 국제, 사회 분야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8]과 같이 분석하였다. 정치, 지역 분야 기사의 경우 전체에 기여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며(그림4-6 참조), 전체 기간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6]에서 ‘수산물’ 관련 기사에 경제 분야 기사가 25.0%로 다른 키워드 관련 기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2011~2015년)에 기사화된 내용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기사의 내용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관한 대중의 우려 및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2015년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함에 따라 수산물 이슈는 국제 분야로 전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경제 이슈가 국제 환경분쟁 요소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관련 국제 환경분쟁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독립적인 이벤트가 아닌 국내 경제 요소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이벤트로 전개되고 있다.

### 3 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환경 갈등의 원인은 인수공통 감염병이자 인간 간 감염이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 감염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어 동북아 환경분쟁으로 국한할 수는 없으나, 전염병의 진원지가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그 원인으로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국가 간의 갈등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동북아 환경 갈등 이슈에 포함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중국발 감염병이다. 이 병에 감염된 돼지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발 신종 돼지독감과 흑사병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은 미래 환경 갈등의 중요한 이벤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감염병의 확산을 촉진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른 탈 국제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 갈등이 국제관계에서의 갈등과 결합이 되는 복합갈등의 일례가 되었다.

아래 [그림 4-9]은 빅카인즈에서 “(중국 or 일본 or 동북아) and (바이러스) not (협력)”을 검색식으로 사용하여 추출된 총 6,758개 기사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방사성과 관련한 기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기사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하여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이벤트(국부 최땃값 출현 시기의 주요 사건) 발생 이후에 관련 동반 사건들로 인한 기사화 경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주요 사건의 파급효과와 지속 기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사태가 수습되었던 감염병 이벤트는 동반되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된 갈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4-9]에서 국부 최땃값에 발행된 기사 내용을 확인하여 [표 4-3]과 같이 관련 이벤트를 정리하였다.



[그림 4-9] 동북아 지역 바이러스 관련 월별 총 기사 건수 변화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사례 이전까지는 중국 사스, 유럽의 살인 독감을 제외하고 모두 동물 감염병 사례에 국한되어있었으며, 일부 감염병은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관련 기사가 존재하나 주류를 이루지 못하였다. 2003~2016년 사이 발생한 감염병 사례에서 국내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의 위험이 없으면 동반 사건 없이 단기간의 이슈로 끝났으나, 그 반대는 국내 방역체계 이슈, 외국인 입국, 국내 경제 파급효과 등의 동반 사건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갈등 요소는 크게 2000년대 초와 2019년부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2000년대 초기에 발생한 구제역과 사스는 봄철 중국 발 황사 이벤트와 겹치면서 황사를 매개로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사 내용은 중국을 향한 비난이나 국가 간 갈등의 요소를 담고 있다기보다 가능성에 대한 사실 및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한 성격에 더 가깝다. 반면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2020년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유입경로에 관한 사실 전달 차원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과 같은 국내 정치 이슈로 다소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는 중국인 입국 금지나 인종차별처럼 반세계화적이거나 분쟁적인 요인들과 함께 백신 확보와 같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이슈도 동반 사건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4-3] 1990 ~ 2020년 기사화된 동북아 지역 바이러스 감염 관련 이벤트

년	월	주요 사건	동반 사건
2000	4	구제역	황사
2001	3	구제역	황사
2003	4	사스	황사
2003	12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 살인 독감	-
2004	3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
2005	10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
2008	5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
2009	4	돼지 인플루엔자(신종플루)	-
2010	4	구제역	-
2011	1	구제역	-
2013	4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
2014	1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
2014	8	에볼라바이러스	라이베리아 감염자 입국
2015	6	메르스	국내 방역체계 이슈, 코스피 하락
2016	2	지카 바이러스	-
2016	12	조류인플루엔자 <sup>a</sup>	살처분, 인체감염
2019	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방역체계 이슈, 북한서(접경지역) 유입
2020	2	코로나19	중국발 입국금지, 아시아 혐오(인종차별)
2020	12	코로나19	변종 코로나, 입국금지, 백신 접종

<sup>a</sup> 조류 독감, 조류인플루엔자, 시로 표기된 것을 모두 '조류인플루엔자'로 통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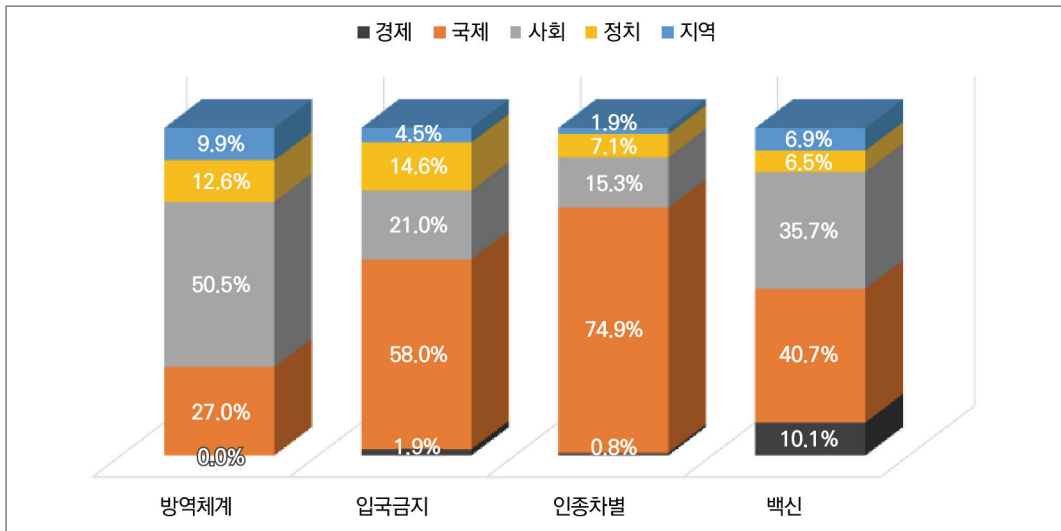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전체 기사 중 동북아 환경 갈등과 거리가 있는 기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 4-3]의 주요 사건과 동반 사건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재정제하였다. 이때 국제 환경 갈등 요소 및 그와 관련된 국내 갈등 요소와 관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제하였으며, 총 1,556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키워드〉

(구제역 or 사스 or 인플루엔자 or 독감 or 에볼라 or 지카 or ASF or 코로나) and(방역체계 or 살처분 or 인체감염 or (접경지역 or 입국금지) or (혐오 or 인종차별) or 변종 or 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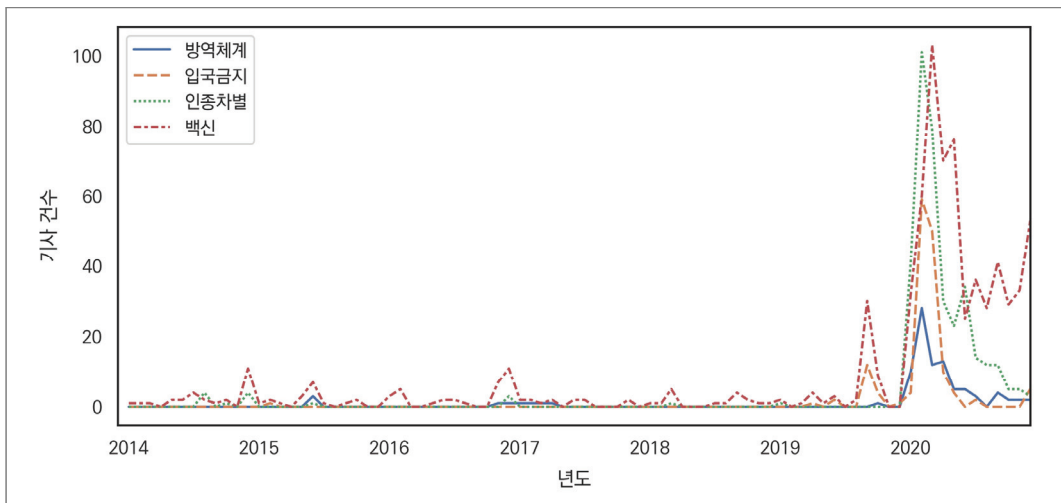
동반 사건 중 입국 금지, 접경지역 유입, 혐오, 인종차별 등이 국가 간 갈등 요소를 포함하고, 방역체계가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 요소를 포함하며, 백신은 국내·외 갈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대표적인 이슈라고 보고 해당 기사를 추출하였다. 여기서 키워드에 ‘주요 사건’에 해당하는 단어를 포함하면서 ‘방역체계’를 동시에 포함하는 기사를 ‘방역체계’ 관련 기사로 정의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입국금지’ 관련 기사는 “‘주요 사건’ and (접경지역 or 입국금지)” 조건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인종차별’ 관련 기사는 “‘주요 사건’ and (혐오 or 인종차별)” 조건을 사용하였다. ‘백신’ 관련 기사는 “‘주요 사건’ and (백신)” 조건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2차 정제된 기사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환경 갈등과 관련한 기사로 정의하고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입국금지는 검색 키워드 ‘접경지역’ 또는 ‘입국금지’를 포함한 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인종차별은 검색 키워드 ‘혐오’ 또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기사를 대상으로 함.

〔그림 4-10〕 동북아 지역 바이러스 감염 관련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의 통합분류별 기여도

[그림 4-10]은 기사를 경제, 국제, 사회, 정치, 지역으로 분야로 구분했을 때 주요 동반 사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에 기여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서 뽑은 주요 동반 사건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갈등 또는 협력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입국금지, 인종차별, 백신)와 국내 갈등 요소(방역체계)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구성하였다. ‘방역체계’에 포함된 기사는 상당 부분이 동물 감염병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특징 때문에 국내 지역 이슈가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입국금지’는 인종차별과 비교했을 때 국제 분야보다 정치·사회적 이슈로 분류된 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백신’은 동물 감염병, 인간 감염병 사건 모두와 관련한 키워드이며, 경제적 차원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이며,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조정과 관련한 내용만큼 백신 사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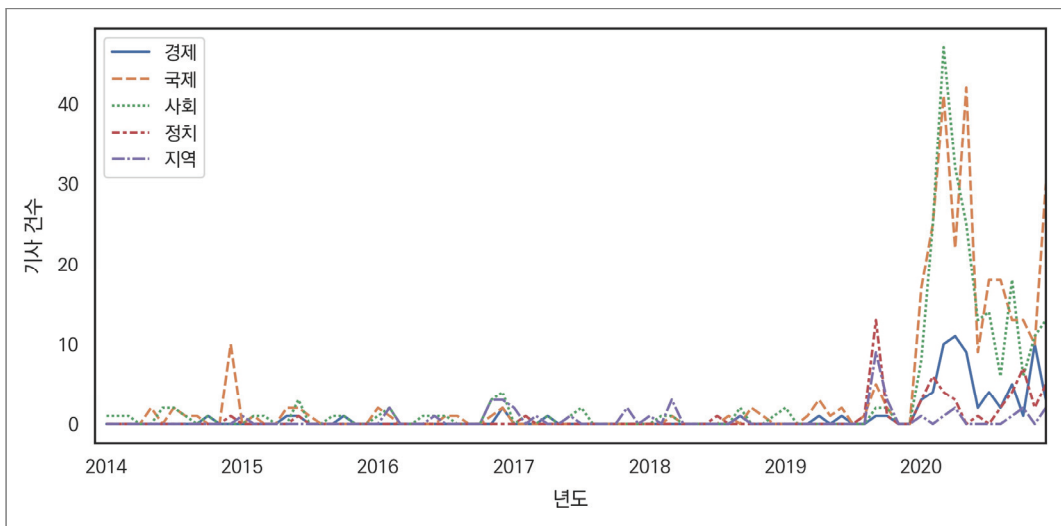


[그림 4-11] 2014 ~ 2020년 바이러스 감염 관련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 변화

[그림 4-11]은 주요 사건 발생과 공존하였던 동반 사건이 눈에 띄기 시작한 2014년부터 주요 키워드별 기사 건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백신’은 다양한 동물 전염병, 인간 전염병 창궐 시기에 함께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이며, 코로나19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개월의 변화추이는 다른 동반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갈등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소인 ‘입국금지’와 ‘인종차별’과 관련한 기사는 201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와의 갈등으로 펼쳐질 잠재적 요인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를 대상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백신’은 물량이 제한적일 때 국가 간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림 4-11]에서 백신 관련 기사가 최근 급증한 추세에 경제, 국제, 사회, 정치, 지역 분야 내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12]와 같이 분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동물 감염병 이벤트의 경우 지역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과 달리 2020년 코로나19 이벤트에서는 국제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그와 관련된 국내 사회 여론이 함께 이슈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0여 년간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치료약 또는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신종감염병 등장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백신 확보와 관련된 이슈는 미래에도 지속되거나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 확보, 보급과 관련한 국제 환경분쟁 또는 국제 환경협력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제 이슈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내 정치·경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2] 백신 관련 기사 분야별 건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 제3절

### 소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 환경 갈등 이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갈등의 종류 및 심각도 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하였다. 환경 갈등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립적 요소이지만 양국 간 긴장감을 조성하는 수준 차원에서 안보 갈등과 비교하면 중요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갈등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이벤트로 존재하기보다 국제, 정치, 경제, 사회영역 전반과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환경 갈등은 국제 경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국제 환경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을 높일 여지가 있다. 한편, 환경 갈등은 국가 간의 긴장감을 높이는 방향과 반대로 한·중·일 삼국의 공동선을 위하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공할 수 있어 현상적으로 나타난 국제 환경 갈등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1 동북아 환경 갈등의 양상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환경 갈등의 심각도가 최근 10여 년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와 동반되는 국내·외 연관 사건들의 영역이 다각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의 국경 이동에 따른 환경 갈등에서 모두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슈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유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갈등을 유발하는 세부 영역이 달라 국내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하는 경우와 국제적인 대응을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 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2차 갈등과 연결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유해 물질의 기원 국가(중국 또는 일본), 피해를 보는 지역 및 피해 대상의 범위와 물질의 유해 정도, 피해의 지속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북아 미세먼지 관련 기사는 2002~2020년 사이에는 약 연간 1회 주기로 기사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였는데, 2010년 초반까지는 봄철 황사가 주요 사건이었으며, 이후 중국발 스모그 또는 미세먼지에 의한 국내 미세먼지 이슈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경 갈등 중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갈등이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건수로 보았을 때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 다시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라 미세먼지 이슈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2019년까지의 이벤트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갈등 양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 비판 관련 기사가 전체 미세먼지 환경 갈등 관련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부터 급증하여 2019년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는 2016년까지 국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2017년부터 국내 정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2019년도에는 정치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사성 관련 기사는 주로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사고당 하나씩 단발성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과 전혀 다른 양상의 환경 갈등 이슈를 만들어 냈는데, 사고 발생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기사가 작성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수산물 관련 기사에서 한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사건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양상은 환경 갈등이 무역 부문에서 경제 분야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9년 이전까지 바이러스 감염 관련 기사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입된 동물 감염병 이벤트를 다뤘으며 동반 사건 없이 단기간의 이슈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북한과의 접경지역과 중국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정보로 다뤄졌으며 특히 코로나19는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반세계화적 형태로 변지는 양상을 보였다. 동시에 국내 유입을 적절히 막지 못한 국내 방역 체계에 대한 비판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의 비중이 여타 동반 사건 기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신과 관련한 이슈는 2020년 급증하였고 국제와 사회 분야의 기사가 기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백신 개발, 확보, 보급과 관련한 국제적인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양상을 보인다.

## 2 미래의 동북아 환경 갈등 예측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미세먼지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하는 등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세먼지의 유입원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에도 국내 정치 분야의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중국 비판 관련 기사에서 정치 분야 기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치 이슈는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이외의 문제들에 대한 여론 집중도가 바로 하락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미세먼지는 정치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꾸준히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요소로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때 국내 정치 요소와 국제 환경분쟁과의 상호작용이 점차 중요한 정책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진, 해일 등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해안에 있는 시설의 파괴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중국에서 2019년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가 58개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마주하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방사능 유출 사고는 사고 당시 이동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사고지역의 토양과 물 오염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WTO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방사능 관련 국제환경분쟁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독립적인 이벤트가 아닌 국내 경제 요소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이벤트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방사성 물질 오염 위험이 있는 제품(농수산물 포함) 수출입 거래가 있는 어느 국가와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일본과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할 때를 대비한 대응 전략 또는 예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신종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5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이 동물에서 유래해서 사람 간에 감염이 지속되는 전염병은 과거의 전염병과 다른 수준으로 인간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20여 년간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치료약이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신종감염병 등장이 코로나19 이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신 확보와 관련된 이슈는 미래에도 지속되고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 확보, 보급과 관련한 국제 환경분쟁 또는 국제 환경협력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매개로 국가 간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반세계화 움직임이 촉진될 수 있으며 코로나 19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출신의 이방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 3 환경 갈등 해결 전략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재난에 따라 한·중·일 해안에 위치한 산업시설 파괴 및 유해 물질이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신종감염병 문제 또한 미래에 빈번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동북아 환경오염에 관한 공동의 대응 전략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 환경 갈등이 국가 간의 긴장감을 높이는 방향에서만 분석하였으나 한·중·일과 같은 인접국의 환경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에 삼국의 공동선을 위하여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존재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국경 이동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만 가해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해국이 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이 일레이며 이 밖에 다양한 다자협력 채널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 협력은 황사, 산성비 문제 등 국외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에 따른 국내 영향을 인식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이상만, 2018). 1992년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1993년 동북아 환경협력(NEASPEC), 1999년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TEMM)가 대표적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에 대응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결정 사건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중재 기능이 등장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 및 확보 사례에서도 과학기술 개발, 백신 생산 등의 과정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감염병 기원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는 등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다양한 방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호혜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환경협력도 각각의 사안에서 가해국과 피해국의 협조에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협력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에서 중국의 태도와 방사성 물질 유출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체의 개입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현실에서 마주할 장벽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환경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한계이다. 향후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응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참여국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당사국의 지역적인 범위를 동북아 지역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권역으로 넓히거나 협력 내용의 범위를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편이 다양한 이해당사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동북아 복합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 제5장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안보 관점, 무역 관점, 그리고 환경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간의 다양한 안보 갈등을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위협인식의 틀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중·일은 역사적인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등 상대적인 국력이 변화하면서 안보 갈등이 일어난다. 중국과 일본을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국력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 일본은 이제 중국보다 국력이 뒤처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듯 두 국가 간 과거사 문제로 인한 앙금이 남아있고, 영토와 관련해서도 다툼을 지속하였다.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도 긴장 상태에 놓이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면 한 국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국익의 측면에서 미국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현재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양국은 역사적 갈등 지속, 민족주의 팽배, 우경화 심화 등과 같은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주도로 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의 필요에 의한 관계 개선으로,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외교적인 문제로 촉발되는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도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각국이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무역분쟁이 자국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세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자국의 산업과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보복 조치가 재현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경제, 또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

다. 꾸준히 거론되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의 완화,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선 다변화 등이 중장기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 및 기술 의존도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방사능 관련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환경 관련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과 같이 인간의 행위에서 유래할 수도 있고, 기후재난에 따른 산업시설 파괴로 유해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갈등, 국내 정치적 갈등, 무역과 관련된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하여 해결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반대로 모든 국가가 환경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으므로 협력의 가능성 또한 공존한다. 공동으로 환경오염물질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호혜적인 목적에서 환경 협력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안에서 가해국과 피해국의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협력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일본의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된 사례가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따라서 경제와 무역 등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보(정치·외교) 갈등, 무역(경제) 갈등, 그리고 환경 갈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무역 갈등은 정치·외교적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환경 갈등은 3국의 지리적 인접성이 크게 작용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촉발한다. 4장에서 살펴본 미세먼지는 한국과 중국 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일차적으로는 환경문제이지만, 오염수의 처리를 놓고 외교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역시 일

차적으로는 환경(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감염병 사태가 급격히 확산하며 각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였고,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반세계화적 양상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갈등이 하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번져 나갈 경우, 갈등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복잡해져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 관련 갈등, 무역 관련 갈등, 그리고 환경 관련 갈등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갈등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은 아직 결음마 단계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다자 안보 협력체제가 아닌 양자 안보 체제의 지속, 리더십의 부재, 경제적 통합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북아 3국 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이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보 문제와 비안보 문제의 분리, 이미 아시아 차원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다자협력 레짐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문헌자료

- 강두용(2019), 「수출주도형 성장, 가속가능한가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산업경제이슈』, 62(0), 산업연구원.
- 고봉준(2013), 「독도·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대응」, 『한국정치연구』, 22(1), 한국정치연구소, pp. 189~213.
- 고상두(2011),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분쟁과 민족주의」, 『21세기정치학회보』, 21(1), 21세기정치학회, pp. 87~107.
- 권용현·이지상(2018), 「외교적 갈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47(1), 한국경영학회, pp. 67~94.
- 김기순(2011),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56(4), 대한국제법학회, pp. 45~83.
- 김완중(2019), 「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아시아연구』, 22(3), 한국아시아학회, pp. 1~45.
- 김재한(2005). 『동북아공동체』, 집문당.
- 김택연(2016), 「미중관계와 남중국해 분쟁」, 『아태연구』, 23(2),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pp. 41~75.
- 서창호(2001), 「중국의 환경오염과 한·중 환경협력」, 『한국동북아논총』, (18), 한국동북아학회, pp. 117~137.
- 손기섭(2007),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21세기정치학회보』, 17(3), 21세기정치학회, pp. 447-470.
- 손정욱(2019),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오름, pp. 47~97.
- 손현주(2020), 「두려움의 정치: 시진핑 권력 강화의 심리적 동인」, 『한국정치학회보』, 54(1), 한국정치학회, pp. 137~160.
- 신현수(2017), 「사드 이후 대중국 수출 동향과 시사점」, 『KIET 월간 산업경제』, (226), 산업연구원, pp. 78~87.
- 이기현(2018),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국제관계연구』, 23(2), 고려대학교부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pp. 41~65.
- 이면우(2020), 「한일 무역분쟁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및 과제」, 『정세와 정책』, (17), 세종연구소.
- 이문기(2014), 「중국 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과 국가 정체성」, 『국제정치논총』, 54(3), 한국국제정치학회, pp. 177~209.
- 이상만(2018),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정책 방안: EU 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동아법학(78)』,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pp. 119~151.
- 이성우.(2020), 「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계열 분석: 협력과 분쟁의 역학」, 『기본연구 2020-05』, 경기연구원.
- 이승주.(2018), 「아베노믹스의 정치경제: 정책적 차별성의 정치적 기원」, 『사회과학연구』, 25(4), 동국대학교부설 사회과학연구원, pp. 95~118.
- 이신화(2006a),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p. 5; pp. 63~115.
- 이신화(2006b),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의 이론과 실제」, 서진영, 이신화, 김장수 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오름, pp. 292~324.
- 이춘근(2016),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김앤김북스.
- 이재호·고일동·김상기(2010), 『동북아 분업구조하에서의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이태동·정혜운(2019), 「한중 대기 환경협력의 정치」, 『국제지역연구』, 23(2), 한국외국

- 어대학교 국제지역센터, pp. 61~86.
- 정성춘 외(2019),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구연 외(2018),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23(2), pp. 5~40.
- 정인교 외(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경엽(2019),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한국경제연구원.
- 한석희(2019), 「중국의 도전과 한·중관계」,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신아시아질서연구소, pp. 95~116.
- 하영선(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한용섭(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사.
- Acharya, A.(2003),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28(3), pp. 149-164.
- Afesorgbor, S. K.(2019),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How do threatened sanctions compare with imposed san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6, pp. 11-26.
- Aidt, T. S. and Gassebner, M.(2010), “Do autocratic states trade les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4(1), pp. 38-76.
- Akimoto, D.(2018), *The Abe Doctrine Japan's Proactive Pacifism and Security Strategy*, Palgrave Macmillan.
- Armitage, R. L. and Nye, J. S.(2012),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Ashenfelter, O., Ciccarella, S. and Shatz, H. J.(2007), *French wine and the US boycott of 2003: Does politics really affect commerce?(No. w13258)*,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rger, T.(2000), “Set for stability? Prospects for conflict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3), pp. 405-428.
- Berger, T.(2012), *War, guilt, and world politics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tts, R. K.(1993),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 pp. 34-77.
- Calder, K. E.(2004), “Security and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1), pp. 149-165.
- Calder K. E.(2006), “China and Japan’s simmering rivalry”, *Foreign Affairs*, 85(2), pp. 129-139.
- Cha, V.(2000),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 V. and Kang, D.(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ristensen, T. J.(1999),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pp. 23(4), 49-80.
- Colvin, R. M., Witt, G. B. and Lacey, J.(2015), “The social identity approach to understanding socio-political conflict in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Global Environmental Change*, 34, pp. 237-246.
- Davis, C. L. and Meunier, S.(2011),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pp. 628-646.
- De Groeve, T., Vernaccini, L. and Hachemer, P.(2014), *The global conflict risk index(GCRI): a quantitative model*,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Nr. JRC92293, doi, 10, p. 184.

- Doyle, M.(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4), pp.1151-1169.
- Heilmann, K.(2016), "Does political conflict hurt trade? Evidence from consumer boycot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9, pp. 179-191.
- HIK.(2020), *Conflict Barometer 2019*, Heidelberg: Heidelber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 Duffield J. S.(2003), "Asian-Pacific security instit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Ikenberry GJ and Mastanduno M(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43-270.
- Fravel, M. T.(2011), "China's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pp. 292-319.
- Friedberg, A. L.(1993),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18(3), pp. 5-33.
- Fuchs, A. and Klann, N. H.(2013), "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1(1), pp. 164-177.
- Fukuyama, F.(2005), "Re-envisioning Asia", *Foreign Affairs*, 84(1), pp. 75-87.
- Fukuyama, F.(2012),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The Patterns of History", *Journal of Democracy*, 23(1), pp. 14-26.
- Ganguly, S. and Thompson, W. R.(Eds.)(2011), *Asian rivalries: conflict, escalation, and limitations on two-level gam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ldsmith, B. E.(2007), "A liberal peace in Asia?", *Journal of Peace Research*, 44(1), pp. 5-27.
- Gries, P. H.(2004),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Univ of California Press.

Guiso, L., Sapienza, P. and Zingales, L.(2009), "Cultural biases in economic exchang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3), pp. 1095-1131.

He, Y.(2007), "History, Chinese nationalism and the emerging Sino-Japanese conflic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6(50), pp. 1-24.

Hemmer, C. and Katzenstein, P. J.(2002),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3), pp. 575-607.

Hughes, C. W.(2016), "Japan's 'resentful realism' and balancing China's ris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9(2), pp. 109-150.

Huth, P. K. and Allee, T. L.(2002),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th, P. K. and Allee T. L.(2002a),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Ikenberry, G. J. and Mastanduno, M.(Eds.)(200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Jang, S.-W. et al.(2012), "A Study on the Inflow and Season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Marine Debris in the Coastal Area of the West S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15(2), pp. 89-100.

John, A. and Klein, J.(2003), "The boycott puzzle: Consumer motivations for purchase sacrifice", *Management Science*, 49(9), pp. 1196-1209.

Kang, D.(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27(4), pp. 57-85.

Kilgour, D. M., Hipel, K. W. and Fang, L.(1987), "The graph model for conflicts", *Automatica*, 23(1), pp. 41-55.

- Kim, H. and Lee, J.(2020), “The Economic Costs of Diplomatic Conflict”, *BOK Working Paper*, No. 2020-25.
- Li, X. and Liu, A. Y.(2019), “Business as usual? Economic responses to political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9(2), pp. 213-236.
- Maoz, Z.(2009), “The effects of strategic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on international conflict across levels of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1), pp. 223-240.
- Matthews, E. A.(2003), “Japan’s new nationalism“, *Foreign Affairs*, 82(1), pp. 74-90.
- McClelland, Charles A.(1976),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WEIS) Codebook(ICPSR 5211)*,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nn Arbor.
- Mearsheimer, J. J.(2010),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4), pp. 381-396.
- Moon, C. I. and Suh, S. W.(2007), “Burdens of the past: Overcoming History,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Nationalism in Asia”, *Global Asia*, 2(1), pp. 32-48.
- Rozman, G. and Lee, S.-W.(2006), “Unraveling the Japan-South Korea ‘virtual alliance’: populism and historical revisionism in the face of conflicting regional strategies”, *Asian Survey*, 46(5), pp. 761-784.
- Pandya, S. S. and Venkatesan, R.(2016), “French roast: consumer response to international conflict evidence from supermarket scanner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8(1), pp. 42-56.
- Pollins, B. M.(1989a), “Conflict, cooperation, and commerce: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on bilateral trade flo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p. 737-761.

- Pollins, B. M.(1989b), "Does trade still follow the fla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 465-480.
- Russett, B. and Oneal, J.(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cheffran, J.(1989), "Strategic Defense, Disarmament and Stability", Chapter 11, *The Elements of the SCX Model*,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Marburg, Germany
- Scheffran, J.(1996), "Modelling environmental conflict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Models for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Nomos, pp. 201-220.
- Schrodt, Philip A.(2012), *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CAMEO) Event and Actor Codebook*, <http://data.gdeltproject.org/documentation/CAMEO.Manual.1.1b3.pdf>
- Wiegand, K. E.(2015), "The South Korean-Japanese security relationship and the Dokdo/Takeshima islets dispute", *The Pacific Review*, 28(3), pp. 347-366.
- Xinbo, W.(2008), *A forward-looking partner in a changing East Asia*, *Washington Quarterly*, 31(4), pp. 155-163.
- You, C. and Kim, W.(2016), "Explaining a Roller Coaster Change in ROK's Policy toward Japan: Morality/Threat Perception Nexus and the Kim Young-sam Government's Japan Policy", *Korea Observer*, 47(2), pp. 417-459.



## 2 웹사이트

경향신문, <http://khan.c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하반기 기자간담회(2019. 11. 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602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3. 16.),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60&pWise=nb4>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

문화방송(MBC), <https://imnews.imbc.com/news>

미국의 소리(VOA), <https://voakorea.com/>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계획, <https://missilethreat.csis.org/country/dprk/>

빅카인즈(BIGKinds), <https://www.bigkinds.or.kr/>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오마이뉴스, <https://ohmynews.com>

조선일보, <httpw://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s://news.joi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GDELT Project, <https://www.gdeltproject.org/>

Global Coal Plant Tracker(July 2019), <https://endcoal.org/global-coal-plant-tracker/summary-statistics>, (검색일: 2019. 11. 19.)



# Abstract

---



## International disput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tension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over many issues. In this study, we analyze various forms of disputes among these countrie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 political tensions, trade disputes, and environmental conflicts in this region, and try to figure out how they interact with one another to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Firstly, political tensions are analyzed mainly using "threat perception" theory. It is shown that factors such as the rise of China,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past war crimes of Japan play important roles in escalating conflicts in the region. If US-China tension intensifies in the future, it can be expected to adversely affect relationship among these countries. Secondly, trade disputes are investigated using GDELT (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 and Korean news articles. Two trade disputes are analyzed, including one that occurre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and a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2019. The level of political tension is quantified using GDELT, and shown to be consistent with recent development of trade disputes, which originate from political tensions between countries. Lastly, environmental conflicts are analyzed using news articles. Three specific issues related to fine dust, radioactive material, and viruses are investigated. Main events and related event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number of articles, and then examined qualitatively. It is shown that the focus of the news articles on each issue changes over time, implying that environmental issues in the region can often evolve into international, domestic, or economic issues.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http://www.nafi.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23-6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